기 사

보도와 평론

-공정성과 형평성 잃은 보도

▲ 2010 - 1158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0년 7월 20일자 A5면 「7 · 28 재보궐선거 D-8/강원 원주/"거센 야당바람 잠재운다"/"네번째 도전 반드시 성공"」 제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원도 원주에는 6 · 2 지방선거 당시 '야당 바람'이 크게 불었다. 이계진 한나라당 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까지 민주당 몫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열기를 7월 28일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47세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를 내세워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여야 후보 모두 접전으로 예상한다.

이인섭 한나라당 후보는 19일 새벽 5시 30분부터 무실동에 위치한 배부른 산을 올라 아침 운동을 하는 시민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사람이 누웠을 때 배가 부른 모습을 띤 이 산의 형상처럼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기 정착과 명품도시 원주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일꾼론'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최연소 원주시의원(31세)과 5~7대 강원도의원 등 16년간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오로지 정책 대결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명륜동에 위치한 모범운전자회와 KT 원주 지부

를 잇달아 방문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호 씨(37)는 "정부와 여당의 인기가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원주를 잘 아는 사람을 뽑겠다"며 이 후보에게 한 표를 다짐했다.

박우순 민주당 후보는 강렬한 햇빛 탓에 화장을 한 듯 진한 선크림을 바른 채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박 후보는 오전 6시 30분부터 새벽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펼친 후 단계동 4거리로 옮겨 '1인 피켓' 유세를 선보였다. 북적대는 자원봉사자들과 유세차량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박 후보가 홀로 '기호 2번 박우순'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출근길 인사에 나선 것. 이날 발표한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가량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박 후보는 이번이 네 번째 국회의원 도전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이계진 전 의원에게 30%포인트 차이로 참패했다. 박 후보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며 사수는 합격이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붙은 제가 이번에는 인간 승리의 표본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에게는 최근 직무정지 사태를 빚은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동정표까지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영업을 하는 이민기 씨(48)는 "일하러 뽑아 놓은 이 지사를 정부가 입맛대로 유권해석해 직무정지를 시켰다. 강원지사와 원주시장이 민주당 사람인만큼 의원도 민주당을 찍어야 원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7 · 28 재보궐 선거를 8일 앞두고 강원도 원주지역의 후보별 판세를 다룬 기획 보도이다.

이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이인섭 후보와 민주당 수속 박우순 후보, 무소속의 함종한 후보 등 3명이 출마해 치열한 3파전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경제는 한나라당의 이 후보와 민주당 박 후보 두 사람만 각각의 경력과 하루 선거운동 일정, 선거공약, 시민반응 위주로 자세하게 다루고 무소속

함 후보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보도가 있기 사흘 전에 실시한 여론 지지도 조사(7월 15일~17일, 강원도민 700명 대상, 강원일보 · GTB강원민방 공동 실시) 결과에 따르면 1위가 민주당 박 후보(38 · 8%), 2위 한나라당 이 후보(21 · 2%), 3위 무소속 함후보(17 ·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후보는 2위 한나라당 이 후보에 불과 4% 뒤지고 있었다.

매일경제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세 후보 중 함 후보만 기사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언론사가 선거보도에서 지켜야 할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객관성을 잃은 보도

▲ 2010 - 125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0년 11월 29일자 17면「"국민목숨 담보 훈련…왜 공포 키우나"/서해 한미 연합훈련 돌입…넷 세상도 초긴장/"대비도 없이 강력응징 운운 한심" 비난 빗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은 스타크래프트의 저글링이 아니다.'

28일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연평도는 물론 전국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의 포성 소리가 들려 주민대피령이 내

려졌다 취소됐다.

이날 아침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북한의 대응과 재도발 가능성을 질의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이번 훈련의 여파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연평도에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모두 연평도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이러는 가운데 적잖은 국민들은 이날부터 4일 동안 서해 격렬비열도 이남에서 펼쳐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전쟁 공포를 확산시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전쟁의 달인'이라는 군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벌어지지 않던 남북 간 교전이 군대도 안 간 대통령 시대에 툭하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며 "남북한의 정치적 경직이 이런 사태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흥분한 목소리로 '강력 응징'을 쏟아내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북한이 미쳤는지 알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미쳤다"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안락한 의자에 편히 앉아 큰소리치는 정치인들이 한심하다"고 쓴소리를 해댔다.

누리꾼은 또 "우리가 강하게 나오면 북한이 꼼짝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북한군은 '고양이 앞의 쥐'가 아니다"며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달아날 사람들이 전쟁 당사자인 전선의 장병들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기분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들을 생각하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마치 게임을 하듯 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긴장이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징후도 나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소식과 북한의 보복 발언이 나온 지난 26일 코스피지수는 연평도 포격 이후 최대 낙폭(25.88포인트 · 1.34%)을 기록하며 1901.80로 마감했다. 개인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4000억 원 가까이 팔아 치우는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일본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 여행 자제령을 발령해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으며, 혼다 등 일본 기업은 한국 출장을 아예 중단시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한국에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 5만 명의 대피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용시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우리나라를 찾은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을 언급하며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1월 28일부터 나흘 동안 서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 올라온 비판적 의견들과 더불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경제 · 사회적 부작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의 골자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마치 게임을 하듯 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편집자는 이에 맞춰 큰 제목을 「"국민목숨 담보 훈련… 왜 공포 키우나"」라고 달았다.

한미연합훈련에 즈음해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된 군사력을 보여주는 훈련"이라는 내용의 지지 의견과 "추가적 군사조치는 확전의 불씨가 될 뿐"이라고 비판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펼쳐졌고,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연평도 사태 당시 '우리 군이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론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11월 27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가 온 · 오프라인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지지 의견은 외면한 채 '한 누리꾼'의 목소리만을 통해 "남북간 교전이 군대도 안 간 대통령 시대에 툭하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북한이 미쳤는줄 알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미쳤다" "전쟁이 터

지면 가장 먼저 달아날 사람들이…" 등 자극적인 표현들을 섞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했다. 취재기자가 출처 및 아이디(ID)를 밝히지 않은 '한 누리꾼'의 의견은 모두 3문장으로 길게 기술됐고, 그 외에 다른 누리꾼의 글은 기사에는 없다.

취재기자는 그 대신 '국민들'을 주어로 삼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마치 게임을 하듯 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부가 한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사의 취지를 정리했다.

위 기사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실체가 불분명한 집합명사를 앞세워 전하거나 익명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또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전문 및 ②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2.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3.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주 문〉

경북매일 2011년 2월 23일자 1면 「이상득의원 정계 은퇴요구는 망발 · 인신공격/"박지원, 당신이나 물러나라"」 기사의 제목, 경북일보 2월 23일자 1면

「박지원 또 형님 험구」 기사의 제목, 每日新聞 2월 23일자 6면 「박지원, SD 〈이상득〉 물고 '노이즈 마케팅'」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매일 경북일보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매일)=『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정 국회의원을 겨냥해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구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행히도 실패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은 아픔을 참고 형님(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정계에서 은퇴시켜주기 바란다"며 "형님 역시, 동생인 대통령과 나라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용퇴하고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중략)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이 전부의장의 지역구인 포항과 울릉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 · 경북지역 정치권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정치공세로 정계은퇴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병석(포항 북)의원은 물론 강석호(영양 · 영덕 · 울진 · 봉화)의원,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등은 이날 즉각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나 은퇴하라"고 고함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병석 의원은 본회의 직후 "박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유신독재와 같다고 얘기하는 대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발이자 허무맹랑한 정치공세'라고 항의를 하면서 고함을 쳤다"면서 "유신체제에서 박 대표처럼 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언론자유가 있었나.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유신체제와 비교하나"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전 부의장 은퇴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택한 독립된 헌법기관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은퇴하라 말라고 할 수 있나"며 "있을 수 없는 망발을 쏟아놓은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후략)』

(경북일보)=『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2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포항남 · 울릉)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또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회의장에서 "발언을 중단 시켜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당신이나 은퇴하라"고 즉각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떻게 이명박 정부를 유신독재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망발이고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언하는 것은 넋두리에 불과하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유신체제가 있냐. 유신체제에서 어떻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후략)』

(每日新聞)=『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정계 은퇴를 요구, 한바탕 소란이 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중략)

박 원내대표가 이 전 부의장 공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예산국회 때도 경상북도의 예산을 두고 '형님 예산'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고, 대구경북과 울산이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나선 것도 '형님 벨트'라고 주장하면서 끈질기게 '형님 마케팅'을 구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까지 이 전 부의장을 물고 늘어진 것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중략)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형님만을 겨냥한 1차원적 연설이고, 형님만을 악용한 노이즈 마케팅이었을 뿐"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이고 동료 의원들의 출입도 막은 민주당이 반성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남의 탓만 늘어 놓았다"고 비판할 정도였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의 적시 기사들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의 형인 포항 출신 이상득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실과 이에 대한 경북 포항 출신 의원 및 지역 관계자 등의 반응을 다룬 기사들이다.

기사들은 내용 중의 박 원내대표에 대한 반감어린 반응에 들어 있는 〈망발〉 〈인신공격〉 〈험구〉 〈'노이즈마케팅'〉 등의 표현을 제목이나 소제목에서 큰따옴표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객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들은 편집자 스스로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서 일탈해 보도 대상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편집행태는 사실보도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를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항(사실과 의견의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1.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특정 정치인 홍보

▲ 2010 - 1090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기일보 발행인 이 현 락

〈주 문〉

경기일보 2010년 4월 13일자 3면 「택시기사 김문수 '어디로 모실까요?'/에세이집 출간… 운전석에서 본 도민 모습 담아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체험 도지사로 불린 김문수 경기지사가 에세이집 '어디로 모실까요?-나는 경기도 택시운전사'를 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필기시험과 신규자 연수, 정밀검사를 거쳐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한 김 지사가 이듬해 설 다음날인 2009년 1월27일 수원에서 첫 운전대를 잡은 뒤 18차례의 택시운전을 하면서 겪은 일과 감정 등을 적은 글이 담겨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택시체험이 1~2회에 그칠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달리 지난 3일까지 광주시 마지막 택시까지 명절이나 토 · 일요일을 이용, 도내 18개 시 · 군에서 택시운전을 했으며 달린 거리만 26개 시 · 군 2천368km에 달한다.

모두 6부로 구성된 에세이집은 김 지사가 이 기간 동안 체험 후 매일매일 승객들과 나눈 대화, 동료 기사들의 애환, 운전석에서 본 경기도의 모습 등을 직접 메모했다.

특히 술에 취해 요금을 깎아 달라고 떼를 쓰는 손님과의 에피소드, 18차례의 운전 중 네 번이나 사납금을 못 채워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었던 경험, '정치적 쇼'라는 비난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소개한 대목이 눈에 띈다.

김 지사는 "택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쇼가 아니며 분명히 필요한 쇼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택시운전 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8차례 직접 택시영업을 하면서 겪은 일들과 심경을 다룬 책을 출간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현직 도지사가 직접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해 운전기사로 현장을 뛴 경험을 책으로 냈다는 사실은 뉴스거리이기는 하나 당사자가 곧 실시될 지방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이고, 책 출간이 출마와 때를 같이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홍보효과를 노린 행위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이를 당사자의 얼굴 사진이 담긴 책 표지사진까지 넣어 박스기사로 처리한 것은 특정 정치인의 홍보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①항(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1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주 문〉

경인일보 2010년 4월 30일자 2면 「김문수지사 '해결 삶의 현장'」 제하의 기

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내 기업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화성시 소재 일진전기를 찾아 공장 증설 허가, 공장내 도유지 매도, 좀도둑 퇴치용 CCTV 설치, 자전거 도로 확충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일진전기는 그동안 공장 증설을 위한 인근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증설 허가가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지사는 공장 생산라인부터 고층 타워까지 돌아본 뒤 전기전자용 케이블이 클린룸에서 생산되는 등 청결 업종임을 확인, 화성시에 허가를 지시했다.

또 공장 일부에 포함된 도유지로 인해 높은 월세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공정한 감정가로 매도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

이밖에 직원들의 건의로 공장 일대의 택지 골목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수원대학교 인근 택지와 공장 일대를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용인의 도루코 공장을 찾아 제조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 여성근로자 보육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매달 10여개 도내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매달 10여개의 도내 기업들을 찾아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듣고 해결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현직 도지사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되도록 조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기사는 김 지사의 이런 일상적인 업무 수행 행적을 마치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박스기사로 부각해 처리하였다. 또 리드 부분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내 기업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적었으나 김 지사가 왜 이런 현장방문에 나섰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사례로 든 기업은 언제 방문했는지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기사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단순한 업무 수행을 큰 실적인 것처럼 과장되게 기사화한 것은 곧 실시될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의 홍보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①항(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39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10년 5월 31일자 3면「정운천 후보 부인 최경선여사 글 '화제'/'쌍발통뉴스'에 편지글… 남편 출마에 인간적 고뇌 담아」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운천 도지사 후보 부인인 최경선 여사가 지난 25일 선거홍보사이트 '쌍발통뉴스'에 올린 편지 '전라북도 어머님께 올리는 글'이 도청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읽히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현재 이 편지는 쌍발통뉴스에서 400여 명이 조회를 했으며, 도청 홈페이지에서도 100명 이상 읽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 여사는 편지에서 “제 남편의 출마 제의를 받고 오랫동안 고민했으며,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니 저에게 천직인 교직을 그만두고 함께 내려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최 여사는 “교직을 그만두며, 사랑했던 제자들을 뒤로 한 채 교문을 나서며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며 “친정아버지께서 운명을 하시며 남긴 ‘너는 이제 전라도에 뼈를 묻어야 한다. 잘하거라’는 유지를 받들어, 남편의 고향인 전북도를 위해, 전북의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최 여사는 전라북도에 내려와 농촌, 재래시장, 요양원 등 전북 곳곳을 누비며 전북의 경제적 낙후와 도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왔다.

그는 취업을 걱정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북을 떠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전북의 어머님들의 자녀가 고향에서, 중앙무대로 나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의 부인이 선거홍보 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다.

기사가 전하는 정 후보 부인의 글 내용은 특별히 색다른 이야기를 담은 것도 아니고 공직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부인이 선거홍보 사이트에 실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보도 가치가 있는 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이를 작지 않은 크기의 박스기사로 다루고 같은 면의 다른 기사들과 차별되게 엷은 바탕색을 사용해 편집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는 특정후보 진영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고 편집된 기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①항(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자유

-홍보일색의 섹션 및 기획기사

▲ 2010 - 109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신 상 민
4.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5.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6.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7.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8.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승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3월 30일자 「조선경제 LIFE 섹션」, 4월 13일자 「조선경제 특집/근로자 직무 능력 JUMP」, 4월 16일자, 「조선경제 특집/Real Estate」 「조선일보 특집/한국 MBA 가는 길」 등 4개 섹션, 東亞日報 3월 31일자 「Health & Beauty/병원특집」, 4월 7일자 「CAR」 등 2개 섹션, 한국경제 3월 31일자 「Luxury Fashion」, 4월 15일자 「올 봄 음료시장 트렌드」 등 2개 섹션, 헤럴드경제 4월 8일자 「파워 코리아」, 4월 12일자 「2010 서울 SOC 건설」 등 2개 섹션, 중앙일보 4월 13일자 「Level Up/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4월 15일자 「국내 MBA 가는 길」 「행복한 결혼」 등 3개 섹션, 매일경제 4월 14일자 「MBA」 「SRI(사회책임투자)」 등 2개 섹션, 문화일보 4월 15일자 26~27면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기획특집, 서울경제 4월 16일자 「2010 대한민국

경영혁신 대상」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적시 신문들은 부동산이나 보석, 병원, 자동차, 지역행사, MBA, SOC 등 여러 가지 주제로 2면이나 8면 또는 12면짜리 섹션 또는 기획특집을 제작하면서 특정한 지역 · 상품 · 부동산 · 기업체 등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상품의 광고를 기획특집 면이나 섹션지면 전체에 걸쳐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기업 또는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4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종 렬
2. 국제신문 발행인 이 정 섭
3.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부산일보 2010년 5월 28일자 29~36면(제15회 바다의 날 '해양특집'/21세기 해양강국을 연다) 중 31면「한진중공업/쇄빙선 만든 기술 '조선 종가' 명성 잇는다」,「삼성중공업/지난달 수주잔량 창사 이래 첫 세계 1위」,「대우조선해양/풍력발전 등 신성장 미래 수익사업 박차」, 33면「한국해양대/대한민국에서 세계로… 해양지성의 두 산실」, 34면「부산항만공사/동북아 물류 허브 꿈꾸며 항만 변화 중심에 '우뚝'」, 6월 4일자 26~29면(골프장 특집) 중 27면「빼어난 접근성 양산CC 부산 · 울산서 20분이면 OK」, 29면「풍광 즐기며… 별 보며… 스타스콥CC서 라운딩 어때요?」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5월 31일자 29~36면

(블루오션 그린부산/국제신문 해양특집) 중 30면「북항재개발 진척 어디까지/외곽시설 축조 공정률 50%…유찰됐던 상부시설 내달 재공모」, 31면「한진중공업/한진重 수빅조선소 수주 대박… 올 들어 초대형선 19척」, 33면「비엔그룹의 도전/크루즈선으로 다시 신화 쓴다」, 35면「부산 수산업 생산량 56% 차지하는 대형 선망」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6월 9일자 15~22면(특집 부동산) 중 18면「BTL 분야 선두주자 동우 E&C」, 20면「대구테크노폴리스 상업용지 이달 중순 파격 분양」 제하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적시 기사들은 각각 해양특집, 골프장특집, 부동산특집 섹션에 게재된 기사들로 특정기업이나 대학 등을 장점만 부각하여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면이나 같은 섹션 안의 다른 면에 해당 기업 또는 대학의 광고를 함께 게재하였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특집이라는 명목 아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일보 해양특집 - 조선 2010년 5월 28일 금요일 제 20398 호 31

움츠린 어깨 펴고 '수주 대박' 세계가 좁다

한진중공업 4백엔선 만든 기술 '조선 종가' 명성 잇는다

삼성중공업 지난달 수주 잔량 창사 이래 첫 세계 1위

대우조선해양 풍력발전 등 신성장 미래 수익사업 박차

STX조선해양 상선에서 군함까지 종합조선그룹 안착

현대중공업 수주 급증 올 목표 배 달성 기대감

Blue Ocean, Green Korea!

제15회 바다의 날

도선가족이 함께합니다

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

〈부산일보 2010년 5월 28일자 31면〉

부산일보 골프장 특집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제 20404 호 27

빼어난 접근성 양산CC 부산·울산서 20분이면 OK

시공사 '한솔' 경영 참여 신뢰도 높여

개국 건너가는 4개 홀 색다른 재미

27개 홀 라이트 시설 여름지녁 라운딩

영남 최고 골프장 목표 이달 중 개장

■ 전문가 기고

"골프장 500개 시대 '눈앞'

대중화 된 현실에 맞게

정부정책 변화 유도해야"

〈부산일보 2010년 6월 4일자 27면〉

-약품, 특정의원 및 치료법 홍보

▲ 2010 - 1218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주 문〉

충청투데이 2010년 10월 14일자 11면 「지역 거점병원 넘어 중부권 명문병원 도약/하나병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해로 개원 12주년을 맞은 청주하나병원(원장 박중겸)이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넘어 중부권 최고의 명문 병원으로 발돋움을 시작했다.

하나병원은 최근 신관을 신축해 척추병원을 개원했다. 또 본관에 있던 건강증진센터와 치과를 신관으로 옮겨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종합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본관을 증축하고 진료과를 센터화해 병원 내 의료전문화를 집중화하는 일대 변화를 꾀했다.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인공신장실 등을 새롭게 꾸미고 소아내시경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병원 박중겸 원장은 "그동안 대부분 종합병원들은 진료과목을 늘리는데 주력해 백화점 형태의 나열방식 병원을 지향했지만 이제는 전문 진료과를 집중화하는 센터중심의 병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의사 개개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여러 명의 의사가 정보를 교환하며 진료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 척추병원 개원

최근 완공된 신관에는 하나병원이 내세우고 있는 척추병원이 들어섰다. 척

추병원에는 척추전문수술실과 척추전문 영상의학과 등이 자리 잡았다.

특히 PET CT와 MD CT, MRI, 현미경 수술기 등 첨단기기가 설치된 것이 눈에 띈다. PET CT는 암에 관한 A부터 Z까지를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의학 장비로 조기 암 진단과 악성종양 구별, 암의 전이 및 재발진단, 암치료 후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간질과 치매, 뇌혈관 등의 뇌질환과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에도 응용될 수 있는 등 영상의학에 관한 거의 전천후 성능을 가지고 있다.(중략)

◆ 심혈관 · 소화기센터, 인공신장실 개설

본관 2층(330m^2)에 들어선 심장혈관센터는 진료실과 심기능검사실, 심전도실, 수술실 등으로 구성됐다.

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혈관조영촬영기와 혈관내초음파, 대동맥펌프 등을 비롯해 심초음파, 24시간 생활심전도, 동맥경화검사기, 운동부하검사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췄다. 특히 심장관련 질환의 특성과 위급함을 감안해 심장내과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며 각종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검사에서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다.(중략)

◆ 첨단의료장비 대거 도입

하나병원은 제2의 도약을 선언하면서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만도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는데 100억 원 이상을 들였다. 전신암을 진단 할 수 있는 PET-CT와 64MD CT, 혈관조영촬영기, 위장조영장치, C-arm, 디지털 촬영기를 비롯해 MRI 등을 추가로 도입했다. 의료장비면에서는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중략)

◆ 또 하나의 자랑 장례식장

자매시설인 하나장례식장은 연면적 3277m^2에 7개의 분양소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지하 장례식장에서 지상 장례식장으로 과감하게 틀을 바꿨으며 장례절차도 유가족의 편의와 장례식의 예의를 중시함으로써 지역 장례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략)

지난해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아 최우수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지역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실천 병원

하나병원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다. 지역 기관단체와 기업체, 사회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종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추천할 경우 한 달에 한 명씩 무료진료와 수술 등을 해주고 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청주하나병원을 소개한 기사다. 기사는 머릿부분에서 "올해로 개원 12주년을 맞는 청주하나병원이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넘어 중부권 최고의 명문병원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고 기술한 것을 시작으로 이 병원의 갖가지 장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병원장의 발언 내용을 함께 전하고 있다.

특정 병원에 대한 이러한 기술들은 이 기사가 해당 병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병원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5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백 석 기
2. 인천신문 발행인 이 광 림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11년 1월 21일자 23면 「전문병원을 찾아서/여성질환 전문 제일병원 김재욱 원장/여성건강 지킴이 48년… 첨단 · 정성 갖춘 '여성암 치료 메카'」 제하의 기사, 인천신문 1월 27일자 20면 「현대유비스병원 새 도약 꿈

꾼다/7월 증축공사 완료… 대학병원 제외 지역 최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투데이 인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투데이)=『제일병원은 지난 1963년 국내 최초 여성전문병원으로 출범해 현재 여성질환 진료실적 및 출산분만 건수 전국 1위를 굳건히 지키며 대한민국 여성의학 발전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전문병원이다.

제일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철저히 여성건강에 포커스를 맞춰 반세기에 걸쳐 여성질환 치료와 연구에 매진해 오며 쌓아온 임상적 경험과 노하우다.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피부과, 안과 등 17개 모든 진료과를 임신, 출산, 불임, 여성암, 갱년기 질환까지 연령대별로 발생될 수 있는 여성 질환에 맞춰 토털의료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개원한 국내 최초의 여성암센터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갑상선암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특수 암만을 집중적으로 진단, 치료, 관리하는 전문센터로 암센터의 무한경쟁시대에 여성전문병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켰다.(후략)』

(인천신문)=『인천 남구 숭의로타리에 위치한 현대유비스병원은 경인지역 최대의 척추 · 관절 전문병원으로 꼽히고 있다.

12층 높이의 신관과 7층짜리 본관, 2개동이 이어져 있으며 300병상 규모다.(중략)

이 병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꿈꾸고 있다.

기존 '척추 · 관절분야 수술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어 진료과(치과, 안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검진센터 등)를 신설, 인천 최대의 전문센터화된 종합병원을 세운다는 목표다. 병원 증축이 완료되면 유비스병원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이 된다는 것이다. 병상수도 지금의 30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늘어나게 된다.(중략)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소문난 실력 있는 의료진 영입과 임상연구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최신식 진료시설과 호텔급 고객 휴식공간을 모두 갖출 계획이다.

병원 꼭대기에 대형 강당을 마련해 지역의 봉사단체 등에게 개방, '열린 병원' '친근한 병원'의 이미지를 피력할 방침이다.

또 소외된 이웃과 의료 사각지대를 돌며 기존의 '무료진료 활동'을 크게 확대하며, 무료 간병인제 도입 등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본문 중에 '국내 최초 여성전문병원' '국내 최초 여성암센터 개원' '여성질환 진료실적 전국 1위' '대한민국 대표 여성병원' '여성전문병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켰다' '토털의료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등 최상급의 표현과 판촉용 메시지를 남용한데다 원장의 이름을 중간제목보다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얼굴사진까지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였다.

인천신문 기사는 오는 7월 완공 목표로 증축공사 중인 척추 · 관절 전문 현대유비스병원을 소개하면서 본문 중에 '경인지역 최대의 척추 · 관절 전문병원'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 등 최상급의 표현들을 사용한데다 증축공사 완료 후에 도입할 계획인 각종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장황하게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특정 병원의 영리를 돕거나 특정 병원이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

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골프장 선전 기사

▲ 2010 - 110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신 상 민

〈주 문〉

매일경제 2010년 4월 12일자 B5면 「한폭의 수채화 그곳에서 날리는 샷/중국 난징 백마산장CC」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4월 13일자 B6면 「골프 · 스키장 · 호텔… 명품 리조트가 한 곳에/평창 알펜시아 6월 그랜드 오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중국 6대 고도(古都) 중 하나인 난징에 위치한 백마산장CC는 원시상태 그대로 보존된 코스 환경을 자랑한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라운드를 즐긴 후에는 산기슭에 위치한 별장에서의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24일에 열리는 골프대회에 참가하면 짜릿하고 긴장감 넘치는 라운드까지 덤으로 제공한다.(중략)

현재 전장 7075야드의 18홀 국제골프코스 규격을 갖추었고, 안후이성 '861' 중점 기획 계발 대상으로 선정돼 5년 이내에 63홀 고품격 골프장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초보자부터 상급 골퍼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로 구성돼 편안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갖도록 한다.(중략)

△상품정보 = 온누리여행사가 야마모토코리아와 함께 '고객사은 골프대회'

를 개최한다. 중국 난징 백마산장CC에서 4월 23일 이벤트를 하고 24일에 대회를 개최하며 18홀 라운드, 신페리오 · 샷건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외여행 상품권, 수제 골프백세트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된다. 2박3일 일정과 3박4일 일정이 있으며 요금은 49만9000원부터. 왕복항공권, 전 일정 숙박 · 식사, 그린피 포함.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4월 23일 출발. (02)2017-7065』

(한국경제)=『'2018 동계올림픽' 개최를 꿈꾸는 평창의 종합리조트 알펜시아가 오는 6월 그랜드 오픈한다. '홀리데이 인 알펜시아 평창 리조트'와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오션700, 콘서트홀 등이 추가 완공되는 것.(중략)

고품격 리조트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알펜시아는 국내 최고의 종합 리조트이자, 세계 무대에 내놔도 손색 없는 위용을 자랑하게 됐다.(중략)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평창 리조트'는 국내 최초로 리조트 단지 내 위치한 특1급 호텔(5성). 총 238실 규모다. 세계적 호텔그룹인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이 20년간 위탁 운영을 맡았다. 강원도 최초의 글로벌 호텔인 셈이다. 호텔 내 웰니스 센터에는 피트니스와 특급사우나는 물론 강원도의 유일한 전문 스파 서비스로 VIP 웰니스 프로그램 전문 강사진과 테라피스트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각종 테라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중국 난징에 있는 특정 골프장을 홍보성 색채가 짙은 제목과 문구를 곁들여 장점 위주로 크게 보도했다. 특히 기사 말미에는 특정 여행사가 이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일반인 대상 골프대회를 요금과 항공편, 전화번호를 곁들여 소개했다.

한국경제는 강원도 평창의 특정 리조트를 대서특필하면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내 최고" "강원도 최초" "최고의 실력을 갖춘"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며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0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大邱日報 발행인 이 태 열
2. 경북매일신문 발행인 최 윤 채

〈주 문〉

大邱日報 2010년 4월 1일자 9면「봄, 떼제베 이스트CC 혜택 '우수수'」제하의 기사, 경북매일신문 4월 2일자 15면「"봄바람 맞으며 그린 산책 나서볼까"/ 떼제베 이스트CC, 파격적 혜택으로 골퍼들 유혹」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大邱日報 경북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大邱日報)=『안동 떼제베 이스트컨트리클럽이 2010년 봄 시즌을 맞아 파격적인 회원 혜택을 부여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동시 일직면에 18홀 규모로 들어선 떼제베 이스트CC는 기존 영남권 골프장들의 고가 회원권에서나 볼 수 있는 부킹 위임을 떼제베 이스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전은 회원 등급에 따라 최소 월 4회에서 최고 14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그린피도 정회원(9천만원)의 경우 등록인이면 면제, VIP회원(1억8천만원)과 특별회원(5억원)의 경우 등록인, 지정인 모두 면제가 된다.

특별회원은 동반자까지 전원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어 명실상부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회원 및 VIP회원 동반자도 2인까지 준회원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위임권 역시 사용 범위 내에서 일시 사용도 가능하며, 충북 청원의 떼제베CC 이용 시에도 회원에 준하는 보너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중략)

9홀 증설이 완료되면 현재의 회원권으로 또 다른 골프장 한 곳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략)

떼제베 이스트CC 박성용 대표이사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미지에 걸맞은 테마형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해 안동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매일신문)=『남안동IC에서 지척의 거리에 위치한 떼제베 이스트컨트리클럽이 영남권 최고의 명문 골프장을 지향하며 본격적인 골프시즌을 맞아 파격적인 회원 혜택을 부여하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중략)

회원 등급에 따라 최소 월 4회에서 최고 14회까지 부여하고 있다. 또 그린피도 정회원이 등록인일 경우 면제되고, VIP회원, 특별회원은 등록인과 지정인 모두 면제된다.

특히 특별회원은 동반자까지 전원 회원대우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회원 및 VIP회원 동반자도 2인까지 준회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 충북 청원의 떼제베CC 이용 시 누리는 혜택은 보너스다.

최근 인근 부지에 9홀 증설 계획도 이미 설계에 들어갔으며 기본 설계가 완성되면 관련 인 · 허가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9홀 증설이 완료되면 현재의 회원권으로 또 다른 골프장 하나를 새로이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떼제베 이스트CC는 2007년 개장 후 동절기마다 꾸준히 코스 단장에 신규 투자를 계속해 왔다. 지난 겨울철에는 소나무, 잣나무 등 수목 200여주와 야생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가 식재해 골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중략)

또한 매주 월요일은 레이디스-데이로 정해 비회원 골퍼들에게 그린피 할인 행사를 통해 여성골퍼들로부터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특정 골프클럽이 봄철을 맞아 고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회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혜택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데다 9홀 증설계획과 골프클럽의 특징 등을 기술하고 골프클럽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게재하였다.

두 신문들이 하루 걸러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도한 이 기사들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울 의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최고 경영자 동행 취재

▲ 2010 - 1243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0년 11월 1일자 B1면「'이마트 PL상품' 매달 검증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동행취재/자체상표로 개발 '간장맛 치킨' 맛본 후 "맛있네요, 그런데 식어도 이 맛이 납니까"」제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맛있네요. 그런데 식어도 이 맛이 납니까.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산 치킨을 뜨거울 때 먹기는 힘들 텐데요…. 제대로 검증하려면 식었을 때 맛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자체브랜드(PL) 상품으로 개발한 간장맛 양념 치킨을 맛본 뒤 '칭찬'하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살짝 말을 돌렸다. 방금 요리해 따끈한 치킨의 상태가 오히려 흠이었다. 정 부회장은 "어떤 음식이든 갓 만들면 맛있는 것 아니냐"며 "실제로 고객이 맛보는 것과 같은 상태로 점검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검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날 이마트 본사에서는 '이마트 PL 컨벤션'이 열렸다. 이마트 임원들이 이 회사가 곧 출시할 PL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기획자(MD)의 설명을 직접 듣고 상품성을 점검하는 자리다. 컨벤션 회장 옆에는 즉석 식품 조리를 위한 주방도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행사다. 정 부회장과 최병렬 이마트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이 참석한다.

◆ 고객 눈높이에서 검증

기자는 정 부회장과 동행하며 컨벤션을 돌아봤다. 간장맛 양념 치킨은 정 부회장이 이날 처음 점검한 상품이다. 처음부터 '깐깐한' 지적이 나온 셈이다. 정 부회장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약속 시간보다 2시간쯤 뒤에 와야 제대로 볼 수 있겠다"고 농담을 던졌다. 장내에 잠시 웃음이 번졌지만 곧바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날 컨벤션에선 110여 개 품목이 소개됐다. 중소 협력업체와 이마트가 함께 기획한 제품이 70% 이상이었다. 기존 제품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포장을 바꿔 차별화한 제품도 같이 전시됐다.

정 부회장은 2시간 동안 자장면이나 어묵 같은 즉석 조리 식품을 일일이 맛보고, 생활용품을 직접 만져보며 경쟁사 제품이나 이전 제품과의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기자에게 음식을 건네며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는 "컨벤션에 나올 정도면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한 상품"이라며 "대부분 품질이 괜찮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유기농 음용 식초'를 맛본 정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맛이 없

다"며 담당자에게 제품 보완을 지시했다. 정 부회장은 "유기농 제품이라고 맛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라"며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가량 이마트 품질혁신팀의 '검증'을 거친 제품이지만 이렇게 최고경영자(CEO)의 까다로운 눈썰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제조 PL상품 확대"**

대기업과 함께 기획한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에 신경을 썼다. 예를 들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2개들이 포장을 새로 만들어 낱개로 2개 살 때 가격보다 100원 싸게 내놓기로 했다. 롯데제과의 '꼬깔콘'은 경쟁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15% 증량해 선보일 예정이다. 최성재 이마트 가공식품담당 상무는 "제조사는 가격을 낮추는 대신 진열 공간을 늘려 판매와 브랜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중략)

정 부회장은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문용식 나우콤 대표와 이마트 피자와 관련해 '트위터 설전'을 벌였다.

그는 이마트 피자를 포함해 최근 이마트의 PL상품 확대 추세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만드는 PL상품을 늘려나갈 생각이지만 무조건 확장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부회장은 "PL상품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 PL상품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신세계 그룹의 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인 정용진 부회장이 계열사인 이마트 본사에 들러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PL상품) 점검 행사를 치르는 자리에 기자가 동행해 작성한 것이다.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PL제품의 일반적인 제조 및 유통, 판매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보다는 기사내용과 제목 모두 정 부회장의 경영자적 안목

과 자질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어떤 경영자라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상적인 제품관리 활동을 기자가 동행 취재해 경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서특필한 것은 신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를 떨어트릴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섹시화보 · 신용카드 등 과대 소개

▲ 2010 - 127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주 문〉

스포츠조선 2010년 12월 2일자 27면「'19금 황금비율' 아찔한 유혹…/김시향 모바일 섹시 화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레이싱모델 겸 탤런트 김시향이 19금 섹시화보를 공개했다.

김시향은 1일 '라스트 피에스타'(Last fiesta)란 제목의 섹시 화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선보였다.

레이싱모델로 이미 상당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던 김시향은 연기자로 변신해 꾸준히 연기 생활을 이어와 그동안 화보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김시향은 이번 섹시화보로 오랜만에 황금비의 몸매를 공개했다.

특히 김시향의 이번 화보는 심의에서 19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아 더욱 남성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만큼 김시향이 과감한 노출

과 포즈로 섹시 컨셉트를 잘 표현해 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장미인애가 연예인 누드 화보집을 출간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에 이어 김시향이 연예인 화보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화보 관계자는 "몸매로 따지면 김시향을 따라 갈 수 있는 연예인은 몇 안될 것이다. 많은 스타들의 화보 서비스를 준비했지만 김시향의 몸매에 견줄만한 연예인은 거의 없었다. 특히 과감한 노출은 그녀의 몸매를 더욱 빛나게 했다. 기존 화보의 노출 수위는 상대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향의 누드에 가까운 섹시화보는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레이싱 모델 겸 탤런트인 김시향이 새로 선보인 '라스트 피에스타'라는 제목의 유료 모바일 화보를 소개하는 기사이다.

기사는 〈황금 비율의 몸매〉 〈19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아 남성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과감한 노출과 포즈로 섹시 컨셉트를 잘 표현해…〉 등 감각적인 문구와 더불어 큼지막한 김시향의 노출 사진을 곁들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비록 모바일 서비스 업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연예인이나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78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0년 12월 1일자 16면 「"100% 현미유로 튀긴 닭강정… 입맛 잡았죠"/'강정이 기가 막혀' 김홍엽 (주)푸디노 사장」 기사와 제목, 「"바꾸길 잘했죠, 내 추천으로 오픈한 집만 30개"/서대문구 연희점 곽태영 사장」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홍엽 사장 인터뷰〉=『"앞으로 2~3년 안에 치킨 시장은 닭강정이 주도할 것입니다."

'강정이 기가막혀' 브랜드로 치킨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푸디노 김홍엽(50) 사장의 거침없는 주장이다. "기존의 치킨 시장은 이제 포화상태입니다. 차별화 되지 않은 메뉴론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아이템이 바로 닭강정입니다." 닭강정은 프라이드 치킨의 바삭한 맛과 강정의 달콤한 맛을 접목시킨 새로운 메뉴이다. 유명한 '신포닭강정'처럼 시장통에서 개인적으로 만들어 판 사람은 많지만 프랜차이즈화 한 것은 김 사장이 최초다.(중략)

- 닭강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것도 있지만 역시 맛입니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 1년여간 고생을 했습니다.(중략)"

-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100% 현미유로 튀긴 것이 웰빙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는 마리 개념이 아닌 중량으로 팝니다.(중략)

- 앞으로의 목표는.

"분명히 우리가 선두주자이지만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업체를 따돌리고 선두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후략)』

〈곽태영 사장 인터뷰〉=『"매장 크기는 33㎡(10평)이지만 월 매출은 평균 3700~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닭강정이 기가 막혀' 서울 서대문구 연희점 곽태영(47) 사장의 말이다. 홀 매장이 아니라 배달만 하는데도 하루 100마리 가량 판다고 한다.

곽 사장은 원래 유명 브랜드의 치킨 체인점 두 곳을 7년 가까이 운영했다. 그렇지만 오븐 구이의 시장이 너무나 경쟁이 심해서 지난 해 4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닭강정으로 갈아탔다. 누구나 좋아하는 닭강정이라는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다. "바꾸기를 정말 잘했죠. 수익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서 오픈한 집이 30개나 되겠습니까."(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강정이 기가 막혀' 브랜드로 영업 중인 (주)푸디노라는 특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사장 및 영업점 사장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장점 일변도로 대서특필했다.

기사는 「"100% 현미유로 튀긴 닭강정… 입맛 잡았죠"」라는 큰 제목부터 광고 카피와 비슷했고, 인터뷰 내용도 홍보성 짙은 문구와 내용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혹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8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매일경제 2011년 2월 17일자 B7면 「폼나게 긁고 싶다면…체크카드가 있잖아요」 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2월 22일자 D7면 「기름 한번 넣었더니…백화점에서 쇼핑했다고…포인트가 쏟아지는 '착한 카드' 속속 등장」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와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매일경제)=『금융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는 대학생. 자신의 이름이 박혀 있는 카드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뿌듯한 생각이 들곤 한다. 아직 신용카드를 만들기는 이르지만,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면 신용카드 못잖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중략)

신한카드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패스-캠퍼스플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사와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대학생들이 각종 금융서비스와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된 상품이다.(중략)

현대카드는 대학생 특화 체크카드인 현대카드U를 내놓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실속형 체크카드로 은행계좌 한도만큼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U는 이용처에 따라 결제금액의 최고 1%까지 U포인트를 적립해주며 적립된 U포인트는 GS이숍, CJ몰, 예스24, 리브로 등 포인트뱅킹 제휴사의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로 바꿔서 이용할 수도 있다.(중략)

삼성카드는 대학생에게 유용한 체크카드로 캐시백 체크카드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사용금액의 최대 8%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별도 연회비 없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 중 최대 8%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쇼핑, 외식, 주유 중에서 본인의 소비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업종별 특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후략)』

(東亞日報)=『요즘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카드들은 겉으로는 고만고만해 보이지만 저마다 다양한 '포인트 혜택'을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벗어나 각종 공과금, 온라인 민원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포인트 시장이 커지면서 카드마다 포인트의 특성도 주목받고 있다. 카드사별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후하게 쌓아주는 '포인트 강자'들을 만나본다.

현대카드의 'M3'카드는 종전에 나온 'M'카드와 비교할 수 없는 포인트 혜택을 자랑한다. M3카드는 'M포인트' 적립률이 평균 4%로 M카드의 2배다.

특히 이 카드는 자동차를 살 때 힘을 발휘한다. '세이브-오토'제도를 활용하면 현대 · 기아차를 차종에 따라 최대 50만 원 저렴하게 산 뒤에 M3카드를 사용하며 쌓이는 포인트로 일정 기간에 걸쳐 차 구매비용을 댈 수 있다. 활용한 포인트 정도를 차 구입 뒤 36개월 안에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전국 가맹점에서 소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받게 돼 있 다.(중략)

삼성카드의 '삼성 빅앤빅 아멕스 카드'는 해외여행이 잦은 고객에게 포인트를 쏟아내는 카드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와 제휴해 결제 금액의 최고 5%까지 포인트를 준다. 특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포인트를 더 많이 준다.

연간 사용실적이 많을수록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 600만 원 미만이면 0.5%, 600만 · 1200만 원은 0.75%, 1200만 원 이상이면 1%다. 국내 면세점에서는 적립률이 5배 높아지기도 한다.(중략)

신한카드의 '하이포인트 나노'는 특정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대거 쏜다. 적립률은 최고 사용액의 5%다. 명동 청담동 강남

역 신사동 등 카드를 자주 긁는 주요 거리를 한 곳만 택해 해당 거리에서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받는다. 또 자기가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고르면 전월의 사용액에 따라 해당 가맹점에서 적립률을 최고 5%로 높여주기도 한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위 기사에서 대학 신입생들의 신분에 어울리는 카드라며 체크카드를 추천하고, 여러 카드사의 체크카드 특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폼나게 긁고 싶다면…체크카드가 있잖아요'라는 제목은 기사 분문에도 없는 내용이며 카드업체의 매출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홍보성 제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학비와 용돈을 타 쓰는 게 현실이고,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조달하는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카드를 이용해 소비생활을 활발하게 할 처지는 못 된다. 이렇듯 독립적인 경제주체가 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폼나게 긁고 싶다면…'이라는 식의 제목으로 소비를 촉구하는 것은 대학생 개인이나 건전한 사회기풍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東亞日報 역시 카드업체들의 판촉 홍보 전략에 부응해 기사 본문에도 없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다. 이는 카드업체의 매출신장을 돕기 위한 홍보성 제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메리트 위주 부동산 분양기사 등

▲ 2010 - 1108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주 문〉

중도일보 2010년 4월 1일자 8면 「도안 알짜배기 상가 '풍성'/9일께 32호 신규공급… 연말까지 당진 등 91호 분양」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올 연말까지 91호의 '알짜배기 상가'를 분양한다.

31일 LH에 따르면 오는 9일께 도안신도시 4블록상가 12호, 6블록상가 12호, 10블록상가 8호 등 모두 32호의 상가가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다.

도안지구는 4블록은 1216세대, 6블록은 854세대, 10블록은 1647세대의 대형단지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또 도안신도시는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로 모두 20개 블록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상당한 인기가 기대되는 곳이다.

도안신도시에 이어서 오는 5월에는 당진채운(549세대) 5호, 태안평천(531세대) 5호가 예정돼 있다.

이어서 오는 7월에는 홍성남장(659세대) 8호, 10월에는 대전석촌2(1025세대) 19호가 계획돼 있다.

도안신도시 12블록(1056세대) 11호, 대전목동(804세대) 8호, 서산대산(284세대) 3호 등은 오는 11월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LH의 단지내 상가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분양주체가 공기업이라는 높은 신뢰도, 소비층 확보 등 장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상가의 신청자격은 제한이 없고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

며 1인 입찰도 유효하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도안신도시 등에 상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리드 부분의 "…'알짜배기 상가'를 분양한다."를 비롯해 "도안지구는… 대형단지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도안신도시는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로 모두 20개 블록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상당한 인기가 기대되는 곳이다." 등에서 보듯이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도안지구에 분양되는 상가가 '알짜배기 상가'라고 단정하고, 도안지구의 인기가 기대되고,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적고 있다.

마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의 홍보문구를 연상케 하는 이러한 기술은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사실보도의 수준을 넘어 공기업이라고는 하나 특정 기업의 상가 분양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 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3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2. 大田日報 발행인 신 수 용
3.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4. 경기일보 발행인 이 현 락

〈주 문〉

경인일보 2010년 4월 30일자 8면「車 사라진 아파트 茶 욕심나는 풍경/부천 소사뉴타운 푸르지오 741가구 5월초 일반 분양」제하의 기사, 大田日報 5월 7일자 11면「분양가 최대 1억 9000만원 할인… 40층 높이 대전 최고층/유성 'GS자이' 샘플하우스 오픈」제하의 기사, 5월 14일자 14면「웅장하고 세련된 외관 · 파격적 혜택… 수요 · 투자자 '유혹'/'유성 GS자이' 주상복합아파트 주목」제하의 기사 외 1건, 중도일보 5월 10일자 11면「LH 선화 Humansia 센트럴뷰 특집/자연+건강+문화 '3박자 프리미엄'/아파트가 아트가 된다」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5월 13일자 9면「자연 그대로… 청계산 품에 안긴 '안식처'/판교 테라스 하우스 '월든 힐스' 이달부터 분양」제하의 기사 외 1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적시 기사들은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를 소개하면서 분양 안내문이나 광고 등에 담을 내용까지 전하는 등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또 기사에는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조감도를 함께 게재하였다.

이러한 기사 내용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검증 없이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大田日報 DAY BUY DAY 부동산 2010년 5월 7일 금요일 제18662호 11

분양가 최대 1억 9000만원 할인… 40층 높이 대전 최고층

유성 'GS자이' 샘플하우스 오픈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무도장·실버룸 등 편의시설

역세권 위치 투자가치 높아

국토·지역개발 심의기구 통합 운영

국토부,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일보 기 획 2010년 5월 13일 목요일 9

자연 그대로… 청계산 품에 안긴 '안식처'

■ 판교 테라스 하우스 '월든 힐스' 이달부터 분양

국제 공모로 디자인… 경사지 살린 자연적 건축 기법 도입

아랫층 지붕 마당처럼 사용… 단·복층 구조로 독립성 갖춰

세계적 건축가들 단지 설계

"집이 예술이네~"

〈경인일보 2010년 4월 30일자 9면〉

-새차 시승기

▲ 2011 - 1019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 문〉

머니투데이 2011년 1월 8일자 12면 「시승기/아우디 '신형 A8'/22단계 시트 조절…요트 탄 듯 편안한 주행」, 「시승기/폭스바겐 'CC 2.0 TDI'/3000cc급 성능에 중형차 최고 수준 연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우디 '신형 A8'〉=『"주행능력은 기대이상이었다. 가속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부드러우면서도 빠른 순발력으로 반응했다. 엔진의 힘과 가속력도 좋았지만, 변속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신형 A8을 주행해 본 첫 인상이다. 아우디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형 'A8'은 4163cc 4륜구동 콰트로 시스템을 장착, 371마력의 출력과 45.4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최고급 세단이다.(중략)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우디 'A8' 고유의 DNA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세부적인 세련됨이 돋보인다.(중략)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요트에 타고 있는듯 한 느낌의 대시보드 라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요트의 추력레버와 같은 형태인 신형 변속레버는 주행모드 선택에 사용하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중략)

새로 개발된 뉴 A8의 앞좌석은 비행기 일등석만큼이나 편안하다. 컴포트 시트는 22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외에 3단계 쿨링(Cooling) 기능도 제공한다.(후략)』

〈폭스바겐 'CC 2.0 TDI'〉=『(전략)…2011년형 모델부터 기존 4인승에서 5인승 차로 변신한 폭스바겐 'CC'는 좌석 하나 늘린 것만으로도 합격점을 줄만 하다. 디자인이나 성능, 연비는 이미 이전부터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다.(중략)

CC의 최대토크는 35.7kg.m로 배기량 3000cc급 가솔린차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또 노면의 상황과 주행상태에 따라 표준과 스포츠, 컴포트 3단계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폭스바겐차를 시승할 때마다 느끼지만 연비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수입차중 최고봉이다. 연료게이지 바늘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2000cc급 중형차로 리터당 16.2Km의 공인 연비도 높은 편이지만 고속도로 주행연비는 이보다 더 높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특정 외제차의 시승기로, 감성적인 제목에다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문제점 지적은 전혀 없이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은행 · 카드사의 새 상품

▲ 2010 - 118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9월 6일자 B7면 「귀성길서 신권 교환 · 최고 100만원 캐

시백…/은행 · 카드사 한가위 선물 펑~펑」 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9월 10일자 B9면 「'위험' 노출된 우리아이… "어린이보험 이젠 필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 朝鮮日報와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선물이나 차례상 등을 준비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지갑이 얇아지기 쉽다. 하지만 돈을 쓸 때 쓰더라도 꼼꼼히 살펴보면 절약할 수 있는 길은 있다. 특히 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들이 추석을 맞아 내놓은 이벤트를 잘 이용하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상품권이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쓰고 혜택 챙기세요

하나SK카드는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결제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증정(50만~100만원 한도)한다.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현대백화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최고 2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KB카드는 자사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국민은행 홈페이지와 ARS(1599-6660)를 통해 5만원 이상 카드 사용전표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총 2만명에게 이용금액의 10%, 최고 100만원 한도로 현금을 돌려준다. KB카드는 또 이달 말까지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롯데닷컴, AK몰, 디앤샵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이용 고객에게 지정된 행사기간 동안 할인쿠폰, 할인, 현금 캐시백 등을 통해 5~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롯데마트에서 오는 30일까지 5만원 이상 현대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현대오일뱅크 3000원 주유 할인권을 증정한다. 또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현대카드로 결제한 모든 고객에게 롯데마트 5000원 할인권과 교환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쿠폰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이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구입할 때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대별로 최대 100만원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준다. 삼성카드는 또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홈플러스에서, 9일부터 21일까지 롯데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각각 홈플러스 상품권과 롯데카드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한카드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신한 후불하이패스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최대 1만원까지 결제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하략)』

(東亞日報)=『"이제 2학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아이 어린이보험 한번 알아볼까?"

각종 질병부터 재해, 학교폭력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둘러싼 위험에 항상 고민이 많은 부모들. 이런 부모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바로 어린이보험이다.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교육비 마련도 도와줘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더 튼튼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 때문이다.

◆ 아이 건강과 미래 동시 보장

신한생명의 '아이사랑 보험'은 생명보험사 어린이보험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4월 현재 가입 건수가 무려 100만 건을 넘어섰다. 최고 30세까지이던 기존 보장기간을 80세까지로 늘려 가입 한 번으로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백혈병, 골수암 등에 1억 원을 보장한다. 등하굣길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보장을 강화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2억 원을 지급한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과 콜레라, 장티푸스 등 주요 법정 전염병도 보장하며 유괴나 납치 사고 때는 300만 원의 위로금을 준다.

ING생명의 '우리아이 꿈이 크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보장플랜이 기본이다. 여기에 안정적인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플랜, 성인이 된 후 결혼 등 독립을 위해 필요한 독립플랜이 추가된다. 교육플랜과 독립플랜을 선택한 뒤 부모가 숨지면 교육과 독립 자금을 지급한다.

동양생명은 15세부터 25세까지 가입 가능한 청소년 전용 특화상품 '수호천사 차세대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15세 남자가 보험 가입금액 1억 원으로 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9만1000원이다. 기존 '수호천사 VUL 종신보험'의 보험료 9만5000원보다 약 5% 저렴하다. 여기에 어린이보험 계약자 할인 3%와 고액 보험료 할인 3%를 추가로 받으면 보험료는 8만554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 각종 교육 관련 서비스는 '덤'

흥국화재는 위험 보장뿐 아니라 최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무료 영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플러스 사랑보험'을 내놓았다. 소아 백혈병 등 중대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으며 4세(생후 42개월) 미만의 가입 고객에게는 '더 플러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재능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는 통합 창의성 검사 프로그램으로 일대일 맞춤형 교육컨설팅기관인 '한국메사'와 제휴해 제공한다. 또 미국 내 교사들로부터 A+ 등급을 받은 영어교육 콘텐츠 '메사 영어애니메이션 창작동화' CD를 준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갖가지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면서 여러 금융회사들의 추석맞이 이벤트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 같은 금융사들의 이벤트는 사실 이익극대화를 위한 영업전략일 뿐이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기사내용보다 앞질러 '은행 · 카드사 한가위 선물 펑~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금융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금융사들의 영업전략에 보조를 맞추어 소비를 부추기는 홍보성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東亞日報는 요즘 어린이들이 질병, 재해, 학교폭력 등 여러 위험에 둘러싸

여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내놓은 어린이 보험 상품들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제목은 기사 내용에서 벗어나 "어린이 보험 이젠 필수"라고 달았다. 이는 기사의 내용과는 다른 과장된 표현으로서 독자들에게 어린이 보험상품을 누구나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독자들에게 어린이 보험상품을 구입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는 홍보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두 신문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반적 대학홍보

▲ 2011 - 1056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주 문〉

충북일보 2011년 2월 7일자 7면「'취업'은 충청대학의 DNA」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고사업 무더기 선정

충청대학은 각종 국고지원 사업에서 주변 경쟁대학으로부터 '싹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더기로 선정되며 대학의 힘을 보여 주었다.(중략)

3년 연속 교육역량 우수 대학

충청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2개 사업인 교육역량 우수대학과 대학대표브랜드사업에 모두 선정돼 국고 지원금 46억 6800만 원을 지원받았다.(중략)

학생 만족도 최우수 대학

지난 1983년 개교해 지난 27년간 4만 3000여 명의 산업인력을 배출한 충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 작금의 어려운 시기를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헤쳐 나가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북일보는 충청대학을 '3년 연속 교육역량 우수 대학' '학생 만족도 최우수 대학' 등 소제목과 본문에 최상급 표현을 남발하며 한 개 면 전체를 할애하여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였다.

기사 말미에는 '취업을 생각한다면 충청대학입니다' 제하의 돌출광고 형식을 취한 정규 신입생과 직장인 무시험 및 4년제 전공심화과정 모집 안내문을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곁들여 전면광고 이상의 홍보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특정 대학이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091	朝鮮日報	3. 30.외	조선경제 LIFE 섹션 외	주 의
	東亞日報	3. 31.외	Health & Beauty/병원특집 외	〃
	한국경제	〃	Luxury Fashion 외	〃
	헤럴드경제	4. 8.외	파워 코리아 외	〃
	중앙일보	4. 13.외	Level Up/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외	〃
	매일경제	4. 14.	MBA 외	〃
	문화일보	4. 15.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
	서울경제	4. 16.	2010 대한민국 경영혁신 대상	〃
2010-1092	영남일보	4. 1.	저렴한 그린피… '회원제' 부럽…/경주 보문골프클럽 외	주 의
2010-1103	머니투데이	4. 13.	동아제약/가그린/양치질로 못 잡는 입속세균 제거 외	주 의
	한국경제	4. 14.	중년 이후 허리통증 '척추관협착증'…/순포병원 척추…	〃
2010-1104	매일경제	4. 12.	한폭의 수채화 그곳에서 날리는 샷/중국 난징 백마산…	주 의
	한국경제	4. 13.	골프3스키장 · 호텔… 명품 리조트가 한 곳에/…	〃
2010-1105	일간스포츠	3. 31.	프랜차이즈 CEO 아띠꼬끄…/간판 교체 비용으로…	주 의
	스포츠서울	4. 17.	중소 强 기업 CEO 열전/'처갓집 양념치킨' 한국153…	〃
2010-1106	인천신문	4. 2.	만수동 대청도 횟집/가격 · 크기 · 맛/못난 꽃게도 매력…	주 의
	전북중앙신문	〃	전주시 중화산동 '황금소곱창'/지글지글 입안에서 톡/…	〃
2010-1107	大邱日報	4. 1.	봄, 떼제베 이스트CC 혜택 '우수수'	주 의
	경북매일신문	4. 2.	"봄바람 맞으며 그린 산책 나서볼까"/떼제베 이스트…	〃
2010-1108	중도일보	4. 1.	도안 알짜배기 상가 '풍성'/9일게 32호 신규공급…	주 의
2010-1118	중앙일보	4. 23.외	부동산 외	주 의
	朝鮮日報	4. 27.외	조선경제 LIFE 섹션/W 외	〃
	한겨레	4. 28.	기업 비전 2020	〃
	東亞日報	4. 30.외	Home & Dream 외	〃
	서울경제	〃	2010 그레이트 브랜드 페어 외	〃
	한국경제	5. 4.외	Golf 외	〃
	매일경제	5. 11.외	Car & 외	〃
2010-1119	국제신문	4. 29.	금융산업 특별 섹션	주 의
2010-1127	헤럴드경제	4. 27.외	유통 외	주 의
	한겨레	4. 30.	식음료 특집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127	머니투데이	4. 30.외	5월은 '선물의 달' 외	주 의
	문화일보	5. 4.외	내일 어린이날/선물용 금융상품 '눈길' 외	〃
	한국일보	5. 4.	선물 특집	〃
	국민일보	5. 13.	식음료 특집	〃
	서울경제	5. 14.	식음료 · 홈쇼핑 프리미엄이 대세	〃
2010-1128	東亞日報	4. 28.	세련된 외관…탁 트인 조망…"일할 맛 나겠네" 외	주 의
	한겨레	4. 29.	폴크스바겐 '골프 GTD' 타보니/기분좋은 배기음…	〃
2010-1129	한국경제	4. 30.	하이브리드 SUV 이렇게 조용할 수가…/렉서스 RX450h 외	주 의
	머니투데이	5. 1.	캐딜락 'SRX'/날렵한 스타일, 최적의 승차감… 외	〃
	매일경제	5. 11.	최고를 향한 열정 미니 컨버터블 JCW/192마력 엔진… 외	〃
	東亞日報	5. 13.	도요타 리콜파동에도 끄떡…/오랜 벗 같은 '캠리의 힘'	〃
	서울경제	〃	미쓰비시 아웃랜더/고속주행 탁월 정숙성도 뛰어나	〃
2010-1130	매일경제	5. 10.외	자연친화적인 코스에서 흥미…/중국 선양 안산CC 외	주 의
2010-1131	경인일보	4. 30.	車 사라진 아파트 茶 욕심나는 풍경/부천 소사뉴타운…	주 의
	大田日報	5. 7.외	분양가 최대 1억 9000만원 할인… 40층 높이 대전… 외	〃
	중도일보	5. 10.	LH 선화 Humansia 센트럴뷰 특집/자연+건강+문화…	〃
	경기일보	5. 13.	자연 그대로… 청계산 품에 안긴 '안식처'/판교 테라스…	〃
2010-1132	每日新聞	5. 10.	메디컬 프런티어/대구 중앙이비인후과 박재율 원장/…	주 의
	중도일보	5. 13.	떴다 우리지역 스타의사/선치과병원 이동근 원장/…	〃
2010-1140	중앙일보	5. 20.외	부동산 외	주 의
	한국경제	5. 26.외	Better Life 외	〃
	매일경제	5. 26.	맞춤형 펀드가 뜬다 외	〃
	東亞日報	5. 27.외	Home & Dream 외	〃
	한국일보	6. 9.	한국 경제 이끄는 파워리더/위기에 강했다 '큰 바위 경영'	〃
	한겨레	6. 17.	한겨레 특집/충청권 여행	〃
2010-1141	부산일보	5. 28.외	제15회 바다의날 '해양특집'/21세기 해양강국을 연다 외	주 의
	국제신문	5. 31.	블루오션 그린부산/국제신문 해양특집	〃
	영남일보	6. 9.	특집 부동산	〃
2010-1142	朝鮮日報	5. 20.	분양현장을 가다/죽전 보정역 한화 꿈에 그린	주 의
	한국경제	5. 31.	Travel/옥색바다 위에 뜬 '즐거운 쉼표'/… 외	〃
	머니투데이	6. 8.외	국가대표 전략상품 외	〃
	매일경제	6. 14.	크루즈/쉽고 편하게 즐기는 선상 여행/한 · 중 · 일 크루즈	〃
	서울경제	6. 17.	여름을 Cool하게	〃
	중앙일보	〃	부동산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143	매일경제	5. 31.외	새롭게 주목받는 골프 명소 '선양'/수려한 산세… 외	주 의
2010-1144	朝鮮日報	5. 26.	시승기 BMW 뉴X5/'주행 IQ' 높아지고 '심장'은 더 강해져	주 의
	한국경제	5. 28.	휘발유車의 정숙성 · 부드러운 승차…/뉴 아웃랜더2.4 외	〃
	머니투데이	6. 5.	BMW 미니 '캠든'/급커브 틀면 "와우!" 음성안내 미션…외	〃
	서울경제	6. 7.	명차 나들이/폭스바겐 2010년 파사트/풀가속 해도…	〃
	매일경제	6. 8.	점보제트기를 끄는 강력한 힘에 스포츠카의 날렵함… 외	〃
	경향신문	6. 14.	'K5' 시승기/실물이 더 멋진 외양/승차감도 부드러워	〃
2010-1145	충청투데이	5. 20.외	부동산/GS건설 유성 자이/계룡산 · 유성천이 한눈… 외	주 의
	경남신문	6. 8.	부동산/제주 라온프라이빗타운/골프 · 승마 · 요트…	〃
2010-1146	인천신문	6. 11.	맛기행 멋기행/정통 수제 버거 · 피자 전문점…	주 의
2010-1165	경향신문	7. 9.	특집/2010 대전 · 충청 방문의 해	주 의
	한겨레	7. 21.	한겨레 특집/부동산	〃
	朝鮮日報	7. 23.외	조선경제 Real Estate 외	〃
	한국경제	〃	BIZ Insight 외	〃
	중앙일보	7. 27.외	안전경영 외	〃
	서울경제	〃	특집/'웅도 경북'의 飛翔 외	〃
	東亞日報	7. 29.	Money & Life	〃
	한국일보	〃	2010 대한민국 고객만족 서비스 대상	〃
2010-1166	東亞日報	7. 21.	Home & Dream	주 의
	헤럴드경제	7. 22.	휴가철 금융상품	〃
	경향신문	7. 22.	바캉스 특집	〃
	한겨레	7. 23.	〃	〃
	머니투데이	7. 23.	주요기업 하반기 전략	〃
	매일경제	7. 26.	해외골프 외	〃
	파이낸셜뉴스	7. 27.외	기획 외	〃
2010-1167	한국경제	7. 15.	조용하고 안전하고… '팔방미인' SUV/렉서스RX450h	주 의
	문화일보	8. 4.	'올 뉴 인피니티M' 시승기/기존보다 넓어진 실내/고속…	〃
	서울경제	8. 9.	시승기 재규어 뉴 XK쿠페/보닛의 곡선 · 루프라인…	〃
2010-1168	스포츠조선	7. 8.	(주)디온지씨 '디온 골프타임' 새바람/스크린골프…	주 의
	일간스포츠	7. 16.	트랜스지방 쏙 빼니 웰빙 오븐…/본스치킨 구기형사장	〃
	매일경제	8. 9.	천혜의 자연에서 날리는 호쾌한 샷/태국 깐짜나부리…	〃
2010-1169	光州日報	7. 22.	시원한 물 폭탄… 짜릿한 한밤 사파리/에버랜드의…	주 의
	大田日報	7. 30.외	입지 좋은 '수익형 오피스텔' 어때요?/… 외	〃
	인천신문	7. 30.	30년 전통 · 업그레이드 육수… "앗! 이맛이야"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185	朝鮮日報	9. 6.	귀성길서 신권 교환 · 최고 100만원 캐시백…	주 의
	東亞日報	9. 10.	'위험' 노출된 우리아이… "어린이보험 이젠 필수"	〃
2010-1188	중앙일보	8. 19.외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 외	주 의
	매일경제	8. 24.외	IT & 외	〃
	朝鮮日報	8. 25.외	조선경제 Real Estate 외	〃
	한국경제	8. 25.외	Better Life/스마트한 名品 자산관리 외	〃
	東亞日報	8. 30.외	관광허브 강원도 외	〃
	한겨레	8. 31.	한겨레 특집/저탄소 녹색경영	〃
2010-1189	한국경제	8. 24.	가을 화장품	주 의
	머니투데이	8. 24.외	통합형 보험이 뜬다 외	〃
	중앙일보	8. 25.	부동산 분양	〃
	파이낸셜뉴스	8. 25.외	공기업에도 녹색경영 바람 외	〃
	朝鮮日報	8. 30.외	감성놀이교육 외	〃
	국민일보	8. 31.	글로벌 톱 브랜드	〃
	문화일보	8. 31.외	한국건설, 재도약의 신화를 쓴다 외	〃
	한국일보	9. 10.	한가위 선물 특집	〃
	경향신문	9. 14.	〃	〃
2010-1190	朝鮮日報	8. 23.	건강 · 음식 · 레저… '치유관광' 전문인 길러낸다/… 외	주 의
2010-1191	스포츠조선	8. 31.	내년 9월 개장 클럽모우 골프&리조트 '미리보기'/… 외	주 의
	한국경제	〃	당뇨 · 암에 탁월한 효능…홍삼으로 순우리건강…/… 외	〃
2010-1192	한국경제	8. 23.	산과 바다가 한눈에… 한여름에도 쿨~샷/…	주 의
	매일경제	8. 30.	대자연 속에서 맛보는 장쾌한 샷/태국 다이너스티GC	〃
	머니투데이	9. 10.	한라산이 '굿 샷' 외치는 듯…제주 자연…/해비치CC …	〃
2010-1193	세계일보	8. 17.	주행성능 · 가속음 질주본능 자극… 부드러운 외관권/…	주 의
	머니투데이	8. 21.	시승기/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강력한 엔진/…	〃
	한겨레	9. 2.	폴크스바겐 '뉴 페이톤' 타보니/시속 220㎞ 달려도 꿋꿋/…	〃
2010-1194	경인일보	9. 3.	비즈니스 중심 신개념 필드…일도 여가도 '굿샷'/…	주 의
	중도일보	9. 3.외	LH 스마트뷰/'똑똑한 아파트' 원도심 랜드마크 꿈꾼다 외	〃
	중부일보	9. 7.	파주 롯데아웃렛/럭셔리 쇼핑족 내년 여름을 기다린다	〃
	강원도민일보	9. 11.	춘천 라데나골프클럽/천혜 경관 · 적당한 난이도…	〃
	경기일보	9. 14.	수원 쉬즈메디 산부인과 · 소아과/출산부터 몸조리지…	〃
2010-1203	중앙일보	9. 20.외	이젠 동반성장 시대 외	주 의
	朝鮮日報	9. 27.외	조선경제 특집/사랑받는 기업 외	〃
	東亞日報	9. 29.외	Welcome to BUSAN 외	〃
	한국경제	9. 30.외	Biz & CEO 외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203	매일경제	10. 6.외	10월 분양아파트 외	주 의
	파이낸셜뉴스	10. 6.	Golf is Life	〃
	헤럴드경제	10. 8.	비전코리아	〃
	서울경제	10. 13.	G20, 재계가 뛴다	〃
	경향신문	10. 15.	경향신문 금융특집/유동성 시대/알짜 재테크	〃
2010-1211	중앙일보	9. 29.	역까지 5분, 소사뉴타운 알짜 중소형/… 외	주 의
	서울신문	9. 30.	상생경영 이젠 기업생존 좌우할 '화두'/…	〃
	한국일보	〃	피카소 그림과 모차르트 명곡을 동시에/도서출판 아람	〃
	파이낸셜뉴스	9. 30.외	복리 단골우대… '+α를 찾아라 외	〃
	머니투데이	〃	우리집 가구 바꿔볼까 외	주 의
	헤럴드경제	9. 30.	증권사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외	〃
	서울경제	10. 5.	증권사 대표상품	〃
	매일경제	10. 7.	상품장터	〃
2010-1212	스포츠조선	9. 17.	식탁에서 먹던 감자'칩' 고소하네!/농심 '수미칩' 가공용…	주 의
	일간스포츠	9. 28.	토종감자로 만든 수미칩 자꾸 손이 가네/…	〃
2010-1213	매일경제	10. 11.외	태평양 향해 날리는 호쾌하고 시원한 샷 외	경 고
2010-1214	서울경제	9. 20.	총 20개 스피커 등 오디오부터 차별화/화려한 인테…	주 의
	매일경제	10. 5.	럭셔리 세단의 진화/충격 흡수 탁월하고 변속…	〃
	중앙일보	10. 7.	차체 가벼워 코너링 일품…실내는 호화 요트 분위기/…	〃
	머니투데이	10. 9.	오픈카 탄듯 '파노라마 선루프'/세단을 탄 듯…	〃
	문화일보	10. 13.	렉서스 하이브리드카 'CT200h' 파리서 직접 타보니…	〃
2010-1215	국제신문	10. 1.	부 · 울 · 경 골프장들 긴장하라…우리가 새로운 명문 골프장	주 의
	강원도민일보	10. 2.외	검은 모래 · 탄광… 폐광지서 즐기는 이색 골프 외	〃
2010-1216	영남일보	10. 6.	'대곡역 화성파트드림위드'/"주목받는 이유가 있었네"	주 의
	충청투데이	10. 13.	저렴한 분양가는 기본 탁월한 주거환경까지/…	〃
2010-1217	중부일보	9. 30.	내고장 기업/극소형 스프링 개발 · 생산 (주)스피코/… 외	주 의
	경기일보	10. 15.	"닌텐도 · 소니 게 섰거라" 게임기 세계시장 도전장/… 외	〃
2010-1218	충청투데이	10. 14.	지역 거점병원 넘어 중부권 명문병원 도약/하나병원	주 의
2010-1236	東亞日報	10. 22.외	바이오 코리아 외	경 고
	중앙일보	〃	가을 속으로 외	〃
	朝鮮日報	10. 25.외	한국 MBA 가는 길 외	〃
	한국경제	10. 28.외	Special/서산 · 당진~군산~목포 '서남권 경제벨트' 뜬다 외	〃
	한국일보	11. 5.	대한민국 New Heart 경기 · 인천/GTX	〃
	매일경제	11. 10.외	아파트형 공장 외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237	大田日報	11. 9.	에듀캣/대전 · 충남 자사 · 자공고 · 자율학교 입학…외	주 의
2010-1238	매일경제	11. 8.	올 겨울 주목할 하이브리드형 클럽/태국 촌부리…	경 고
2010-1239	매일경제	11. 8.외	TOUR WORLD 외	주 의
2010-1240	스포츠조선	11. 3.	'럭셔리 풀빌라'서 럭셔리 휴양… 남국의 유혹/…	주 의
	머니투데이	11. 6.	오~경치 보다 앗! 뒤땅…/말레이시아 풀라이스프링스…	〃
2010-1241	강원도민일보	10. 23.외	천혜 자원 그대로 살려 절제된…/홍천 비발디파크CC 외	주 의
	경기일보	11. 5.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
	한라일보	〃	한라산 단풍 · 설경 한폭의 그림… 탄성 저절로/…	〃
2010-1242	머니투데이	10. 22.	'겨울 준비' 필수 아이템 외	경 고
	경향신문	〃	헬스/글로벌 한국의료	〃
	파이낸셜뉴스	10. 27.	기획	〃
	東亞日報	11. 10.	Health & Beauty	〃
2010-1243	東亞日報	11. 1.	'이마트 PL상품' 매달 검증하는 정용진 신세계부회장/…	주 의
2010-1244	한국일보	10. 26.	렉서스 IS F, 첫인상은 고급 세단…시동걸자 야성 폭발	주 의
	서울경제	10. 28.	경제성 · 운전의 즐거움…/BMW 액티브 하이브리드	〃
	머니투데이	10. 30.	질주 본능 깨어나다/시승기 메르세데스-벤츠…	〃
	매일경제	11. 2.	볼보 V60/스포츠 쿠페 감성의 파격적 디자인 왜건/… 외	〃
	세계일보	〃	주행 때 소음 적고 볼륨감 있는 외관 돋보여/…	〃
	중앙일보	11. 9.	세단의 안정감에 날렵한 쿠페형 외관… 게다가 힘까지…	〃
2010-1245	경인일보	10. 29.외	중소형에서 누리는 '랜드마크의 특권'/대우건설… 외	주 의
	大田日報	10. 29.	LH아파트 실속… '생활에 플러스' 알짜단지 노려라/… 외	〃
2010-1264	매일경제	11. 24.	카드 한장 들고 스키장 GO!	주 의
	東亞日報	11. 25.	'산타클로스 카드'… 음식점, 쇼핑몰, 백화점, 할인…	〃
2010-1272	東亞日報	11. 18.외	Home & Dream 외	경 고
	중앙일보	〃	부동산 외	〃
	朝鮮日報	〃	조선경제 AUTO 외	〃
	한국경제	〃	Ubiquitous Life 외	〃
	한겨레	11. 24.	여성친화 경영	〃
	서울경제	11. 25.외	연말 분양시장, 알짜단지 몰려온다 외	〃
	한국일보	11. 25.	동남 광역권 시대	〃
	매일경제	12. 1.외	내년 유망 증권상품 외	〃
2010-1273	헤럴드경제	11. 24.외	그린 주거문화 大賞 외	주 의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274	매일경제	11. 29.	TOUR WORLD	주 의
2010-1275	東亞日報	11. 29.외	Economy+ 住테크 & 地테크 외	경 고
	매일경제	11. 18.외	아이언 외	〃
	머니투데이	〃	든든한 보험 따뜻한 겨울 외	〃
	헤럴드경제	11. 19.외	건강한 겨울나기 외	〃
	한국경제	11. 23.	동남권 광역경제 시대	〃
	파이낸셜뉴스	11. 24.외	기획/연말 분양시장 노려라 외	〃
	서울경제	11. 29.	신성장 동력 속으로	〃
	문화일보	12. 3.	기획/생명보험연금	〃
2010-1276	내일신문	11. 25.	금융	주 의
	경향신문	11. 29.외	부동산 특집 외	〃
	朝鮮日報	12. 6.	겨울방학 학습 프로그램	〃
2010-1277	스포츠조선	12. 2.	'19금 황금비율' 아찔한 유혹…/김시향 모바일 섹시 화보	주 의
2010-1278	일간스포츠	12. 1.	"100% 현미유로 튀긴 닭강정… 입맛 잡았죠"/… 외	주 의
2010-1279	매일경제	12. 6.	'봄의 도시'에서 즐기는 라운드/중국 쿤밍	경 고
2010-1280	한국경제	11. 22.	그림 같은 15번 홀…/필리핀 푸에르토 아줄GC	주 의
	머니투데이	12. 3.	드넓은 '초록바다' 위로…호쾌한 '굿 샷~'/지산포레스트CC	〃
2010-1281	머니투데이	11. 27.	근육질 몸매 그대로…연비 문제 잡았다/포드 '머스탱'	경 고
	매일경제	11. 30.	파격적 디자인으로 한층 젊어진…/변속은 더 세밀…	〃
2010-1282	중부매일	11. 25.	'가격 홀쭉' 살림 장만 하이마트로 가요	주 의
	경기일보	11. 26.	"창의력 키우는 장난감… 부모가 더 좋아해요" 외	〃
2010-1283	강원도민일보	12. 3.	'춘천 새 랜드마크' 온의지구 명품 아파트 온다	주 의
2010-1284	영남일보	12. 3.	뜨끈뜨끈한 온천수에 푸~욱… "겨울에도 스파밸리"	주 의
	大田日報	12. 9.	진주처럼 빛나는 자연 그대로의 섬 '휴양의 천국'/…	〃
2010-1285	경북매일신문	11. 26.	칠곡 세븐밸리 골프장/세계적 디자이너 설계 환상적인… 외	주 의
	한라일보	12. 3.	세컨샷 주변 투온 저지용 암석원 감상도 묘미/…	〃
2011-1017	스포츠서울	1. 17.	전통발효 방식 고집 "효능으로 승부"/동원 F&B 홍삼…	주 의
2011-1018	스포츠조선	1. 12.	서태후의 여름별장서 별미 즐겨볼까/온누리투어/…	주 의
2011-1019	머니투데이	1. 8.	시승기/아우디 '신형 A8'/22단계 시트 조절… 외	주 의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1-1020	헤럴드경제	1. 5.	새해 재테크/알짜 분양지	주 의
	매일경제	1. 6.	상품장터	〃
	머니투데이	1. 12.외	2011년 유망펀드 외	〃
2011-1021	문화일보	1. 6.	스키는 '쿨'하게… 할인은 '핫'하게…	주 의
	東亞日報	1. 7.외	에 · 스 · 프 · 레 · 소 · 머 · 신 외	〃
	朝鮮日報	1. 10.외	[기숙학원 탐방] ①성균관에듀 기숙학원을 가다 외	〃
2011-1022	大田日報	1. 6.	에메랄드 빛 고요한 바다…여유 · 낭만이 파도치는 섬…	주 의
	대구신문	1. 10.	팔공산의 온천 명소… "피부병에 탁월"/…	〃
2011-1023	한라일보	1. 7.	절묘한 곳에 해저드 위치 '물 위 골프' 착각/…	주 의
2011-1024	경기신문	1. 7.	주말 미각 공감/③당진 生고기촌/착한 가격에 놀라고…	주 의
	大邱日報	1. 14.	양꼬치 한 점 · 칭따오 맥주 한잔 '띵호와'/…	〃
2011-1025	大田日報	1. 17.	웰빙문화 속 자연주의 가구로 주목	주 의
2011-1026	서울경제	1. 5.외	Asset plus/새해 투자전략은 외	주 의
	매일경제	1. 7.외	신년기획 재테크 빅모멘텀 외	〃
	중앙일보	1. 7.	2011 부동산 대해부 섹션 중…레미안 뜯어보기	〃
	朝鮮日報	1. 11.	브랜드가 세상을 바꾼다 섹션	〃
	한국경제	1. 11.외	Ubiquitous Life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이 닮아간다 외	〃
	한국일보	1. 12.	세계로 비상하는 전남 섹션	〃
	東亞日報	1. 14.	동남권 번영시대 섹션	〃
2011-1027	매일경제	1. 12.	Life & Fun 섹션	주 의
	한국경제	1. 12.외	Better Life 섹션 외	〃
2011-1028	매일경제	1. 3.외	TOUR WORLD 섹션	주 의
2011-1050	머니투데이	1. 27.	오감만족 명품골프/칠 맛 쉴 맛 볼 맛/필리핀 천국…	주 의
	매일경제	1. 31.	아름다운 바다를 향해 날리는 샷/사이판 라오라오 베이/…	〃
2011-1051	스포츠조선	1. 24.	동원그룹, 국민 건강 심봤다/천안에 '100% 태양광 건조'…	주 의
2011-1053	大田日報	1. 24.	육교 엘리베이터 시공능력 '넘버원'/충청시대 강소기업…	주 의
	충청투데이	2. 7.	실용성 · 디자인 · 가격 OK… 블라인드 업계 최강 자리매김/…	〃
2011-1054	大田日報	1. 20.	호주 시드니/미사여구가 필요없다 푸른하늘 · 코발트/…	주 의
	영남일보	1. 28.	우윳빛 온천수에 명절증후군 싸~악~ 아토피 치료…	〃
2011-1055	아시아투데이	1. 21.	전문병원을 찾아서/여성질환 전문 제일병원 김재욱/…	주 의
	인천신문	1. 27.	현대유비스병원 새 도약 꿈꾼다/7월 증축공사 완료…	〃
2011-1056	충북일보	2. 7.	'취업'은 충청대학의 DNA	주 의
2011-1057	경기일보	2. 9.	Now Metro/글로벌시티① 교육혁명 승부수	주 의
2011-1058	중앙일보	1. 18.외	2012 새로운 도전/전문분야별 기숙학원 외 섹션	주 의
	東亞日報	1. 26.외	기숙학원 섹션	〃
	朝鮮日報	1. 28.	2012 대입 이제부터다 섹션	〃
2011-1059	서울경제	1. 21.외	2011 삼성 승부수 외 섹션	주 의
	朝鮮日報	1. 31.	글로벌 명문 서강대 섹션	〃
2011-1060	매일경제	1. 19.외	Healht & Life 외 섹션	주 의
	東亞日報	1. 20.외	CAR 외 섹션	〃
	朝鮮日報	〃	조선경제 Real Estate 외 섹션	〃
	중앙일보	1. 21.외	부동산 외 섹션	〃
2011-1061	東亞日報	1. 19.외	Home & Dream 외 섹션	주 의
	朝鮮日報	1. 24.	맛있는 공부 섹션	〃
	중앙일보	1. 26.	비즈플라자 섹션	〃
	헤럴드경제	1. 31.	비전코리아 섹션	〃
2011-1062	매일경제	1. 24.외	TOUR WORLD 섹션	주 의
2011-1063	매일경제	1. 20.	상품장터	주 의
	파이낸셜뉴스	1. 27.	기획/2011분양대전 막 올랐다	〃
2011-1089	매일경제	2. 17.	폼나게 긁고 싶다면… 체크카드가 있잖아요	주 의
	東亞日報	2. 22.	기름 한번 넣었더니… 백화점에서 쇼핑했다고…	〃
2011-1090	머니투데이	3. 5.	풍경은 '파노라마' 코스는 '다이내믹'/푸른 바다 위로…	주 의
	스포츠조선	3. 21.	현빈의 '깔끔한 피부'가 부럽다면…	〃
2011-1091	서울경제	3. 14.	배출가스 줄이고 출력은 높여/짜릿한 가속성…	주 의
	문화일보	3. 16.	역동적 주행에도 정숙…'스포츠 세단' 종결자!/…	〃
2011-1092	한라일보	2. 25.외	美 LPGA대회 챔피언 탄생시킨 '신데렐라홀'/… 외	경 고
	강원도민일보	3. 5.외	그림같은 자연 풍광 위로 펼쳐지는 황홀한 샷/… 외	〃
2011-1093	每日新聞	3. 9.	코끼리 타고 황금왕국 둘러보고 탁트인 해변에 피로가…	주 의
	大田日報	3. 10.	눈부신 푸른 물결따라 환상 휴양지 펼쳐진다/필리핀 세부	〃
2011-1094	경북매일	2. 25.	'포항연일 에코 코아루' 분양성공 예감	주 의
	부산일보	3. 8.	롯데건설, 부산시장 공략 확대…올해 3천766가구 분양	〃
	경상일보	3. 9.외	뛰어난 입지조건…신평면 설계…3.3㎡당 600만원대… 외	〃
2011-1095	每日新聞	2. 28.	메디컬 프런티어/늘시원한 항문외과 노성균 원장	주 의
	충청투데이	3. 7.외	"에너지위기, 우리에게는 기회"/충청파워브랜드… 외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1-1095	부산일보	3. 8.외	하이! 우리 브랜드/(주)엘큐어/몸과 마음 치유… 외	주 의
	영남일보	3. 17.	설립 6년만에 '임플란트 국가대표' 도약/…	〃
2011-1096	南道日報	3. 4.	"月 2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기아차 '에코 캐쉬백…	주 의
	蔚山每日	〃	3월 현대차 사면 이벤트가 '팡팡'/LED TV 등 사은품…	〃
2011-1097	경기신문	3. 17.	목조주택의 명가 '아란케빈'/100년을 생각하는 초원 위…	주 의
	기호일보	〃	모아저축은행/IMF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40년 고객… 외	〃
2011-1098	머니투데이	2. 17.외	'졸업 · 입학' 재테크의 첫걸음 외	주 의
	서울경제	2. 18.	환절기 건강관리	〃
	헤럴드경제	2. 18.외	유망투자상품 외	〃
	東亞日報	2. 22.	입학 · 신학기	〃
	문화일보	2. 22.외	부동산 외	〃
	파이낸셜뉴스	〃	기획/게임업계 외	〃
	국민일보	2. 28.	부동산 특집	〃
2011-1099	朝鮮日報	2. 16.외	조선경제 특집/졸업 입학 새출발 외 섹션	주 의
	매일경제	2. 17.외	Best of Best 외 섹션	〃
	중앙일보	〃	새로운 출발 외 섹션	〃
	한국경제	2. 18.외	Special/똑똑한 학습지 활용법 외 섹션	〃
	東亞日報	2. 21.외	프라이드 경북 외 섹션	〃
	한겨레	2. 23.	모바일 2011 섹션	〃
	헤럴드경제	2. 23.외	파워코리아 외 섹션	〃
	경향신문	2. 25.	2011 경향 하우징 & 브랜드 페어 섹션	〃
	서울경제	2. 25.외	신학기 학습법 외 섹션	〃

▲ 2010 - 111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0년 5월 18일자 19면 「만화 '끗발' 내일부터 시즌2 연재/이번엔 '올가미꾼'과 한판 대결」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만화만 즐겨보셔도 판돈을 잃진 않으실 겁니다."

스포츠칸의 연재만화 '끗발'(글 조성황 · 그림 이영석)이 오는 19일부터 시즌 2 '올가미꾼'을 선보인다. 도박판에서 벌어지는 인간군상들의 백태를 실감나는 필치로 그려낸 '끗발'은 시즌 1 '원초적 게임'과 다른 인물, 다른 줄거리로 새 판을 짠다.

시즌 2의 부제가 된 '올가미꾼'은 청부를 받아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모는 사람을 뜻한다. '끗발 시즌2-올가미꾼'은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올가미꾼과 맞서는 주인공의 활약을 담았다. 주인공은 오로지 도박판에서 끗발을 무기로 올가미꾼과 대결을 벌인다.(중략)

조성황 작가는 "이 만화를 즐겨 읽기만 해도 실전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즌 1에 보내줬던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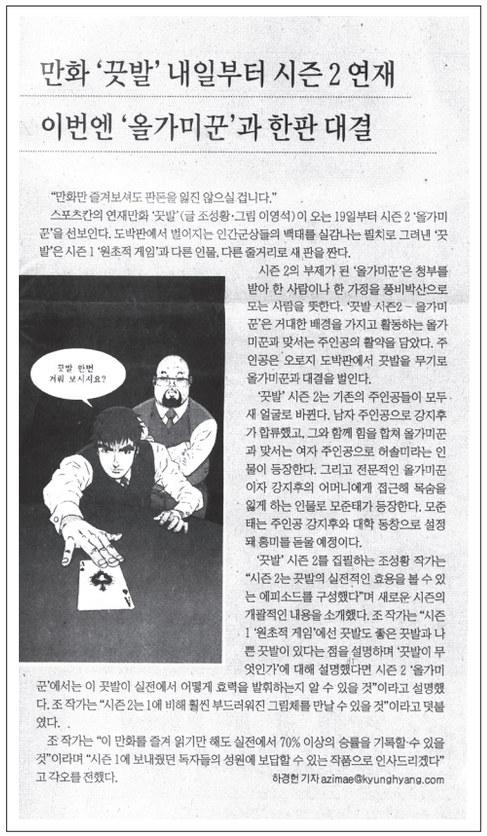
위 적시 기사는 스포츠칸이 연재만화 '끗발'의 두 번째 이야기인 시즌 2 '올가미꾼'을 다음날부터 싣겠다고 소개하는 사고(社告)성 기사이다.

기사는 "만화만 즐겨 보셔도 판돈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라는 리드로 시작

해 "이 만화를 즐겨 읽기만 해도 실전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성황 작가의 맺음말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만화 주제가 도박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실전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말을 여과 없이 소개한 것은 만화의 흥행에만 집착한 나머지 도박을 부추기는 등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 료〉



만화 '끗발' 내일부터 시즌 2 연재
이번엔 '올가미꾼'과 한판 대결

"만화만 즐겨보셔도 판돈을 잃진 않으실 겁니다."

스포츠칸의 연재만화 '끗발'(글 조성황·그림 이영석)이 오는 19일부터 시즌 2 '올가미꾼'을 선보인다. 도박판에서 벌이지는 인간군상들의 백태를 실감나는 필치로 그려낸 '끗발'은 시즌 1 '원초적 게임'과 다른 인물, 다른 줄거리로 새 판을 짠다.

시즌 2의 부제가 된 '올가미꾼'은 청부를 받아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모는 사람을 뜻한다. '끗발 시즌2 – 올가미꾼'은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올가미꾼과 맞서는 주인공의 활약을 담았다. 주인공은 오로지 도박판에서 끗발을 무기로 올가미꾼과 대결을 벌인다.

'끗발' 시즌 2는 기존의 주인공들이 모두 새 얼굴로 바뀐다. 남자 주인공으로 강지후가 합류했고, 그와 함께 힘을 합쳐 올가미꾼과 맞서는 여자 주인공으로 허솔미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올가미꾼이자 강지후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목숨을 잃게 하는 인물로 모준태가 등장한다. 모준태는 주인공 강지후와 대학 동창으로 설정돼 흥미를 돋울 예정이다.

'끗발' 시즌 2를 집필하는 조성황 작가는 "시즌 2는 끗발의 실전적인 효용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구성했다"며 새로운 시즌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조 작가는 "시즌 1 '원초적 게임'에선 끗발도 좋은 끗발과 나쁜 끗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끗발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다면 시즌 2 '올가미꾼'에서는 이 끗발이 실전에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작가는 "시즌 2는 1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진 그림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작가는 "이 만화를 즐겨 읽기만 해도 실전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즌 1에 보내줬던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스포츠칸 2010년 5월 18일자 19면〉

3. 사회적 책임

-지역감정 조장 우려

▲ 2010 - 113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 문〉

경북일보 2010년 6월 8일자 1면「TK, 한나라당 최대주주 맞나/국회의장 · 부의장, 모두 PK 차지… 핵심 당직도 소외」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에서 대구 · 경북은 없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의 국회의장에 6선의 박희태 의원을, 국회부의장에 4선의 정의화 의원을 선출했다.

박 의원은 경선에 출마한 이윤성 의원이 막판 사퇴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정 의원은 박종근(대구 달서갑),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과 경선을 벌인 끝에 전체 156표 가운데 97표를 얻어 국회 부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에 앞서 지역의원들은 박종근 · 이해봉 의원의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단일화해도 표차가 커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의원에 대해 '꼴사납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희태 · 정의화 의원 모두 PK(부산 · 경남)이니 부의장은 대구 · 경북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박종근 의원은 "'대구가 괄시 받아도 되느냐'라는 정서가 있다. 내가 부의장에 당선되면 인사에 있어 탕평책이 해결되는 것임을 염두해달라"며 지역정서를 호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TK는 18대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에도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단까지 PK에 모두 내어주면서 국회직과 핵심당직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결국 TK지역은 정권창출에 가장 공헌하고도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핵심당직이라 할 수 있는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에서 배제된 셈이다. 겨우 18대 초반에 주호영 장관(대구 수성을)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고,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과 김성조 의원(구미갑)이 정책위의장을 이어받은 것 외에는 TK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TK는 배제되고 있다.

전반기에 유일하게 이병석 의원(포항 북)이 국토해양위원장을 맡아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큰 힘을 쏟았지만 하반기에는 김성조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 자리를 꿰차는데 그쳤다.

이인기 의원(고령 · 성주 · 칠곡)이 안경률 의원에 이어 1년씩 행정안전위원장을 맡는 정도다.

이와 관련, TK의 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도록 경북에서 72.5%, 대구에서 6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보면 TK가 과연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 맞는지에 대한 자괴감마저 든다"면서 "이제 지역은 친이, 친박 계파싸움을 떠나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또 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18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몫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 것과 관련, 대구 · 경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소외되었으며 한나라당 핵심당직에서도 이 지역 출신의원들이 배제되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에서 대구 · 경북은 없다."라는 사실을 왜곡 내지 과장한 표현으로 시작하여, "TK는 18대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에도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단까지 PK에 모두 내어주면서 국회직과 핵심당직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TK지역은 정권창출에 가장 공헌하고도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핵심당직이라 할 수 있는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에서 배제된 셈",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TK는 배제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도록 경북에서 72.5%, 대구에서 6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보면 TK가 과연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 맞는지에 대한 자괴감마저 든다"는 한 TK 출신 의원의 말을 인용해 전하고 있다.

결국 이 기사는 한나라당 정권의 창출에 있어서 TK지역이 공헌한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당직, 국회의장 및 부의장 직 선출 등에 있어서 TK지역이 능력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명분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지역의 우월적 지위를 노골적으로 주장한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경북일보가 경북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설이나 칼럼도 아닌 사실보도 기사에서 이러한 보도행태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5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종 렬

2.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3.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부산일보 2010년 7월 13일자 12면「"MB정권 2기에 부 · 울 · 경은 없다"」

제하의 기사, 每日新聞 7월 16일자 6면 「"무늬만 TK MB, 여론 밀려 TK 역차별"」 제하의 기사, 7월 20일자 6면 「이젠 親李까지…, 당내 TK는 없다」 제하의 기사, 8월 11일자 6면 「"이재오 · 홍준표, TK 대변자로 나서야"/당 · 정 · 청 인사 대구경북 출신 전멸… 對정부 소통창구 아예 꽉 막혀」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7월 20일자 1면 「'영포' 유탄…또 뒤통수 맞은 TK」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1. 부산일보 每日新聞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2기 이명박 정권의 핵심권력에 더이상 부 · 울 · 경은 없다."

13일 오후 공식 발표 예정인 청와대 수석급 주요 직책에 부산 · 울산 · 경남 출신들이 전면 배제됨에 따라 2기 체제에 들어간 이명박 정권의 중앙권력에 '부 · 울 · 경 공동화'가 현실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충청권 인사들을 배려하면서도 대구 · 경북 인사들도 동시에 챙겼다. 대신 이 대통령은 '요직 중의 요직'으로 통하는 청와대 수석급에 부 · 울 · 경 출신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PK 출신 청와대 수석들이 지역의 민원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께 단행할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을 신임 정책실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어왔다.

정무수석에는 3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정진석 국회 정보위원장이 내정됐고, 홍보수석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내정됐다.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에는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내정됐다.

이들 중 백 정책실장 내정자는 충남 보령, 정 정무수석 내정자는 충남 공주,

박 사회통합수석 내정자는 경북 칠곡 출신이다.

한때 이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바탕으로 정책실장으로 유력했던 부산고 출신 박재완 정책기획수석과 대통령실장의 물망에 올랐던 박형준 정무수석은 이번 인사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지역현안 해결의 '최고 창구'이다. 최근 박 정무수석이 부산시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통합을 잠정 보류시켰듯이 청와대 내에 수석급 인사가 얼마나 많이 포진돼 있느냐는 주요 지역현안 해결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每日新聞)〈"무늬만 TK MB, 여론 밀려 TK 역차별"〉=『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 'PK(부산경남) 독식구조'가 심화되고, 청와대 일부 개편에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이 약진하는 대신 'TK(대구경북)'가 주변부로 급격하게 밀리면서 지역에서 현 정권에 대한 소외감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유력한 이병석(포항북) 의원의 영포회 관련설이 나돌면서 경남 출신의 3선인 권경석 의원(창원갑)이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른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두고 'TK 대통령에 TK 총리는 어렵다'는 기류가 걸림돌로 작용하자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넘어 불만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대로 된 TK 출신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TK를 너무 홀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중략)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자신을 TK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 · 도민들은 수도권과 더 정서적 친밀감이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대통령이 TK인 탓에 TK 출신을 총리로 앉힐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TK를 홀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 민주당의 약진으로 한나라당이 완패했지만 대구경북은 70% 이상의 지지로 변함없는 애정을 보냈다는 것. 그런데도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 인사에서 TK가 소외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중략)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구경북은 15년간의 찬밥신세에서 벗어나 획기

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실상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하략)』

〈이젠 親李까지…, 당내 TK는 없다〉=『"친박에 이어 친이도 타격받았다. 이제 대구경북은 당내에 없는 존재인가?"

이병석 의원이 사무총장 인선에서 탈락하자 허탈감에 빠진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신임 사무총장에 3선의 원희룡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신임 사무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이병석 의원이 유력했으나, 결국 원희룡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

안 대표는 당 쇄신과 개혁, 인사 탕평, 화합과 소통 등 다목적 포석을 위해 원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이번 당직 인선을 놓고 지역 정치권은 분통을 터트렸다. 고위당직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던 친이계 이 의원마저 탈락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친박은 비주류라서 소외됐다고 쳐도 대통령 측근인 지역 내 친이계 핵심마저 여당 당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자 소외감과 허탈감은 배가된 것이다.

인선 배경도 지역 정치권을 자극했다. 조해진 대변인이 "원 의원은 젊고 개혁적이며 경륜을 겸비한 3선의 중진 의원으로 사무총장에 가장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럼 대구경북 인사는 늙고, 비개혁적이며 경험도 없느냐"고 지역 정치권은 항의했다.(하략)』

〈"이재오 · 홍준표, TK 대변자로 나서야"…〉=『8 · 8 개각으로 지방선거 이후 두달 여 간 진행된 당 · 정 · 청 인적 쇄신이 마무리된 이후 지역의 목소리를 권력 핵심 포스트에서 전달할 '메신저'가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앙과 지역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온 정정길 대통령실장(경북고)과 주호영 특임장관(능인고),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대구고)이 함께 물러나면서 '핫라인'이 사라진 것이다.

야권과 한나라당 내 일부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특정 지역 편중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구경북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내각에서 대구경북 출신 장관 내정자는 2명(이재오 특임 · 이주호 교육)으로 서울 · 경기(5명)는 물론 부산 · 경남, 충청, 호남(이상 각 3명)보다 더 적어졌다. '강재섭 총리론'도 한때 등장했지만 결국 경남 거창 출신인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로 낙점됐다. 또 국회와 한나라당 요직에서도 지역 출신 인사는 전멸한 상태다. 청와대 참모진도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등 타 지역 출신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와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중앙 정치 위주로 활동하는 '범TK'로 분류되면서 지역과의 소통에 소홀했지만 이제는 고향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기대 섞인 주문이다.(하략)』

(영남일보)〈'영포' 유탄…또 뒤통수 맞은 TK〉=『TK(대구 · 경북) 정치권이 또 물을 먹었다.

당초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유력시되던 3선의 이병석 의원(포항북)이 안상수 대표로부터 낙점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 대신에 3선의 원희룡 의원(서울 양천갑)이 사무총장에 내정됐다.(중략)

'원희룡 카드'는 갑작스러운 교체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전대를 통해 누가 대표가 되든 사무총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여겨졌다.(중략)

이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지 않은 데는 '영포회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일 · 포항 출신의 공직자 출신 모임인 영포회의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엉뚱하게 이 의원이 '유탄'을 맞은 꼴이라는 것.

한나라당 최고위가 친박을 의식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이 주류인 안 대표 체제에 대한 친박의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합의 제스처'로 친이 핵심인 이 의원이 아닌 중도 쇄신파인 원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해석이다.(중략)

TK 정치권으로선 '사무총장 카드 교체'로 3차례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중략)

국회직과 당직에 'TK 정치권의 소외론'이 확산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대표에 당선되면 TK 정치권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 안팎에서도 '이병석 사무총장 카드'가 사라지면서 TK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회 이후의 주요 당직 인선 등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당 · 정 · 청의 인사내용과 관련해 각각 해당 지역 인사들이 소외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들이다.

부산일보는 "'2기 이명박 정권의 핵심권력에 더 이상 부 · 울 · 경은 없다.' 13일 오후 공식 발표 예정인 청와대 수석급 주요 직책에 부산 · 울산 · 경남 출신들이 전면 배제됨에 따라 2기 체제에 들어간 이명박 정권의 중앙권력에 '부 · 울 · 경 공동화'가 현실화됐다."고 기술하고, 每日新聞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 'PK(부산경남) 독식구조'가 심화되고, 청와대 일부 개편에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이 약진하는 대신 'TK(대구경북)'가 주변부로 급격하게 밀리면서 지역에서 현 정권에 대한 소외감을 애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친박에 이어 친이도 타격받았다. 이제 대구경북은 당내에 없는 존재인가?"라고 기술하였다.

영남일보는 "TK(대구 · 경북) 정치권이 또 물을 먹었다. 당초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유력시되던 3선의 이병석 의원(포항북)이 안상수 대표로부터 낙점을 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지역 신문으로서 자기 지역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 않았다고 해서 '부 · 울 · 경은 없다' '무늬만 TK' 'TK 역차별' '우리가 핫바지냐' '당내 TK는 없다' '당 · 정 · 청 인사 대구경북 출신 전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과장이 아닐 수 없다.(참고로 동아일보

7월 21일자 A31면 오늘과 내일 칼럼 「MB의 노무현식 人事」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코드가 이념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코드는 'TK(대구경북)'이다."라며 그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다. 또 경향신문 7월 22일자 5면 「靑 참모진 56명 중 23명이 '영남'」 기사에서 비서관급 이상의 출신지는 대구 · 경북이 18명, 부산 · 경남이 5명이라고 기술하였다.)

결국 위의 기사들은 자기 지역이 한나라당 정권의 창출에 공헌한 점을 이유로 당 · 정 · 청 등의 인사에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일정한 몫, 그것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 않은 것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명분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지역의 우월적 지위를 노골적으로 주장한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사설이나 칼럼도 아닌 사실보도 기사에서 이러한 보도행태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지역감정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정도를 벗어났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27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11월 10일자 10면 「토착 · 선거 비리수사 '서부벨트' 쏠림현상?/호남 · 충청지역만 집중/야권엔 '표적수사' 빌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착비리 및 선거비리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 · 경의 이번 비리수사가 호남 · 충청지역에 집중되는 '서부벨트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야당 텃밭'이 절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표적수사'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

10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검 · 경에 따르면 토착비리 수사의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 나주시청 및 산하 읍 · 면사무소, 전주시청, 익산시청 등 4곳 모두 호남지역 지자체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반면, 영남 · 강원지역의 경우 토착비리 수사는 거의 없다.

선거비리 수사의 경우에서도 호남지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14명의 시장 · 군수 가운데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임정엽 완주군수, 윤승호 남원시장, 김충석 여수시장, 전완준 화순군수 등 호남지역 기초단체장이 6명이나 된다.

또 충청권인 우건도 충주시장, 성무용 천안시장, 김세호 태안군수 등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경기도에서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선기 평택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5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반면, 동부권역인 영남권에서 수사대상은 정윤열 울릉군수 한 명에 그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다세대주택 증축 과정에서 구청 측의 묵인으로 불법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광주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다세대주택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 전남경찰청은 1~2일 물품 구매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주시청과 산하 읍 · 면사무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주에서는 지난달 시청 공무원 4명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됐으며, 익산에서는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시청 고위간부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측근 최모(52)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강인형 순창군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정엽 완주군수, 윤승호 남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단서가 나와 수사를 하는 것일 뿐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지방 토착비리 및 선거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야당 텃밭'인 호남과 충청지역에 집중돼 야권이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는 데 빌미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기사내용에 맞춰 큰 제목은 「토착 · 선거 비리수사 '서부벨트' 쏠림 현상?」으로, 작은 제목은 「호남 · 충청지역만 집중/야권엔 '표적수사' 빌미」 라고 달았다.

기사는 토착비리와 관련해 11월 10일 현재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 4곳이 수사 대상에 오른 반면 영남 · 강원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선거비리 수사에서도 수사 대상인 시장 · 군수 14명(기사대로라면 15명이어야 하는데 취재기자의 착오로 보임) 가운데 호남지역 단체장이 6명, 충청 3명, 경기 5명인 반면 영남권 수사대상은 울릉군수 1명뿐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 같은 통계수치의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확인 결과 위 신문보다 하루 전에 발간된 중앙일보 11월 9일자 8면 「검 · 경, 이번엔 지자체 토착 · 선거 비리 겨누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도표 내용을 참고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은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지방기획' 성격의 위 기사에서 지역별 검 · 경 수사 사례를 임의로 취합하면서 확인된 수사 대상 자치단체장들의 명단을 도표로 정리했는데, 헤럴드경제는 이 같은 중앙일보 기사 내용이 전국적 수사 진행상황의 전

부인 양 통계치로 만들어 기사화했다.

위 기사 마지막 부분 “비리 단서가 나와 수사를 하는 것일 뿐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검찰 관계자의 코멘트도 중앙일보 기사 내용 중 정의식 전주지검 차장의 발언을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낀 것이다.

결국 헤럴드경제 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정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기사를 ‘비리 수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요지로 각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헤럴드경제는 특히 수사가 ‘서부벨트’ 쪽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부터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

연합뉴스 11월 2일자 창원발 기사는 검 · 경의 토착 · 선거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남 함안군수와 창녕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창원의 최철국 국회의원과 김한겸 전 거제시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11월 8일자 춘천발 기사는 강원지역 시장 · 군수 4명과 전직 단체장 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단체장 1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불과 며칠 전에 제공된 이 같은 연합뉴스 기사의 내용을 위 기사에서 빠트린 이유가 단순히 ‘취재 성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서부벨트 쏠림 현상’을 강조하느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유가 어느 쪽이든 지역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큰 위 기사는 구체적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취재기자의 예단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꿰맞춘 왜곡 · 과장 기사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기사는 특히 중앙일보 기사의 상당 부분을 표절하고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62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全羅日報 2010년 12월 7일자 1면 「충남, 해상 영역분쟁 또 ‘생떼’」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남지역 정치권과 서천군 어민들이 7일 도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는 등 군산시와의 해상경계 분쟁을 표면화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중략)

6일 서천군에 따르면 서천군민들은 군산시와의 해상경계가 일제시대 수탈을 위해 설정됐던 만큼 이제라도 바로 잡아 수십 년 동안 논란의 빌미가 됐던 서천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해달라는 것.

또한 서천군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은 물론 해상시위, 군장대교 점거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중략)

뿐만 아니라 서천군민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군장대교 공사현장을 점거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군장대교가 건설됨에 따라 군산시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서천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천군의 입장이다.

LNG복합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군산 서천간 분쟁도 또 다시 술렁일 전망이다.

한국서부발전(주)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서천지역 어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천지역 주민들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서천군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지난 6월 가동으로 김과 어패류 등 서천 근해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서천군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지역 이기주의에서 표면화된 일부 지역의 움직임인 만큼 공식 대응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천군의회에 이어 충남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후 서천군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부 목소리까지 들리면서 일단 충남도 차원의 움직임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남도 역시 경기도 평택과의 신규 매립지 영토분쟁에 있어서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 해당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한 만큼 입장표명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서천군민들의 주장대로 실력행사가 이뤄질 경우 전북과 충남 간의 지역 간 분쟁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충남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논란과 서천군 해상경계 부정 등 충남과의 갈등 소지가 서천군에 의해 대다수 제기됐지만 이들 문제 모두 정부와 법에 의해 검증됐다는 점에서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충남 주민들이 서천군과 군산시 간의 해상 영역 경계선 설정 변경 등을 요구하며 해상 시위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이와 관련한 주장과 움직임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은 충남 주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생떼'로 단정, 비난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사 내용에도 없는 주장을 담은 이러한 제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편향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으며, 자칫하면 지역 갈등을 조장 또는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

준칙」①항(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2.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3. 경남신문 발행인 김 순 규

4.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김 공 가

〈주 문〉

每日新聞 2011년 1월 19일자 1면「보이는가, 7백만의 서명이…」, 1월 26일자 6면「"신공항 · 과학벨트 이번에 놓치면 다 죽는다"/유승민 시당위원장 기자간담회」, 全北日報 1월 19일자 3면「전북도-정치권, 김황식 총리 면담…무슨 얘기 오갔나/"LH 분산배치 거부 땐 민란 일어날 것"」, 경남신문 2월 7일자 1면「부산, 이성 잃은 '폴침막 공세'」, 경북도민일보 2월 11일자 1면「"'신공항' 결정 미루면 民亂"/대구 · 경북 의원, 임태희 대통령실장에 결단 촉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每日新聞 全北日報 경남신문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每日新聞)〈7백만 서명〉=『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서명운동 참가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

19일 영남권 4개 시 · 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신공항 밀양 유치 서명에 참여한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지역 주민이 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중략)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터미널, 기차역, 전통시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시 · 도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밀양 유치 홍보 및 서명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대구는 200만 명, 23개 시 · 군이 참가한 경북은 490만 명이 서명했다. (중략) 밀양을 비롯한 경남지역민들은 밀양 7만 3천여 명을 비롯해 20여만 명이 서명했다.(중략)

이에 따라 추진단과 영남권 4개 시 · 도 등은 밀양 신공항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신공항 밀양유치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집중 전개하는 한편 이달부터 수도권지역에서 밀양 신공항 유치 홍보물 배부와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유치 결정이 미뤄질 경우에 대비해 신공항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록을 국토 해양부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계획 중이다.(후략)』

〈"…이번에 놓치면 다 죽는다"〉=『"신공항 밀양 유치와 과학비즈니스 벨트 지금 (유치) 안 하면 못 한다."

유승민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동을)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신공항 밀양 유치와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올 3월로 예정된 입지선정 발표를 미루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입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밀양신공항 입지 선정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학벨트가 충청으로 가고 신공항 발표마저 미뤄지는 최악의 경우 지역의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대구시장이고 지역의원들이고 전부 다 죽었다 생각해야 한다"는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밀양신공항 무산은 곧바로 지역민들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설명이었다.(중략)

또 과학벨트와 관련,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부터 대구경북이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어야 했는데 다소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어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후략)』

(全北日報)=『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18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황식 국무총리의 면담은 시종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예정된 시간(30분)보다 10여분을 넘길 만큼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면담에 앞서 의원들은 처음부터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일부 참석자는 'LH본사가 일괄 배치된다면 이명박 정권은 사기정권'이라거나 '정부가 분산배치를 거부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환 의원은 "정부가 처음에는 분산배치를 전제로 전북과 경남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일괄배치 움직임이 감지된다"면서 "결국 이명박 정권은 거짓말정권이자 사기정권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신건 의원은 "일괄배치된다면 치안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고, 조배숙 의원은 "정부안을 따르지 않은 경남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하고, 분산배치가 안되면 민란이 날 것"이라며 지역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후략)』

(경남신문)=『"신어산 추락사고 잊었나. 첩첩산중에 공항이 웬 말인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간선도로변에 붙어 있는 동남권 신공항 관련 펼침막 문구다.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인 김해시 지내동 동원아파트 뒤편 신어산 줄기인 돛대산 기슭에 추락한 중국 민항기 사고를 빗대 내륙 쪽인 밀양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표현이다. 실종자 2명을 포함해 129명이 사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부산시는 이를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해안 유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려는 경남 · 경북 · 대구 · 울산지역과 가덕도로 유치하려는 부산의 경쟁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시와 시민 · 사회단체가 정도를 넘어선 치졸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어 경남도민은 물론 부산시민들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하고 있다.(중략)

펼침막 문구를 살펴보면 '부산가덕 신공항만이 유일한 선택', '부산가덕해안

신공항 입지 0순위' 등 입지 여건의 우수성을 주장하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당위적인 내용이 다수다.(중략)

해운대구, 수영구 등 부산시내 거리 곳곳에도 동남권신공항 유치 펼침막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걸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탁 트인 바다 두고 꽉 막힌 산속으로 가자고?', '내 집 앞 밀양에 공항을? 공항이 버스정류장인가?' 등 슬로건 문구가 녹산공단 거리변보다 훨씬 더 원색적이고 자극적이다.(후략)』

(경북도민일보)=『한나라당 대구 · 경북 국회의원들이 10일 오전 여의도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만나 영남권 신공항 입지 3월 결정을 촉구했다.

이인기 경북도당위원장과 유승민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국회의원 11명은 영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특히 3월 입지 결정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3월 입지결정이 또 연기된다면 정치적 혼란과 민심이반, 지역분열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므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신공항 입지결정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중략)

이 자리에서 박종근 의원은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1500만 명 인구하고 부산 300만 명의 대결"이라고 전제한 뒤, "3월에 지역 입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지역감정이 격해져 민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무조건 결정하라"고 요구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각각 동남권 신공항입지 선정, 과학비즈니스벨트 위치 선정, LH 본사 분산배치 지역의 경제 사회적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이슈들을 둘러싼 해당 지역의 이해타산에 바탕을 둔 기사들이다.

해당 기사들은 그런대로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제목의 표현들은 기사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감정 · 희망 · 의지 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역 신문으로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사들의 제목은 사실 보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압박, 상대지역에 대한 비난 등의 의미를 함축한 것들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보도기사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사설이나 칼럼 제목을 방불케 하며, 자칫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 또는 심화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에 놓치면 다 죽는다"거나 '민란' 운운의 발언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제목에까지 올려놓은 것은 이성적인 신문 제작 행위로 보기 힘들 정도다.

이러한 기사 제목들은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나아가 해당 신문은 물론 신문 전체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없이 사실 왜곡 · 과장

▲ 2010 - 1155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영남일보 2010년 7월 30일자 3면「"불꺼진 대구, 서울이었다면 폭동까지 일어났을 것"」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년간 분양가의 46%만 내고, 나머지도 2년 뒤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내리면 3천만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형 아파트 한 채를 사면 덤으로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받고 벤츠 승용차 받아가세요." "취 · 등록세 모두 대신 내 드리고, 분양가도 35%까지 할인 받으세요."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고 있는 건설사들이 분양촉진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건 조건들이 애처롭다 못해 눈물겹다.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 5월말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만6천303가구. 전국 미분양 주택 (11만460가구)의 14.8%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2만2천349가구)에 이어 두번째지만, 인구수(대구 248만명 · 경기도 1천172만명)를 감안하면 대구가 경기도보다 3.5배나 많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대구는 1만1천663가구에 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가구를 넘는다. 심각성을 더해주는 수치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은 "만약 서울에서 대구와 같은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면 벌써 수년 전에 폭동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전국의 주택 · 건설업계는 대구의 미분양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해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업체 한 두 곳은 대구에서 건설한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루빨리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건설업체들이 파격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중략)

문제는 파격 할인분양에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준공한 아파트를 빈집으로 놔둘 수 없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자금을 융통시키고 있다.(중략)

분양대행사 장백의 박영곤 대표는 "미분양 단지에서 중대형 평형을 싸게 전세로 내놓으면서 중소형 전세값이 중대형 전세값을 오히려 역전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설사들의 임시방편 미분양 해소책이 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미분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한 부동산 정보업체 대구경북지사장이 밝힌 "만약 서울에서 대구와 같은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면 벌써 수년 전에 폭동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하고, 이를 토대로 '불꺼진 대구'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집어넣어 〈"불꺼진 대구, 서울이었다면 폭동까지 일어났을 것"〉이라는 통단 크기의 대형 제목을 뽑았다.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시장 수요와 경기전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사업을 벌인 건설업체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사는 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마치 이러한 상황이 서울에서라면 폭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른 데에는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치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폭동이라 함은 시민들이 정부나 사회에 불만을 갖고 일으키는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컫는 것으로 폭동의 발생에는 정부나 사회에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또 건설업자들이 스스로 벌인 일의 잘못된 결과를 놓고 정부나 사회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라면 그 또한 아무런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 점은 이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다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도 주장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본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를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도 없는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를 작성한데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제목에까지 반영한 것은 지역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푸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지방신문의 안간힘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의 중대한 왜곡으로서 신문 보도의 정도에서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5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2.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3.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每日新聞 2010년 7월 8일자 1면「영포회 논란… 타깃은 'TK 죽이기'」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7월 9일자 1면「영포회 공세는 'TK죽이기' 마녀사냥」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7월 13일자 1면「박영준〈총리실 국무차장〉의 '반격'/"가만 있다간 공직계 TK인맥 또 씨 마를 판"」제하의 기사, 4면「TK를 '찬밥'으로 만들겠다?」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1. 每日新聞 경북일보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每日新聞)〈영포회 논란… 타깃은 'TK 죽이기'〉=『TK(대구경북)가 사면초가(四面楚歌),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 몰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계기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인규 공직

윤리지원관의 고향이 영덕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TK 출신이 많다는 점을 빌미로 TK 인맥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칠곡 출신으로 오성고를 졸업한 박영준 국무차장과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타깃이다. 야권은 박영준을 넘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까지 전선을 확장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공기업 인사를 담당했던 이승균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격도 거세다.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전 전남지사 후보 등 충청 호남 출신까지 박영준 라인으로 분류해 TK가 마치 악의 뿌리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인물 물갈이부터 하는 게 관행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 출신이고 이명박 정권 창출에 TK가 가장 큰 공을 세운 만큼 TK를 발탁해 전진 배치하는 것은 어쩌면 순리다. 정권 출범 초기 TK 발탁의 중심에 박 차장이 섰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 차장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의 견제를 받아 한동안 야인 신세가 되는 등 힘을 잃었다. 이상득 전 부의장도 '형님 예산' '만사형통'(萬事兄通) 공격에 2선으로 물러났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두 사람에게 대구경북에서는 "이제 집권 후반기가 된 만큼 제역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견제에 맞닥뜨리고 있다.(중략)

그런 TK가 이명박 정권 들어 약진하자 견제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보면 TK, PK(부산경남), 호남이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있다. 최근 수도권이란 새로운 지역 세력이 생기고 있다. TK의 약진은 타지역의 손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영포회 논란이 권력다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목전에 두고 있어 그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TK가 이처럼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란 아마추어식 범죄를 비호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몇몇의 고향이 대구경북이라고 TK가 싸잡아 공격당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방어에 나서지 않는 데는 TK의 내부 분열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로 친이-친박의 분열이다.(중략) TK가 막무가내 식으로 공격당하고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장래 TK의 설 자리조차 없다는 엄혹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일보)=『영포목우회(영포회)에 대한 마녀사냥식 정치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촉발된 영포회 파문은 지난 5일 영포회 전직 회장 등 관계자들이 민주당 당사를 방문하고 '항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 해명함에 따라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이 기획관과 비선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모두 영포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적인 돌출행동에 대해 영일군 포항시 5급 이상 중앙부처 친목모임인 영포회 전체 매도는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곧 '영포 라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나아가 선진국민연대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함께 묶어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무총리실(6일), 청와대(7일)를 잇따라 항의 방문했다.

8일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하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다. 지난 6 · 2지방선거에서 완승한 기세를 몰아 정부 · 여당에 '권력 남용'이란 오명을 씌워 7 · 28 재보선에서도 연승 가도를 이어간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영포회 회원은 아닐지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인맥을 집중 공략하면서 정권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아니지만 2년 전 한나라당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권력 사유화' 발언으로 당시 박영준 국정기획비서관과 이상득 전 부의장을 겨냥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 때문에 박 차장은 한동안 야인 신세가 되는 등 힘을 잃었다. 이상득 전 부의장도 정치 2선으로 물러났다.

두 사람에게 대구 · 경북에서는 "이제 집권 후반기가 된 만큼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전략적 공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중략)

하지만 이인규 사건은 여당 내에서 각 세력들이 자파 이익을 위해 악용해 여당에게 더욱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내각 등 인적 쇄신을 앞두고 본격 제기됐다는 점에서 권력 핵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TK'그룹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단순한 입장차나 견해차에서 오는 마찰이 아니라 권력과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치밀한 계산에 따른 전략적 공세라는 주장이다.(중략)

이번 파문은 이명박 정부의 3년차를 맞아 충성도가 높은 TK지역 인사들이 발탁돼 정부의 성공과 차기 정권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에도 불구, 오히려 더욱 배척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부처의 TK 인사들은 박영준 국무차장의 청와대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역차별을 우려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일보)〈박영준의 '반격'〉=『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12일 자신을 포함한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공기업 등 정부 인사 문제를 논의한다고 주장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소위 '영포라인'과 '선진국민연대'의 정점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박 차장이 자신과 주변을 겨냥해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여 · 야 정치

인 및 언론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통한 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중략)

정치권 일각에서는 2년 전 박 차장과 '권력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6 · 2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비켜가고, TK 인맥의 싹을 자르기 위해 인사 개입 의혹을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선 박 차장에 대해 중앙의 대구 · 경북 출신 공직자들은 그가 TK 인맥을 대표해 '총대'를 멘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사 개입 의혹이 'TK 인맥 죽이기'를 통한 권력투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권 15년 동안 TK 인맥이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살펴보니 중앙공직사회에서 TK 인맥의 씨가 말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겨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가는 상황인데, '엉뚱한' 사건이 터져 자칫 TK 인맥의 씨가 다시 마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하략)』

〈TK를 '찬밥'으로 만들겠다?〉=『최근 민주당이 동원된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유탄으로 인사철을 맞은 관가에서 포항 · 영일 등 TK 배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출신 공무원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실 현재 여권에서 벌어진 갈등 양상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광주 출신인 정두언 의원과 전남 영광 출신인 김대식 후보(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간의 '호남대표 다툼'이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 의원 측이 호남표 분산을 우려해 김 후보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권유했지만, 김대식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 것. 그러자 정 의원 측은 김 후보의 출마가 정 의원을 전대에서 떨어뜨리려는 '범(汎) 박영준파'의 음모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김대식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함께 선진국민연대를 조직해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장본인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 시작된 의혹 시리즈가 '영포목우회' 파문으로 비화됐고, 다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맥으로 분류되는 선진국민연대로 옮아붙으며 박 차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TK 세력이 정조준 되고 있는

것. 여기에 7 · 28 재 ·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선 각종 설을 내놓으며 싸움을 부추기고,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는 두 사람 간 호남대표 다툼의 유탄이 고스란히 대구 · 경북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라 마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50세가 다 된 사람이 시킨다고 듣느냐"며 "그런데도 김 후보의 출마 책임을 박 차장 쪽으로 몰아붙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치 대구 · 경북세력을 부도덕 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이게 되기까지는 그 와중에 반사이익을 노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 영향이 중앙관가에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사철을 앞두고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부처 내에서 역차별을 받을 조짐이 보인다며 불안해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출신 한 공무원은 "지난 정부 15년 동안 대구 · 경북 출신들이 보직관리도 제대로 안될 정도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정권이 창출된 뒤 조금 안도했는데, 이제 정권창출 지역이라고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TK 인맥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기사들은 문제의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그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당시), 이상득 의원 등에 대한 비난이 단순히 문제의 당사자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추궁을 넘어 당 · 정 · 청 등 공직사회의 TK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고향이 영덕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TK 출신이 많다는 점을 빌미로 TK 인맥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 김대

식 전 전남지사 후보 등 충청 호남 출신까지 박영준 라인으로 분류해 TK가 마치 악의 뿌리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매일신문) "청와대와 내각 등 인적 쇄신을 앞두고 본격 제기됐다는 점에서 권력 핵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TK'그룹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경북일보) "정치권 일각에서는 2년 전 박 차장과 '권력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6 · 2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비켜가고, TK 인맥의 싹을 자르기 위해 인사 개입 의혹을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시작된 의혹 시리즈가 '영포목우회' 파문으로 비화됐고, 다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맥으로 분류되는 선진국민연대로 옮아붙으며 박 차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TK 세력이 정조준 되고 있는 것."(영남일보) 등의 기술이 그러한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사들은 스스로의 주장과는 달리 일각의 추정이나 분석 이외에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여 · 야의 문제 제기가 당 · 정 · 청의 TK 전체를 겨냥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그들 중 일부가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중대한 국기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대구 경북지역이 현 정권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에서 TK 인맥의 싹을 자르거나 씨를 말리는 일이 실현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기사들의 이러한 분석이나 주장은 TK정권 하인데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TK인맥들이 상대적 우위의 지위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일부 지역 인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제목이나 소제목에서 보듯이 〈영포회 논란… 타깃은 'TK 죽이기'〉 〈영포회 공세는 'TK죽이기' 마녀사냥〉 〈공직계 TK인맥 또 씨 마를 판〉 〈TK를 찬밥으로 만들겠다?〉 식의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해가며 객관적 설득력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술을 해야 하는 사실보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 ①항(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원 노출로 인권침해 우려

▲ 2010 - 117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종 승

〈주 문〉

東亞日報 2010년 9월 8일자 A12면「이화여고 교사 딸 수학경시 '성적 조작' 논란/스펙쌓기 경쟁 과열… "다른 학교도 없진 않을 것"」 기사와 제목, 한국일보 9월 8일자 12면「교내경시대회도 부모 특혜?/이화여고 간부 자녀 성적 부풀리기 의혹… 시교육청, 조사 착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와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서울 이화여고에서 이 학교 교사의 딸이 교내 수학경시대회 수상 특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화여고가 6월 실시한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교무차장의 딸인 3학년 A양의 성적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이화여고에 따르면 A양은 9등까지 수상하는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공동 9등으로 입상했다. 그러나 평소 A양보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수상하지 못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한 일부 교사들은 답안지를 확인했고 A양 답안의 채점이 지나치게 후한 것을 발견했다. 풀이과정 대부분이 틀렸고 답도 틀렸지만 만점에서 1점만 깎여 3, 4점의 부분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A양의 부모와 친분이 있는 교사가 채점을 전담했다며 학교에 재채점을 요구했다. 방학 중 모든 학생의 답안지를 다시 채점한 결과 다른 학생이 점수를 더 받으면서 A양은 12등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대로 수상을 인정했다. 이 학교 교감은 "교사의 실수로 수상이 결정된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 "수학경시대회 모든 문제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교사마다 채점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양 부모 측은 "이화여고 출신과 타 학교 출신 교사 간의 파벌 싸움에서 나온 모함"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의 교내 경시대회 부정 의혹에 교육청까지 직접 나선 것은 달라진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대학들이 지켜야 할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마련하면서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 등은 주요 전형 요소로 반영할 수 없고, 교내 경시대회 등 학교 활동에 관련된 것만 반영하도록 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내 경시대회 성적이 당락의 절대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하략)』

(한국일보)=『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인 서울 이화여고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학교 간부교사의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실시된 이화여고 수학경시대회에서 이 학교 교무차장의 딸 박모(고3)양의 성적이 부풀려져 결과적으론 수상자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이날 장학사를 이화여고에 급파해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과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따르면, 100% 서술형으로 치러진

수학경시대회는 9등까지 입상대상자였으며, 교무차장의 딸 박양은 문과반 시험에서 공동 9등을 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뒤 평소 박양보다 수학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입상을 하지 못한데다, 문과반 출제와 채점을 도맡았던 교사가 교무차장과 친한 사이인 점 등을 의심한 이과반 채점 교사들이 답안지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표면화 했다.

학교 측의 재채점 결과 입상을 하지 못했던 2명이 9위 이내로 등수가 올라 수상자 명단에 추가된 반면 박양은 12등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수상자를 새로 확정하기는커녕 박양 등 기존 수상자는 그대로 둔 채 순위가 뒤바뀐 2명만 추가로 상을 인정했다.

학부모들은 박양이 3학년이 된 뒤 교내 대회에서 잇따라 상을 받은 점을 들어 일종의 특별관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부모 A씨는 "박양이 입상한 대회 대부분을 어머니인 교무차장과 친분이 있는 교사들이 주관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석중 교감은 "서술형 수학시험에서 부분 점수를 주는 것은 채점관의 재량"이라며 "다른 기준을 제시한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 재채점도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교무차장도 "성적이 최상위권인 딸은 3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아왔고 수학 성적 역시 1~2등급을 놓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시교육청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감사를 청구해 성적 조작 사실이나 교무차장을 음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서울 이화여고 교무차장의 딸인 고3 재학생 A양(한국일보는 박모양으로 표기)이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교무차장과 가까운 사이인 출제 · 채점 교사의 성적 부풀리기로 입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

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다른 수학교사들과 일부 학부모들로 이들의 요구에 따라 재채점까지 실시됐고, 학교 측은 그로부터 한참 후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자 "서술형 수학시험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채점관의 재량이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채점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

당사자인 교무차장은 "성적이 최상위권인 딸은 3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아왔고 수학 성적 역시 1~2등급을 놓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東亞日報는 A양 부모 측이 "이화여고 출신과 타 학교 출신 교사 간의 파벌 싸움에서 나온 모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학교 측이 다른 수학교사들의 요구대로 새로운 채점 기준에 맞춰 채점을 다시 한 결과, A양은 당초 석차보다 불과 3자리 아래인 12등으로 내려간 점으로 미루어 터무니없는 성적 부풀리기는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기사들이 제기한 '성적 조작'이나 '특혜' 의혹도 기사 작성 시점에서는 논란 수준에 머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東亞日報와 한국일보는 이 문제를 보도한 다른 언론들이 이화여고를 익명으로 표기한 것과는 달리 실명을 공개했고, 이에 따라 이화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해당 교무차장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교무차장의 신원이 드러남에 따라 딸인 A양의 신원도 주변 사람들에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고 말았다.

학교 측의 해명대로 단순히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교무차장은 차치하고 A양도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양이 신원 노출에 따라 받을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東亞日報와 한국일보는 '이화여고'의 표기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8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1년 2월 1일자 8면「군 투서 '육군 수사단장 횡령' 사실/투서자는 헌병 병과 후배… 지난해 육군 조사 '부실'로 드러나」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군 장성진급인사를 앞두고 육군본부에 보낸 투서의 내용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해영(준장) 육군 수사단장이 전역서를 전격적으로 제출했다. 이 단장이 수방사 헌병단장으로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육군본부 수사단이 벌인 투서내용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조사를 지휘한 승장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김관진 장관이 투서자 색출을 지시한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1일 "헌병 병과의 황 모 중령이 투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준장이 수방사 헌병단장 시절에 일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투서자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서 조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1월 31일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됐다"면서 "이 준장은 가까운 후배에게 투서를 받은 충격으로 같은 날 전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전역지원서가 수리된 이 준장에 대해 황 중령이 더 이상 공금 횡령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투서자인 황 중령은 내부 고발자로 처리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해영 육군 수사단장(준장)이 수방사 헌병단장 재직 시절에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일부 확인됐고 이에 따라 이 단장이 전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단장의 혐의가 육군본부에 보내진 투서에 의해 포착됐다고 전하면서 투서를 한 사람은 '헌병 병과의 황 모 중령'이라고 밝혔다. 이름은 감춰졌다 하더라도 그 수가 지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헌병 병과의 황 모 중령'으로 표기된 이상 투서자의 신분은 금세 드러날 수밖에 없다.

신분 노출에 따라 투서자가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더불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내일신문은 투서자의 신분 표기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언론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기사

▲ 2010 - 1210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 문〉

경북일보 2010년 10월 13일자 1면 「시내버스 파업 아랑곳 않고 경주시의원 7명 해외 견학」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원 7명이 2천 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6박 8일 일정으로 해외견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경주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 소속 4명과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3명 등 모두 7명의 의원들은 지난 6일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4개국 해외 견학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의원들의 해외 견학은 선진 원자력과 세계 문화유산 운영 및 관리실태 등을 비교 견학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 입장료 등 1인당 3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수행 공무원 2명과 함께 해외 견학에 나선 의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방폐물 처리실태를 견학하고 스위스의 원자력 발전시설, 이탈리아의 로마 교황청 및 바티칸 국립박물관 등의 견학이 방문일정에 포함돼 있다.

이번 유럽방문은 6대 경주시의원들이 단체로 나서는 첫 외국 방문이지만 경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아랑곳 않는 외유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출국한 지난 6일에는 경주지역 시내버스인 '천년미소' 노조의 전면파업이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노조 측은 올해 단체협약이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친 협상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마저 결렬되자 지난 4일 파업 출정식을 가진 후 3일 후인 9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시의원들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해외 견학을 강행했다.

더욱이 이번 외유 의원 가운데 3명은 시내버스 관련 해당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오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대책'과 관련해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는 이들 의원 7명이 빠져 다소 썰렁한 분위기를 보이면서 일부 시민들은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어디 갔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경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경주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견학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들 시의원들의 해외견학 목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는지 쓸데없는 관광성 외유라는 식의 비판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되어 있고, 7명 중 3명은 시내버스와 관련이 있는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이라는 점만을 들어 이들의 해외견학 강행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시내버스 파업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사용자와 노조 간의 문제이지만 공공의 이해가 관련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의회 의원들까지 확정된 일정을 취소해야 할 만큼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판에 대한 경주시의회나 경제도시위원회 측의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 작성한 일방적인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29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全羅日報 2010년 10월 26일자 1면「또 새만금 해수유통 '대못질'」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는 환경부가 해수유통을 공식 거론함에 따라 그 동안 잠잠했던 해수유통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중략)

문제는 이번 환경부의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란을 거듭해 온 새만금 해수유통이 공식 거론됐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이날 공식 발표에 있어 지난 10일부터 장비이동 등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새만금호의 수위가 해발 (-)1.6m까지 낮춰지게 되면 그 결과 바닷물의 유통량이 감소되면서 호내 정체수역이 형성되고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수질오염이 심화될 경우 배수갑문(해수유통)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준설 및 이송 공법을 적용해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는가하면 오탁 방지막과 다단계 침사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정부와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과 관련, '상향 조정된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수질 관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등의 해수유통 논란을 의식한 모호한 표현을 썼던 반면 이번 환경 가이드라인에서는 해수유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 도민들의 눈과 귀를 의식해 해수유통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다가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해수유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수유통이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중략)

결국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당초부터 반대해 온 환경부가 새만금 내부개발에 사업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수유통을 끝내 관철시켜 새만금 전체 사업의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논리를 앞세워 새만금 생태 · 환경용지 구간 방수제 미축조 결정으로도 내부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부가 이제는 해수유통이라는 최대 난제를 가지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환경부가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 일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다.

기사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당초부터 반대해 온 환경부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수 유통을 끝내 관철시켜 새만금 전체 사업의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될 전망〉〈환경논리를 앞세워 새만금 생태 · 환경용지 구간 방수제 미축조 결정으로도 내부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부가 이제는 해수 유통이라는 최대 난제를 가지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 기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환경부의 이 가이드라인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제목에서도 환경부의 조치를 내부개발을 막는 〈'대못질'〉 이라고 못 박고 있다.

기사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재해에 대한 우려는 철저히 도외시해, 결국 해수 유통 차단을 통한 내부개발만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독자의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의 수준에서 일탈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신문사의 주관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범행수법 구체적 묘사

▲ 2010 - 122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제신문 발행인 이 정 섭

〈주 문〉

국제신문 2010년 10월 26일자 8면「촛농 · 터보라이터로 차털이」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촛농과 터보라이터를 이용해 차량 잠금장치를 부수고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차량과 체육관을 범행 대상으로 전자제품과 현찰 등 수백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께 수영구 광안동의 한 길가에 세워진 정모(40) 씨 소유의 승합차량 조수석 뒤 플라스틱 소재 유리창문 고리를 양초와 터보라이터로 녹인 뒤, 잠금장치를 부수고 1만 3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차량에 침입해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중략)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달 20일 수영구 광안동의 한 사찰에 침입했다

가 석불상 앞에서 훔친 양초 2개와 문이 열려 있던 차량에서 훔친 터보라이터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는 최신 차량이 아닌 뒤쪽 미닫이 창문 잠금장치가 플라스틱으로 된 승합차량은 플라스틱 부위에 열을 가한 뒤 커터칼을 이용하면 잠금장치를 쉽게 해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촛농과 터보라이터로 차량털이 범행을 해온 20대 청년이 경찰에 붙잡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내용 중에 〈이 씨는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는 최신 차량이 아닌 뒤쪽 미닫이 창문 잠금장치가 플라스틱으로 된 승합차량은 플라스틱 부위에 열을 가한 뒤 커터칼을 이용하면 잠금장치를 쉽게 해체할 수 있었다"고 진술〉이라고 기술, 이 청년이 촛농과 터보라이터로 차를 터는 수법과 범행이 손쉬운 차량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또 〈한 사찰에 침입했다가 석불상 앞에서 훔친 양초 2개와 문이 열려 있던 차량에서 훔친 터보라이터를 이용〉이라고 기술, 범행에 사용한 양초와 터보라이터를 어떻게 구했는지도 적었다.

이처럼 범행 도구의 입수 방법과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자세히 적은 것은 본의 아니게 유사한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커서 이 기사는 범죄사건 보도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차별과 편견의 금지

-소수자 등에 대한 편견

▲ 2010 - 1111 신문윤리강령 위반
慶南日報 발행인 이 연 근

〈주 문〉

慶南日報 2010년 5월 4일자 1면 「'아시아나' 지역 갈등 조장하나」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慶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이 적자를 이유로 사천~김포간 노선 폐지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폐쇄될 것으로 알려졌던 전남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서부경남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남 무안공항~김포공항 노선은 탑승률이 사천공항의 절반가량 수준인데도 아직 노선폐지와 관련한 움직임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천~김포 노선에 하루 한 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왔으나 이용객들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사천공항의 폐쇄절차에 착수해 국토해양부에 노선 휴지신고(7~10월)를 제출해 지난달 26일자로 수리됨으로써 사실상 노선폐쇄가 공식화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국내 공항중 적자폭이 가장 커 사천공항과 함께 노선폐쇄가 불가피하다던 전남 무안공항 노선(무안~김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전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차원에서 무안노선은 살려두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사천공항 노선과 함께 무안공

항 노선도 7월부터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는 소식은 접했으나 아직 신고가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부경남주민들은 "탑승률이 40%인 사천공항 노선폐쇄는 서두르면서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무안공항 노선은 살리는 것 아니냐"하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천지역의 한 기업인(56)은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라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올 1/4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데 너무 기업이익만 내세우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고 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공편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부경남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감안해 사천~김포 노선 운항 중단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적자 운행을 이유로 사천~김포간 노선 폐지를 추진하면서 같은 이유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던 무안~김포 노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사천공항 노선과 함께 무안공항 노선도 7월부터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는 소식은 접했으나 아직 신고가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도 "전남 무안공항 노선(무안~김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전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차원에서 무안노선은 살려두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아시아나 측에 무안~김포 노선 폐지 여부를 확인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 간접적으로 문의한 뒤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에 불과하다. 기사는 또 아시아나 측이 해당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천~김포 노선 폐지에 따라 경남지역 주민의 불만이 일고 있는데 대한 아시아나 측의 입장 등에 관해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다.

이 같은 기사 작성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30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0년 11월 9일자 17면「올겨울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자〉'되려면 컬러를 버려라」제하 기사 중「WORST 이정현 '차도녀'보다는 연변아가씨?」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블랙에 퍼를 걸친다고 다 '차도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정현에게서 알 수 있다. 요즘도 이 길이가 나오는지 의심스러운 맥시 원피스에 그레이 퍼를 둘렀다. 레드 악어클러치와 깔맞춤한 입술색깔, 어깨 한쪽으로 늘어뜨린 긴 머리가 '차도녀'보다는 연변아가씨 쪽에 가깝다. 헤어를 깔끔하게 묶거나 미니드레스로 가녀린 몸매를 드러내는 편이 나았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올 겨울 여성들에게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자)'라는 컨셉의 차림새가 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인기 연예인들의 옷맵시를 비교 · 평가하면서 '워스트'로 꼽은 가수 이정현의 스타일을 '연변아가씨'로 묘사했다.

제목은 「WORST 이정현 '차도녀'보다는 연변아가씨?」로 달고, 기사도 "'차도녀'보다는 연변아가씨 쪽에 가깝다"라고 표현했다.

문맥으로 미루어 '연변아가씨'는 '촌스럽다' '세련되지 못하다' '투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묘사는 '연변아가씨'로 함축되는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의 처지에서 보면 가슴 아픈 비하이며 모욕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은 위 기사는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본분을 일탈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는 '언론인은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준칙

1.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 · 편집자의 주관적 의견 표현

▲ 2010 - 1081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0년 3월 29일자 17면 「車산업 발목잡는 '철' 없는 금속노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올해 임단협의 주요 중앙교섭안으로 '국내 및 해외 생산 비율제'와 '원 · 하청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 공유제 시행' 등을 내세움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금속노조의 요구가 차 산업의 발목을 잡아 올해 노사교섭을 장기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지난 23일 발표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은 개별 사업장의 해외생산 비율 통제와 함께 '심야노동철폐 및 교대제 변경',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의 1%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성과공유제 시행' 등을 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현대 · 기아차의 국내공장과 해외공장 생산실적은 각각 51대 49, 75대 25의 비율인 데 비해 올해는 각각 49대 51, 65대 35로 해외생산 비율을 높게 잡고 있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해외생산 비율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략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해외생산 비율제에 대해 경영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업계는 국내 공장이 해외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때만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호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장은 "중국, 인도와 같이 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의 경우, 현지생산이 아니고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금속노조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내 내수시장이 연간 120만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해외생산 비율을 낮추면 국내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분석이다. 국내 생산만으로는 폭스바겐, 혼다 등과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미 폭스바겐(63.4%)과 혼다(66%) 등은 해외생산비중이 60%를 넘어 현대 · 기아차보다 높다.

한편 금속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주야 맞교대제를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며, 연간 노동시간을 2700시간으로 규제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현대 · 기아차 쪽은 "금속노조가 생산성 및 품질향상 협조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 주장하는 것은 변형된 임금인상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금속노조가 당기순이익 증가비율만큼 신규채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업계는 "신규채용은 기업의 투자계획과 경영전략 등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쌍용차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듯 강성 노조가 유연한 인력운영을 저해하면 기업 경쟁력 저하와 기존 직원의 고용불안을 촉발한다"며 "금속노조 산하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강력하고 투쟁적인 노조로 생산과 인력운영이 경직적이며 인건비 부담도 과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주요 중앙교섭

안으로 타결이 쉽지 않은 주제를 내걸어 올해 노사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제목에서 〈금속노조가 '철'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금속노조라는 성격 때문에 '철'을 홑따옴표 속에 넣어 중의적 표현을 쓴 듯하다. 그러나 그 표현의 발상 배경이야 어떻든 이 기사가 나간 시점은 금속노조가 합법적으로 임단협의 교섭안을 내놓고 아직 사측과 교섭도 개시하지 않은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 입장에 기울어져 기사를 작성하고 금속노조에 대해 〈'철'이 없다〉는 식으로 지레 가치판단을 한 것은 편집자의 사견을 지나치게 앞세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동 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08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 문〉

중앙일보 2010년 4월 8일자 6면 「'천안함 국회'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국가 위기 상황인데… 일부 의원, 오락가락 추궁에서 황당한 주장까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천안함의 격실이 밀폐되지 않은 상황이면 장병들이 (침몰 이후) 10분이

라도 살아있었겠느냐."

7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던진 질문이다. 함미 쪽이 침몰한 이후 격실의 환풍기를 통해 바닷물이 들이닥쳤을 것이란 주장을 펴면서다. "밀폐된 공간에서라면 최대 69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란 국방부의 예측이 틀렸을 것이란 얘기다. 이 의원은 "군이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허위보고한 것 아닌가"라며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한주호 준위를 죽음으로 몰고간 보고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절절한 바람을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극은 단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69시간이 아닌 69분 동안 (함미에) 물이 다 차서 장병들이 그 물 속에 잠겼을 수도 있다"며 "한 준위의 주검 앞에 무슨 낯을 들어야 할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두 의원은 '함미 쪽 장병들이 이미 숨졌을 텐데 군이 헛된 기대감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식으로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타이타닉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배엔 특정한 공간에 사람이 숨쉬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실종자를 단 한 명이라도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두 의원의 추궁은 천안함 침몰 직후 정치권이 "왜 적극적인 구조작업에 나서지 못하느냐"며 군을 질책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경우 2일 긴급현안 질의에서 "(잠수사) 2명씩 들락날락하며 어떻게 46명을 구조하느냐. 어린애 장난인가"라고 호통친 적도 있다.

천안함 침몰이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원들은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때론 '참을 수 없이 가볍기도' 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풍경도 그랬다.

일부 의원은 침몰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정부 측을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 군에 의한 도발이 너무도 명백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부가) 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가정법을 쓰면서 정부를 공격했다. 그는 "(정부가)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음모설을 탓하고 언론들을 탓하고 군사기밀의 엄중함을 내세워 막다

막다 안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느냐"며 "북한 군부 내 강경파의 도발 가능성을 흘리며 또다시 책임 전가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황당한 논리로 공세를 펴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 총리에게 "만약 아버지 정운찬이 자신의 아들이 천안함에 실종돼 13일간 갇혀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정희 의원은 "새떼가 남북한 간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천안함 침몰 직후 속초함이 격파사격한 것을 두고 북한이 도발로 판단, 해안포 사격으로 응사했다면 남북간에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었다.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지 않도록 쐈다"는 해명은 무시한 셈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천안함이 침몰한 직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오락가락하는 추궁에서부터 황당한 주장까지 폈다는 취지로 그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지적한 사례 중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던진 "69분 동안(함미에) 물이 다 차서 장병들이 그 물 속에 잠겼을 수도 있다. 한주호 준위의 주검 앞에 무슨 낯을 들어야 할 지 생각해보라"는 말의 취지는 나중에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발생 초기에는 사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두루 제기되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다른 관점의 의견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러한 발언이 '오락가락'의 전형적 사례라거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못박기는 어렵다 하겠다.

게다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새떼가 남북한 간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황당한 주장'으로 지적했다. 이 기사는 그 이유로서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쐈다"고 한 해명을 들고 있으나 전면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 제기한 질문을 '황당하다'거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083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4월 5일자 A10면「현대차 노조간부 등 27명 상습 도박판 벌이다 '덜미'」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를 포함한 울산지역 대기업 직원들이 별도의 도박장을 마련해놓고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월 2~3차례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 18명과 택시기사 등 27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박모(47)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9)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울산 남구 달동과 삼산동, 북구 진장동 등 3곳에 원룸을 빌려 도박장을 차려 놓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낀 연휴 등을 이용해 속칭 '섰다'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판돈 규모는 회당 수백만~수천만원씩 총 3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판에 낀 현대차 직원들 가운데 2명은 노조 대의원이며, 이 중 1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현대차 직원은 작년 하반기

부터 동료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올 초부터 월급을 압류당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가 특수 표시된 화투와 특수 렌즈 등 사기도박에 이용되는 기구를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 18명을 포함, 27명이 울산에서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핵심은 울산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차 직원들이 무더기로 도박판에 끼었다는 것이겠지만 취재기자와 편집자는 현대차 노조대의원 2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주목한 듯하다.

취재기자는 노조대의원을 '노조간부'로 표현해 기사 리드를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를 포함한 울산지역 대기업 직원들이…"로 시작했고, 편집자는 제목을 「현대차 노조간부 등 27명 상습 도박판 벌이다 '덜미'」라고 달았다.

하지만 노조간부란 통칭 노조집행부의 간부를 일컬으며, 노조대의원은 그냥 대의원이라고 부를 뿐 노조간부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대의원은 500명에 이르고, 문제의 노조대의원 2명이 저지른 도박행위는 개인적 범법행위일 뿐 노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위 기사와 제목은 이들 노조대의원 2명을 현대차 노조간부로 표현해 마치 노조도 이 사건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을 했고, 이는 현대차 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토대로 기사와 제목을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085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0년 4월 14일자 5면 「"거대한 적 '대학 · 국가 · 자본'에 작은 돌을 던진 것"/고려대 자퇴생 김예슬씨 인터뷰」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오후 7시 경향신문사를 찾은 김예슬씨(24 · 여)는 밝게 웃었다.(중략)

- 많은 대학생들이 대기업 하청업체가 된 대학에 절망하면서도 트랙에서 계속 경주를 이어간다. 실존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용기라기보다는 끝이 안 보였다.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결혼을 하면, 뭐 하면, 뭐 하면…. 언제까지 트랙에서 경주마로 달려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은 보이는데 내 영혼은 등을 돌려 불화하기 시작했다. 아파야 나으니까. 나부터 끝도 없는 트랙에서 멈춰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큰 물음을 할 수 있도록 특권처럼 주어진 게 대학 시절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불가능해진 시대다. 대학(大學) 없는 대학이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지 않은가."(중략)

- 일각에서는 대학 내에서 대학을 바꿔보는 운동을 해볼 수도 있지 않으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른바 '극단적인 선택'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대학 내에서 대학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중요하고 그런 분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대학은 공고해진 하나의 거대한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됐다. 기업에 인재를 조달하고 채용 일제고사를 기업 대신 실시해 등급을 매기고 있

다. 대학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상황에서 안에서 바꾸는 것 이외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성적경쟁의 의자에 앉아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지금의 삶이 되레 더 극단적인 것 아닌가."

– 대학거부 선언 후에 많은 '각주'들이 달렸다.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이 붙은 것 같다.

"우리 세대의 현실 문제를 88만원이라는 숫자로 풀어낸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88만원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숫자만으로 담을 수 없는 진실이 축소되고 단순화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대학 거부선언 이후 88만원 세대의 저항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88만원을 188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등록금을 인하하고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모든 배움을 독점한 의무교육 제도, 자격증 유일잣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우리 사회 진보는 몸으로 살아내고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진보는 아닌 것 같다. 더 나아가 대학 · 국가 · 시장의 3각동맹이 공고히 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명, 도시 · 기계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 의무교육이 아닌 대안적인 배움의 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안 대학의 구체적인 상은 어떤 것인가.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있었다. 인간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 나라 교육의 목표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모든 사람들이 인적자원화의 과정을 겪어 대학과 기업에 차근차근 보내지는 것이 의무교육의 실체다. 의무교육 문제는 말 그대로 배움의 권한을 국가가 독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과정 속에서 배우고 겪는데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잘 이수해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받게 된다. 또 의무교육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은 처음부터 패배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 대안 대학은 구체적인 상을 이거다라고 제시하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알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나. 문예창작과를 가지 않고도 시를 쓸 수 있고, 미대를 안

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편리를 위해 개성이 무시되는 걸 인정해선 안 된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고려대 자퇴생 김예슬 씨의 인터뷰를 한 면에 걸쳐 게재했는데 김씨의 발언 중 한 대목을 인용부호를 사용해 〈"거대한 적 '대학 · 국가 · 자본'에 작은 돌을 던진 것"〉이라고 전단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거대한 적'이라는 표현은 김씨의 발언 중에는 보이지 않는다. 본문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뷰에서 "…더 나아가 대학 · 국가 · 시장의 3각동맹이 공고히 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명, 도시 · 기계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말처럼 대학 · 국가 · 시장을 '거대한 3각동맹'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위 기사의 제목처럼 '거대한 적 대학 · 국가 · 자본'이라고 규정한 것은 개념상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편집자의 사견에 꿰맞춘 왜곡된 제목이라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제목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086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0년 4월 8일자 9면「한명숙 선고 D-1…또 다른 '정치자금 의혹' 어떤 영향?/韓 '고비' 넘더라도 '산'이 기다린다/내일 재판과 직접 연관 없

지만 도덕성 · 신뢰성에 타격」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9일 예정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릴 전망이다. 검찰이 새로 포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이번 공판과 별건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번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곽 전 사장 진술 신빙성이 관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큰 줄기의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곽 전 사장은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한 전 총리가 보는 앞에서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곽 전 사장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골프채 선물과 한 전 총리의 곽 전 사장 소유 제주 골프빌리지 무상 사용 사실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해 왔던 한 전 총리는 공판 과정에서 곽 전 사장과 청탁이 오갈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정황 증거들에 대해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도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혐의 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듯=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건설 시행사 H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 수수 사건은 6 ·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집중심리를 진행한 만큼, 검찰이 새 혐의에 대한 별도 증거를 9일 선고에 앞서 제출한다고 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검찰도 9일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지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5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과 별개로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혐의가 특정되면 별도 기소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 9일 선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새로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쓴 해설기사이다.

이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은 유 · 무죄를 미리 판단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검찰이 새로 내놓은 '또 다른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은 더욱 더 사건의 진상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기사분문은 새로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아무런 예단도 하지 않았으나 제목에서는 '내일 재판과 직접 연관 없지만 도덕성 · 신뢰성에 타격'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였다.

이 같은 제목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8일자 5면 「생존장병 기사회견 軍 득 · 실은/잃은

건 신뢰…얻은 건 동정?/'환자복' 패잔병 연상 지적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군당국은 7일 환자복을 입은 채 고개를 떨군 생존 장병 56명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동정 여론을 얻고, 신뢰를 잃었다.

이날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57명의 천안함 생존 장병이 환자복을 입고 깁스를 하거나 휠체어에 탄 채 자리를 지켰다. 차디 찬 바다에 남겨진 동료 생각에 어두워진 표정은 TV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끝내 눈물을 흘린 최원일 함장의 모습은 국민에게 착잡한 심경을 안겼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여가 지나도록 생존 장병 증언 공개를 꺼렸던 군은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는 극적인 기자회견으로 동정 여론을 얻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는 "생존 장병들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말자"는 의견이 속속 올라왔다. "군을 흔들어봐야 좋을 것이 없다"며 의혹 제기를 자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분당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동료를 잃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더 숨기겠느냐"며 "생존 장병들의 증언을 믿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30여분간 판에 박은 듯한 답변만 계속하는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신뢰를 안겨주기에는 부족했다. 생존 장병들이 증언한 사고 시간 '21시22분'은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 군당국의 주장을 답습하는 듯했다.

생존 장병들이 '쿵' '쾅'하는 소리 묘사까지 곁들여 생생히 증언한 사고 당시 경위도 사고 원인이 내부 폭발이 아닌 외부 충격인 것으로 보인다는 군당국의 관측에 부합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본 60대 남성은 "미리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군이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느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대했던 의혹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국민은 군이 동정심을 자극하는 생존 장병들의 모습을 내보내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열을 지어 앉은 장병들의 모습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경계업무를 담당했다는 당당한 군인이 아닌 패잔병이나 죄인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천안함 생존 장병 기자회견 당시 그들의 모습과 증언내용, 기자회견장 분위기, 몇몇 네티즌과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군 당국은 "동정여론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신뢰 상실의 이유로 "판에 박은 듯한 답변"을 지적하면서 "생존 장병들이 증언한 사고 시간 '21시 22분'은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 군 당국의 주장을 답습하는 듯했다", "생존 장병들이 '쿵' '쾅'하는 소리 묘사까지 곁들여 생생히 증언한 사고 당시 경위도 사고 원인이 내부 폭발이 아닌 외부 충격인 것으로 보인다는 군 당국의 관측에 부합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와 '군 당국의 주장', '군 당국의 관측'에는 핵심 조사대상인 생존 장병들의 진술내용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생존 장병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내용 등과 일치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군이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라고 하겠다.

특히 기사 가운데 "기대했던 의혹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국민은 군이 동정심을 자극하는 생존 장병들의 모습을 내보내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는 문구는 불특정다수인 '국민'을 내세워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본 60대 남성'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대목은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기자와 데스크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작성됐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이 같은 보도행태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전문 및 ②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3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0년 11월 11일자 5면「눈도장 찍는 잠룡들/박근혜-메르켈, 정몽준-캐머런/김문수-룰라 등 만남 이어져」기사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대권 '잠룡'들과 방한한 각국 정상들 간 만남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평소 닮은꼴 정치인들로 주목을 받았던 터여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회동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는 메르켈 총리의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단독 면담을 갖는다.

두 사람의 만남은 메르켈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 독일을 방문, 당시 야당인 기민당의 메르켈 당수와 처음 만났다. 박 전 대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메르켈 총리는 라이프치히대 물리학과를 나온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란 점 외에 여성으로서 야당 대표를 거쳤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이날 오전 영국 대사관저에서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또한 캐머런 총리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각각 서울대 · 미 존스홉킨스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모두 공부한 엘리트형 정치인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시장경제론자이지만, 기후변화 등과 같은 중도적 글로벌 이슈와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공식 만찬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조우를 기대하고 있다.

서로 약속된 별도 회동은 아니지만, 김 지사는 만찬 중 자신이 꿈꾸는 '롤모델'인 룰라 대통령과 비공식 접촉을 가질 생각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낮 12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만나 러시아 내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 문화재 조사 및 국내 전시 등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러시아는 인천 지역에 모스크바대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분교 설치 등에 합의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선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국내 정치인들이 잇따라 외국 정상들과 만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눈도장 찍는 잠룡들〉이라는 기사제목은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며

본문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유이다. '눈도장을 찍는다'는 뜻은 '눈짓으로 허락을 얻어내는 일이나 상대편의 눈에 띄는 일을 이르는 말'(인터넷 다음의 국어사전)이다.

대선 예비후보들이 외국 정상들로부터 허락을 얻거나 그들의 눈에 띄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굳이 풀이하자면 대선 예비후보들은 외국 정상들과 만남으로써 국내에서 주요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것이 위 기사의 취지라 하겠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54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全羅日報 2010년 12월 7일자 13면「완주군의 '이상한 체육행정'」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도체육회는 6일 완주군이 인라인롤러 팀을 해체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완주군은 최근 정읍시 실업팀 해체를 계기로 재정 부담과 도 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있어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주군의 팀 해체는 체육인과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완주군은 전북현대 선수로 2008년 3월 은퇴하고 강원으로 떠난 최진철 선수가 운영하고 있는 축구 아카데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 보조금이 적다며 실업팀을 해체한 완주군은 최진철 축구 아카데미에

2008년 3200만 원, 2009년 3600만 원, 올해 3520만 원 등 1억 원 넘게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철 선수가 현재 완주나 도내에 머물고 있다면 다를 수 있겠으나 전북 출신도 아닐뿐더러 현재 프로축구 강원에서 코치를 지내고 있다. 완주군은 방과후 교실로 운영하며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업팀보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최진철 축구 아카데미에 지원한 것에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운영상에서도 문제가 생겨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축구교실에 지원할 돈이 있으면 실업팀에 지원했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또 완주군이 해체 이유로 들고 있는 재정 부담은 완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못한 지역의 실업팀은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23.5% (2010년 기준)로 군 지역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북도보다 높아 도 보조금 지원과 재정 부담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

완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단체장은 실업팀을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정읍시에 이어 완주군이 실업팀을 해체할 경우 도내 시군 단체장들도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좋은 완주군도 해체하는데 라며 생각 할 때 도미노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전북도는 완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실업 팀 5개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재정 압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완주군은 정읍시가 팀을 해체하자 인라인롤러를 해체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북 완주군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인라인롤러 팀을 해체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다.

기사는 △완주군이 전북현대 선수로 2008년 3월 은퇴하고 강원으로 떠난

최진철 선수가 운영하고 있는 축구 아카데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23.5% (2010년 기준)로 군 지역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북도보다 높으며, △완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단체장도 실업팀을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전북도는 완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실업팀 5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완주군의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 〈최진철 선수가 현재 완주나 도내에 머물고 있다면 다를 수 있겠으나 전북 출신도 아닐뿐더러 현재 프로축구 강원에서 코치를 지내고 있다. 완주군은 방과후 교실로 운영하며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업 팀보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최진철 축구 아카데미에 지원한 것에 뒷말이 무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뒷말이 무성하다〉는 기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 기술은 완주군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지자체나 전북도도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완주군이 안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사는 완주군의 실업팀 해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결정이 잘못이라는 시각에서 완주군의 결정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사의 제목은 이 같은 기사 내용보다도 한 걸음 더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신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하기보다는 기자와 해당 신문사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정 상 태

〈주 문〉

스포츠서울 2011년 1월 20일자 1면「도박 빚 어쩌고 명품 걸쳤나/신정환 귀국 차림새 '뭇매'/코믹한 모자-값비싼 옷치장/아프다던 다리상태도 '의혹'」기사와 제목, 2면「"고개 숙인 순간 모자에 기만당한 느낌"/300만 원짜리 패딩에 명품 청바지 귀국 패션/"반성도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다" 네티즌 발끈」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도박 빚 어쩌고…〉=『억대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한 지 5개월 만에 대중 앞에 선 방송인 신정환(36)이 귀국하자마자 구설에 휘말렸다.

19일 오전 김포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신정환은 명품으로 치장한 패션과 함께 초췌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을 빗나간 말끔한 행색이었다. 이날 신정환은 고가의 블랙 패딩 점퍼와 청바지 차림, 그리고 등산화에 배낭을 멨다.

특히 복면 스타일의 캐릭터 비니까지 착용해 많은 네티즌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더구나 마음고생과 교통사고 때 다쳤던 다리 등으로 인해 낯선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측근들의 전언과 달리 신정환은 그다지 불편해보이지 않는 걸음걸이와 담담한 표정으로 귀국해 지난해 9월 '뎅기열 거짓말'에 당한(?) 많은 팬의 의혹을 샀다.』

〈고개 숙인 순간…〉=『'뎅기열 거짓말'의 여파일까. 원정도박파문 뒤 5개월 만에 귀국한 방송인 신정환(36)을 보는 네티즌들의 시선이 따갑다 .

신정환은 19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하네다발 JAL91편을 타고 김포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필리핀 세부에서 홍콩, 네팔을 거쳐 일본까지 해외를 전전하

는 동안 경제적인 궁핍, 건강악화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던 차에 이뤄진 전격적인 입국이었다.

하지만, 공항에 나타난 신정환의 모습은 다소 의외였다 .

수염자국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건강한 혈색의 얼굴에 복면 비니, 검은색 뿔테안경, 두툼한 점퍼와 청바지, 등산화를 신어 스키여행이라도 갈 듯 한 차림이었다 .

2009년 11월 오토바이사고 때 다친 오른쪽 정강이뼈 부상이 악화됐다는 소문과 달리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없었다. 목발이나 휠체어의 도움 없이 입국장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고, 대기하고 있던 호송차로 이동할 때도 부축 없이 걸었다 .

건강한 신정환의 모습이 공개되자 '다리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나'며 네티즌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정환의 옷차림이 고가의 브랜드 제품 일색인 점을 꼬집으며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눈과 코만 내놓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비니도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300만 원하는 몽클 패딩에 디퀘 청바지에. 이건 무슨 바보가 아닌 이상 입국사진 뜨면 이런 얘기 나올 줄 예상했을 텐데. 꼭 저렇게 명품 바르고 입국해야 되나?',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모자에 기만당한 느낌'이라며 쓴 소리를 했다 .

신정환은 100여명의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룬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허리 굽혀 인사한 뒤 "제가 못난 놈인 것 같습니다 . 많이 혼나겠습니다. 많이 혼내주십시오"라고 사죄의 말을 전했으나 입국장에서의 모습에 따가운 눈총만 받았다 .

지난해 9월 '도박을 하지 않았다. 뎅기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다 보니 신정환의 돌연한 귀국과 사과에 대해 의혹의 시선도 더해지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병원에서 거짓 인증샷 안하고 한국에 와서 달게 벌 받았으며 이 상황까진 안 왔을 텐데', '전혀 반성도, 진심도 느껴지지가 않는다. 단지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만 같다'는 반응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으며 5개월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다 지난 1월 19일 귀국한 방송인 신정환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을 전한 스트레이트 및 스케치 기사이다.

기사는 신정환의 차림새에 초점을 맞춰 〈신정환은 고가의 블랙 패딩 점퍼와 청바지 차림, 그리고 등산화에 배낭을 멨다. 특히 복면 스타일의 캐릭터 비니까지 착용해 많은 네티즌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고 전했다.

2면에는 신정환이 걸친 점퍼와 청바지, 등산화, 복면비니, 백팩 및 뿔테안경의 상표와 가격을 일일이 소개한 전신사진이 기사 옆에 실렸다.

스포츠서울은 신정환의 행색에서 뉘우침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면 통단 제목을 「도박 빚 어쩌고 명품 걸쳤나」라고 단 데서도 그 같은 의도가 읽힌다.

그러나 설사 신정환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귀국길 옷차림을 반성이나 뉘우침의 척도로 삼은 것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 점퍼에 청바지라면 일반적인 여행객의 옷차림으로 봐 넘겼을 법한데도 굳이 브랜드까지 시시콜콜 따져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객관적 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까발리기식' 과잉보도라고 할 것이다.

문제의 옷가지들은 신정환이 평소 입던 것들로 신정환의 요청에 따라 매니저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일부 언론은 같은 날짜에 보도했다.

따라서 스포츠서울은 사실의 전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기 보다는 기자와 신문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객관적 근거 없는 비난

▲ 2010 - 1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주 문〉

全北日報 2010년 4월 13일자 5면 「정원산업개발, 도내 최고층 주상복합 건립사업/계약금만 내고 승인요청 '뻔뻔'」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도내 최고층으로 들어서는 주상복합건축물이 토지대금이 미납된 채로 후속절차가 진행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효자동2가 1157-1번지 일대에 지하2층, 지상2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주)정원산업개발이 올 현재까지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납한 채 지난 2일자로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아파트 규모, 배치 등이 담긴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개발 사업자가 부지 소유자로부터 부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정원산업개발은 사업승인을 받아낸 뒤, 금융권 등에서 토지대금을 빌리거나, 건축물 착공, 입주자 모집절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토지 매입비 228억 원의 90%를 차지하는 중도금 68억 원과 잔금 136억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이들이 토지 매입비를 납부한 것은 지난해 8월20일 사업부지 1만218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낸 계약금 22억(토지비의 10%)이 전부다.

애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째인 지난해 12월19일에 중도금(30%), 이후 3개월째인 올 2월19일까지 잔금(60%)을 납부해야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사업부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유증을 동반할 전망이다.

건축 관련 전문가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공사 중단사태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비를 완납하지 않아도 사업승인은 나갈 수 있지만, 주민정서 등 현실여건을 감안해 보다 심도있게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정원산업개발이라는 기업이 전주 시내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대금 중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업 승인을 요청해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일은 이 기업과 토지소유주 간의 사적 거래의 문제이며, 기사 중에 인용한 시 관계자의 말대로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사업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적법하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승인이 날 수도 있는 일이다.

또 이런 유의 PF사업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기사는 리드부분에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익명의 '건축 관련 전문가'의 말을 빌려 "공사 중단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제목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뻔뻔'하다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과 제목은 이 기사가 객관적인 사실보도라기보다는 정원산업개발에 대해 악의를 품고 작성한 기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한국경제 2011년 3월 3일자 A3면 지면 문패「정운찬 또 '反시장' 발언」과「애플이 이익 70% 돌려준다니…"오히려 개발자 몫 30%나 챙겨"」기사의 제목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① 초과이익은 경제학에 없는 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협력사 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에 대해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 달 23일 자신이 주장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듭되자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중략)

④ 해외사례 곡해

정 위원장은 이익 공유제의 사례로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들었다. 콘텐츠 판매로 얻는 수익의 70%를 개발자가 가져가는 구조인 만큼 넓은 의미의 이익 공유제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정 위원장이 애플의 수익 구조를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이 수익의 70%를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콘텐츠 업체들의 이익 중 30%를 가져가는 구조라는 얘기다. 한 소프트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한 일은 앱스토어라는 콘텐츠 장터를 마련한 것 뿐"이라며 "30%라는 앱스토어 이용 수수료가 비싸다는 게 콘텐츠 개발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역할이 제한적인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동등한 잣대를 놓고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신문은 1개 지면 전체를 할애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발언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면에 6개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모든 기사가 정위원장 개인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비판하였다.

특히 이 지면 전체의 문패를「정운찬 또 '反시장' 발언」이라고 붙인 것은 지나치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위원장 본인은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또 이 발언을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 내부에서 "반시장적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예 '反시장'이라고 전제한 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제작 태도라고 하겠다.

또 머릿기사의 제목「애플이 이익 70%를 돌려준다니…"오히려 개발자 몫 30%나 챙겨」는 기사 분문과는 다른 내용이다. 기사본문에 따르면 한 소프트업계 관계자가 "애플이 한 일은 앱스토어라는 콘텐트 장터를 마련한 것 뿐"이라며 "30%라는 앱스토어 이용 수수료가 비싸다는 게 콘텐츠 개발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개발자들의 몫을 30%나 챙겼다는 말과는 다른 내용이다.

위 기사 지면 문패와 제목은 기사 전체의 정확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저해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방의 의견만 반영

▲ 2010 - 1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 문〉

머니투데이 2010년 4월 13일자 2면 「KBS "합의위반 SBS 고소"/■방송사, 스포츠중계권 갈등 새 국면/"SBS 비밀 단독계약, 막대한 국부 유출"」 제하의 기사, 4월 15일자 5면 「"SBS, 앞에선 공동중계 뒤에선 단독플레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KBS "합의위반 SBS 고소"〉=『KBS가 SBS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12일 KBS는 올림픽 · 월드컵 등 굵직한 스포츠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낸 SBS에 대해 '협의위반'이라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KBS는 방송3사가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중계권 협상에 나선 배경과 그 과정에서 SBS가 단독으로 중계계약을 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KBS는 우선 SBS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독점계약 과정의 부도덕성을 강조했다.

2006년 5월30일 KBS, MBC, SBS는 코리아풀을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그러나 SBS는 코리아풀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해 중계권을 따냈다. 게다가 SBS는 단독구매를 위해 3사 공동으로 합의하기 전인 5월8일 IB스포츠와 비밀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BS는 SBS의 △3사 사장단 코리아풀 준수 합의 △IB스포츠와 비밀 단독계약 △코리아풀 입찰가 인지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단독계약 한 것을 '3중

플레이'로 규정짓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대현 KBS 부사장은 "SBS가 사장단 합의를 깨고 몰래 단독계약을 해 막대한 국부 유출은 물론 국가적 행사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중략)

이준안 KBS 법무팀장은 "SBS가 MBC를 포함해 방송국의 손발을 묶어놓고 비밀리에 단독 구매를 진행한 것은 KBS와 MBC의 입찰을 방해한 것"이라며 "협상과 별도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BS, 앞에선 공동중계 뒤에선 단독플레이"〉=『(전략) KBS와 MBC는 지난 12일과 13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SBS가 월드컵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상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보였다며 날을 세웠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보였다.(중략)

KBS와 MBC가 SBS에 맹공을 퍼붓는 이유는 이랬다. 방송3사는 그동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경기를 공동중계하기 위해 '코리아풀'을 구성했고, 이 '코리아풀'을 통해 중계권을 따냈다. 적어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올해 밴쿠버 동계올림픽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SBS만 동계올림픽을 중계할 수 있었고, KBS와 MBC는 SBS에 제공받은 방송화면을 뉴스에 한해 내보낼 수 있었다. 지난 2월28일 KBS가 '김연아 스페셜'을 방영한 데 대해 SBS는 바로 다음날 "특집방송에 경기동영상을 일절 사용하지 말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해 여론의 비난을 샀다.(중략)

방송3사의 '코리아풀' 응찰액이 정해진 이후인 6월15일, SBS는 IOC를 직접 방문해 7250만달러에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내는데 성공했다. SBS의 중계권료는 코리아풀 응찰액 6300만달러보다 950만달러가 많았다. SBS는 8월7일 FIFA가 제시한 입찰기준액보다 무려 2500만달러 많은 1억4000만달러에 남아공월드컵 중계권까지 단독으로 거머쥐었다.

KBS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사수주하듯이 코리아풀의 입찰가를 알고 더 높은 금액을 써내 중계권을 따냈다"며 "게다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 SBS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자회사 SBS인터내셔널을 통해서 계약했다"고 폭로했다.

SBS의 이중플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KBS와 MBC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SBS는 공동중계를 위해 협상하라는 방통위 권고가 나온 직후에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은 "SBS는 단 한번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가치산출이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는 것은 공동중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연희 MBC 스포츠제작단장도 "SBS가 자율협상에서 회의내용 언론보도 금지, 녹음 · 녹취금지, 제3자 개입금지 등을 요구했고 이를 위반하면 협상결렬로 간주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협상촉구 공문을 보내니 '공문을 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협상에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기사들 가운데 4월 13일자는 KBS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낸 SBS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다룬 스트레이트 기사다. 4월 15일자는 KBS와 MBC 두 방송사가 SBS를 상대로 민 · 형사 소송을 제기키로 한 배경과 경위, 그리고 KBS와 MBC 두 방송사의 주장을 두루 묶은 해설성 기획기사다.

하지만 위 2건의 기사는 다툼의 한쪽 당사자인 KBS와 MBC의 주장과 비난 내용을 충실히 소개했을 뿐 상대방인 SBS의 반론과 주장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특히 KBS가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S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고, 상당수 언론들은 KBS 기자회견에 덧붙여 이를 보도했지만 위 기사들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 과정에서 악화된 지상파 TV 3사 간의 갈등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을 탓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다툼의 한쪽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보도행태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비난성 의견을 제목으로

▲ 2010 - 110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26일자 1면「국민 애도 기간… 총파업이라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측은 26일 "지난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이 찬성하면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며, "천안함 등의 정국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찬성률"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총파업을 목적으로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재적대비 53%, 투표인원 대비 67% 정도 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속노조는 유급 노조 전임자의 활동 시간 보장을 위해 이번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유급 노동시간 상한을 결정하는 타임오프(Time-off)는 결국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 이를 막기 위한 파업 찬반투

표를 진행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파업 수위와 구체적인 전술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위한 찬성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천안함 정국에서 당초 계획했던 28일 총파업을 결행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에서도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이번 쟁의행위에 반대한 상황에서 기아차 GM대우 등이 적극적으로 파업에 가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금속노조 소속 각 사업장에서 총파업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파업안이 가결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 기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주로 파업결정 과정과 향후 일정 등을 건조한 문체로 전달한 전형적 스트레이트 보도 형식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위 기사는 현장 사업장의 이 같은 파업 결정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천안함 국가 애도 기간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금속노조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인용부호도 없이 「국민 애도 기간… 총파업이라니…」라며 강한 비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반영했다.

이는 개탄조의 사설제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33 신문윤리강령 위반
江原日報 발행인 이 희 종

〈주 문〉

江原日報 2010년 11월 5일자 1면 「오색로프웨이 설치 당연하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이달 중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등 전국 8개 국립공원 13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로프웨이(삭도) 모델사업 대상 선정 작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침체된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가 모델사업에 우선 선정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색로프웨이는 수십 년간의 설악권 숙원사업으로 로프웨이 모델사업 선정 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국립공원별 시 · 군 간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다.(중략)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모델사업 대상 최종 선정이 어렵겠지만 조만간 열리는 회의에서 모델사업 심사기준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달 25일 회의에서 "내륙 및 해상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1~2개씩)을 선정해 우선 허용하고 구체적인 허용 개수 및 대상 공원은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중략)

이에 따라 2002년부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한데다 국회 등에서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환경 대책을 마련한 오색로프웨이는 모델사업 선정의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설악권 4개 시 · 군은 2008년 도의 중재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지역의 로프웨이를 오색~관모능선에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진호 양양군수는 "오색로프웨이는 1995년부터 공론화돼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논의를 거치며 성공적인 '모델사업'이 될 만큼 충분히 준비돼 있

다"며 "설악권은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전략에서도 '국제 관광교류 거점'인 만큼 오색로프웨이가 모델사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江原日報의 위 기사는 정부가 국립공원 내 로프웨이 모델 사업 대상 선정 작업에 나섰다는 사실과 함께 오색 로프웨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양양군 등 설악산 주변지역의 주장을 다룬 기사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현재 모델사업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단계에 와 있으며, 그 후 국립공원위원회가 내륙 및 해상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1~2개씩)을 선정해 우선 허용하고 구체적인 허용 개수 및 대상 공원은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양양 오색로프웨이가 우선 모델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도 기사는 "오색로프웨이는 1995년부터 공론화돼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논의를 거치며 성공적인 '모델사업'이 될 만큼 충분히 준비돼 있다"며 "설악권은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전략에서도 '국제 관광교류 거점'인 만큼 오색로프웨이가 모델사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 이진호 양양군수의 말을 토대로 〈오색로프웨이 설치 당연하다〉라고 제목을 뽑았다.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이 같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기사의 제목이 아니라 사설 또는 칼럼의 제목을 방불케 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61 신문윤리강령 위반
江原日報 발행인 이 희 종

〈주 문〉

江原日報 2010년 12월 2일자 1면「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오대산으로 와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조선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을 원소장처에 봉안하기 위한 대규모 심포지엄이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조선왕조실록 ·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주최하고 새평창포럼과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조선왕조 500년의 넋을 담다'를 주제로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사무처장인 혜문 스님을 비롯해 신명호 부경대 교수, 배현숙 계명문화대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이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서는 오대산 사고본 환수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 범도민 운동의 일환으로 사인벨트와 서명인 명부를 제작, 서명운동도 함께 실시한다.

오는 6일에는 춘천 베어스관광호텔 2층 소양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이 반환하기로 한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궤가 원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로 돌아와야 할 당위성에 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소개하는 기사다. 내용은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실 보도인데도 제목은 기사 내용에도 없는 주장을 담은 표현으로 심포지엄 발제 논문이나 관련 사설 제목을 연상케 한다.

사실 보도 기사의 제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2.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주 문〉

每日新聞 2011년 1월 5일자 1면「국토부, 공항개발 투자액 90% 인천공항 쏟아붓다니…/'투 포트' 추진의지 있나」기사의 제목, 경북매일 1월 6일자 1면「'눈폭탄' 맞은 포항 특별재난구역 선포해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每日新聞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每日新聞)=『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는 반면 동남권신공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서술밖에 없어 '투 포트'(Two Port) 시스템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5일 항공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남권신공항의 경우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간략하게 명시돼 있다.(중략)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시각은 계획안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KTX와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망의 지속적인 발달로 내륙 수요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반면, 제주노선과 국제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항공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그렇다. 수요가 빈약해 신공항 건설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후략)』

(경북매일)=『69년만의 눈 폭탄이 쏟아진 포항지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는 눈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 농가 비닐하우스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소방방재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할 방침이다.(중략)

재난 피해 시 포항시의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기준액은 38억 원이며, 38억 원의 2.5배에 해당하는 95억 원이 돼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그러나 5일 현재 5시 포항시의 잠정 피해액 집계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후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각각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포항시의 폭설 피해규모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들이다.

기사들은 사실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기술된 데 비해 제목들은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한 주장 내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제목들은 기사 내용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설 또는 칼럼에나 어울리는 표현으로 신문기사의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3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중앙신문 발행인 이 창 승

〈주 문〉

전북중앙신문 2011년 2월 1일자 3면 「LH 유치전 정파 떠나 사활 걸어야」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중앙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유치와 관련, 정부의 최종 결정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의 결정이 늦어도 2월말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LH 분산 배치 및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전북은 마지막 힘을 다할 각오다.

△도-정치권, 출향민의 총력전= LH 유치를 위해 전북은 지난 한 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범도민유치위원회 등 사회 각계에서도 LH의 분산 배치를 강하게 촉구해 왔다.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강력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설 연휴는 전북의 분산 배치 방침을 홍보할 수 있는 최대 기회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연히 전북 발전을 위한 LH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중략)

△여야, 정파 떠나 모두가 한 목소리= LH 유치를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 또 정파도 관계없다. 범전북인은 모두 무조건 LH 유치의 전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출향 전북인을 포함한 500만명의 전사가 LH 유치전에 적극 나선다면 못 이룰 이유가 없다. 특히 LH 유치를 위해서는 정파나 계파가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

특정 정파나 계보의 유불리를 떠나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최근까지는 전북의 중심정당인 민주당이 LH 유치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평화민주당 등 여타 정당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 전북 내 이견 차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치권의 엇갈린 주장이 도-정치권의 힘을 뺄 수 있어서다. 도-정은 전북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은 과감하게 묵살하고 한 목소리로 LH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 전북 분산배치는 당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지역이 2월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산배치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다.(중략) 실제로 전북은 경남보다 두배 이상 낙후돼 있고 재정 자립도나 지역소득 수준에서도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낙후돼 있는 게 사실.

지역경제의 총화라 할 수 있는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 만 봐도 전북은 1천688만 원(2008년 기준)인 반면, 경남은 2천 392만 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 경남 대비 전북의 비율만 따져보더라도 70.6%에 불과하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당초 토지공사 이전이 예정됐던 전북 전주시와 주택공사 이전이 예정됐던 경남 진주시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전북과 경남의 도세를 간접 비교한 여러 수치들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지역정서에 치우쳐 균형감각을 상실한 주장을 격앙된 목소리로 전하는 바람에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기사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또 위 기사 본문은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도록 뒤섞어 작성한데다 〈LH 유치전 정파 떠나 사활 걸어야〉라고 스트레이트 기사에는 피해야 할 의견성 표현을 제목으로 달아 신문기사라기보다는 선전용 전단을 방불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갈등을 확대재생산할 우려마저 낳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부매일 발행인 박 성 규
2. 大邱日報 발행인 이 태 열
3.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4.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5.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6.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7.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주 문〉

중부매일 2011년 3월 1일자 1면 「과학벨트 충청이 최적지 정치적 오판 국가적 손실」 기사의 제목, 大邱日報 3월 2일자 1면 「정두언 또 '영남권 신공항' 딴지」 기사의 제목, 경북매일 3월 3일자 1면 「신공항 '원점 재검토' 안된다/영남권, 한나라 지도부 잇단 거론 사과요구/정부에 제대로 하라 촉구 할판에 딴죽 걸어」 기사의 제목과 소제목, 경북일보 3월 3일자 1면 「'아전인수' 정두언」 기사의 제목, 영남일보 3월 3일자 1면 「'정두언 무책임한 입' 영남권 분노」 기사의 제목, 3월 5일자 1면 「수도권론자들의 '망국적 패권주의'」 기사의 제목 및 소제목, 3월 11일자 3면 「김형오 私心도 작용했나/李대통령 공약 총괄 불구 "신공항 재검토" 망언」 기사의 제목, 每日新聞 3월 4일자 1면 「"대통령 굳은 약속 왜 가로막나"/여당지도부 신공항 무용론 잇단 망언」 기사의 제목, 3월 9일자 1면 「수도권 '무용론' 차단 부산도 함께 팔걷자/잇단 망언에 좌초위기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기사의 제목과 소제목, 3월 10일자 1면 「밀양이든, 가덕도든…백지화는 안된다」 기사의 제목, 全北日報 3월 18일자 1면 「프로야구 제10구단 지역 안배 필요하다」·「새만금 '일괄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속도내야」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7개 신문의 적시 기사들은 각각 해당 지역의 이해가 얽힌 중대한 현안인

과학벨트, 신공항의 건설, 프로야구 구단 신설 등에 관한 보도들이다.

기사들은 해당 현안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 이에 대한 반응 등을 다루면서 본문 내용 중에 있는 〈과학벨트 충청이 최적지 정치적 오판 국가적 손실〉 〈딴지〉 〈딴죽걸기〉 〈'무책임한 입'〉 〈망언〉 등 지역내 특정인사나 단체 등의 주장을 큰따옴표도 없이 제목으로 달아 그러한 주장들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거나, 〈신공항 '원점 재검토' 안된다〉 〈수도권 '무용론' 차단 부산도 함께 팔 걷자/잇단 망언에 좌초위기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백지화는 안된다〉 〈지역 안배 필요하다〉 〈새만금 '일괄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속도내야〉 등에서 보듯이 사실 보도 기사가 아닌 사설이나 칼럼 제목을 능가하는 제목을 각각 달았다.

이러한 편집행태는 사실보도와 주관적 주장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신문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의 공신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없는 예단으로 단정적 제목

▲ 2010 - 115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8월 3일자 1면 「G20은 선진국 진입 마지막 호기/기회 놓치면 후손에 '역사의 죄인'」 제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회는 남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과장급 인사가 방한해도 버선발로 마중나가던 변방의 약소국이 전 세계 국가원수들을 서울로 불러모아 의장으로 회의를 이끈다. 늘 남의 잔치에 객이었던 우리나라가 떡 하니 큰 상을 펼치고 귀빈들을 맞게 됐다. 40년 공직에 이 같은 영광은 없다.

강대국들이 만든 규칙을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했던 처지(규칙 준수자, rule taker)에서 우리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나가는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탈바꿈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G20 서울 정상회의는 명실상부한 세계 중심국 반열에 오를 역사적 전기다.

이미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 경제의 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미국과 유럽이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룩한 것이어서 더 값지다. 여기에 G20를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를 만방에 알리면 경제는 날개를 단다. G20의 성공적인 개최가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관문이 되는 이유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국제공조 체제하에서 선도국가의 역할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 역을 맡게 되는 일은 쉽지 않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주목하고 의장국으로 합의해 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잔치가 성과 없이 소동으로 끝나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선조가 된다.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셈이다. 역사적 과오다.

지금 사회는 온통 친서민 바람이 뒤덮고 있다. 성장의 온기가 서민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G20에도 관심과 열기가 필요하다. 친서민이 G20에 그늘을 드리워서는 안 된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그 규모나 파급효과 면에서 그동안의 어떤 국제회의와도 비교가 어렵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과 함께 지역 대표와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명의 정상급이 참석한다. '경제 월드컵'을 개최하는 셈이다.

수행원과 경호원, 취재진 등을 합하면 오는 손님이 1만명을 훌쩍 넘는다.

국가 인지도와 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능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와 우리 기업의 인지도가 같이 높아지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천안함 사태로 고조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콘텐츠 면에서 얼마나 알맹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다.

다행히 G20에 생소하던 일반인들의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는 모습이다.

최근 마감한 서울 정상회의 민간 의전 지원요원 선발에 경쟁이 치열했고, 뽑는 중인 행사지원 인력에도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과거 100년간 전쟁에 의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후진국이나 개도국은 없다. 이제 그 일을 대한민국이 해내려는 시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G20 행사와 관련한 기획기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은 사설과 같은 의견기사처럼 강한 주장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주장 중 일부는 미래에 대해 지나친 예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과장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본문 중 "G20의 성공적인 개회가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관문이 되는 이유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선조가 된다. 후손에게 죄를 짓는 셈이다. 역사적 과오다" "친서민이 G20에 그늘을 드리워서는 안 된다"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며 제목 또한 위의 내용을 요약해 뽑았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불명확한 취재원, 부실 취재

▲ 2010 - 1134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0년 6월 14일자 2면 「UN 안보리 이사국들 "NGO가 국가외교 방해… 한국, 참, 웃기는 나라"」 기사의 내용과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참여연대의 서한 전달이라는 돌발 악재가 터져 나왔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요청하려는 순간, 난데없이 시민단체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여기에다 같은 시기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보리에다 반박 브리핑시간 할애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와 북한측이 협공으로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특히 각국의 유엔 대표부는 참여연대의 행동에 상당한 놀라움과 당혹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국의 시민단체가 국익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일부 이사국들은 "한국에서는 비정부기구(NGO)가 국가 밖에서도 정부의 일을 방해하느냐"면서 "정말 웃긴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사국은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외교전쟁의 최일선에서 자국 국민이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반

박하는 것이다. 마치 군인들이 목숨 바쳐 싸우는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희생을 비웃는 결과와 비슷하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참여연대가 서한을 발송한 시점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14일 오후 안보리 이사국에 합동조사단이 비공개브리핑을 하고 집중 설득에 나서기 직전이다. 우리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전에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된 셈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도 "황당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유엔 안보리에 정부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사실상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 그래도 중국이 한국민의 30%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주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중국으로 보내 천안함과 관련한 설득외교를 벌였으나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당장 북한측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북한측은 참여연대 서한이 발송된 즈음에 안보리에서 반박 브리핑을 하겠다고 의장국에 요청했다. 북한측은 한국 내 시민단체마저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안보리 논의에서 합조단의 브리핑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한 뒤 속전속결 처리수순을 예상해왔다. 이르면 6월 중으로 안보리에서 천안함 논의를 끝내고 대북 조치를 끌어내려 했으나 내부문제 제기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악재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안보리 안팎에서 남북한간의 공방도 치열해질 조짐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의 의문점을 추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전자서한으로 전달한 데 따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응을 다루었다.

문화일보는 전자서한을 받은 이사국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일부 이사국들은 "한국에서는 비정부기구(NGO)가 국가 밖에서도 정부의 일을 방해하느냐"면서 "정말 웃긴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사국은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기사 중 위 대목은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일부 이사국들'이라는 익명의 불특정 다수를 내세우고 있다. 거기에다 기사 문장 역시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의 간접인용문을 사용하고 있어 취재원 역시 모호하다. 문화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은 과연 누가 한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것인지 행위의 주체나 취재원 모두 아리송하다. 기사 내용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제목은 이처럼 불명확한 내용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행위의 주체에 대해 '이사국들'이라고 그 범위를 더 넓혀 표현하면서 이들의 반응은 인용부호를 사용해 전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사실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편집지침」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7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송 대 수

〈주 문〉

스포츠서울 2010년 7월 31일자 18면「'하룻밤 대가' 고급 청바지 두벌로 만족/집안 좋은 女연예인이라 돈 욕심 없어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바지 하나면 OK!" 현재 활동중인 연예인 A가 고급 프리미엄진 두 벌을 선물 받고 하룻밤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A의 경우 '엄친딸'까지는 아니어도 집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몇몇 연예계 관계자들은 "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가 아쉬울까?"라는 반응이었는데요. 더욱이 A와 하룻밤을 보낸 사람은 아버지와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기업가로 알려졌어요.

이에 대해 한 측근은 "A가 그냥 1~2시간 놀고(?) 수십만원짜리 청바지 두 벌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히려 A에 대해 '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별 생각이 없는데다 돈 욕심도 없기 때문에 청바지로 떼운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예가 화젯거리 등을 모은 가십기사들 가운데 하나로 연예인 A씨가 청바지 두벌을 선물로 받고 아버지뻘 되는 사업가에게 '하룻밤'을 허락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기사는「'하룻밤 대가' 고급 청바지 두벌로 만족/집안 좋은 女연예인이라 돈 욕심 없어서?」라는 제목하에 본문에는 "별 생각이 없는데다 돈 욕심도 없

기 때문에 청바지로 때운 것"이라는 '한 측근'의 발언을 덧붙여 거액의 돈을 매개로 한 성거래가 연예계에 자주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단순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때에 따라서는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활동 중인 연예인이 아버지뻘 되는 기업인에게 고급 청바지 두벌을 받고 '하룻밤'을 허용했다면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위 연예인 A씨와 같은 추문은 사안의 성격상 본인이나 상대방이 발설하지 않는 한 외부에 알려질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위 기사는 선정성만 물씬 풍길 뿐 기사 작성의 기본인 6하원칙을 지키지 않아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용만 놓고 보면 취재 경위는 물론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마저 불분명하다.

연예계를 선망하는 독자들에게 안겨줄 충격과 실망감, 그리고 이런 일과는 무관한 다수 연예인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포츠서울은 취재와 보도에 보다 신중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및 ②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1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1년 1월 31일자 1면「청와대 특명 "설 밥상에 '아덴만' 올려라"/군수송기로는 설 전 '해적수송' 불가능하자 UAE에 'SOS'/물가 · 구제역 · 전셋값 설민심 악화 우려에 대통령까지 나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UAE 왕실전용기까지 동원돼 소말리아 해적이 압송된 데는 "설 연휴 전 해적을 데려와야 한다"는 청와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상반기 민심방향을 결정짓는 '설 밥상'에 물가나 구제역 대신 '아덴만의 여명'을 올리겠다는 홍보 전략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21일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성공한 이후 이 분위기를 2월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덴만 작전 직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작전과정을 총력홍보하고 △설 명절 전까지 석해균 선장을 비롯한 부상 선원과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한 뒤 △2월 중순 이후 최영함과 삼호주얼리호를 귀항시켜 '아덴만 이슈'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 성공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이나 국방부가 '작전보안유출'이란 비판까지 감수하며 홍보에 매달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설 밥상에 어떤 이슈를 오르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민감한 사안이었다. 여권은 구제역과 물가를 둘러싼 '반여 민심'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설을 전후해 '민심 도농교류'가 이뤄지면 반MB · 반한나라당 정서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 입장에서 '아덴만의 여명' 작전 성공은 이런 악재를 한꺼번에 만회할 호재인 게 분명하다. 급할 것도 없는 해적수송에 전력을 기울인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삼호주얼리호가 오만 무스카트항 해역에 이르자 해적 수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검토한 것은 민항기나 전세기를 이용하는 안.

그러나 승객 격리 문제와 '민항기 1대에 여러 명의 범죄인을 호송할 수 없다'는 국제규정 때문에 어렵게 됐다.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은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방안. 국방부는 지난 25일 군

용기를 보내기로 하고 군수송기인 C130 1대를 준비했다. 그러나 군용기는 항로상 여러 국가들에 영공비행허가를 받아야 해 설 이전까지 해적수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 안도 전격 보류됐다.

이어 검토된 안이 인근 UAE의 왕실 전용기를 이용하는 안. 왕실기는 대통령 전용기와 마찬가지로 '군용특별기'로 간주돼 민항기나 군수송기가 지켜야 하는 국제규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직접 냈고, 평소 가까운 UAE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협조를 요청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설 이후에나 입국할 듯했던 5명의 소말리아 해적들은 UAE왕실 전용기에 실려 지난 30일 김해공항으로 압송됐다. 이 대통령까지 나선 정부의 총력전 끝에 설명절 직전 '아덴만 해적수송 작전'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아덴만의 여명'이 정부 의도대로 설 밥상을 차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지나친 홍보 전략이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들을 지난 1월 30일 UAE 왕실전용기를 동원해 국내로 압송한 것은 '설 밥상'에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올려 물가와 구제역 등으로 악화될 수 있는 여론의 흐름을 여권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청와대 특명 "설 밥상에 '아덴만' 올려라"」라고 큰 제목을 달아 청와대가 특명을 내린 것으로 단정했다.

기사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성공한 이후 정부는 그 분위기를 2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이나 국방부가 '작전보안유출'이란 비판까지 감수하며 홍보에 매달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는 이런 저런 정황만 열거했을 뿐 '설 전'이라고 기한을 특별히 정해 놓고 해적 압송 등을 청와대가 명령했다는 데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같은 폭로성 기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정보 제공자의 언급 정도는 소개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도 기사는 UAE 왕실전용기 이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직접 냈고, 평소 가까운 UAE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협조를 요청해 성사됐다"는 '정부 핵심관계자'의 설명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정부 핵심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부분 언론에 실렸던 내용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미루어 짐작은 가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담당 기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실인 것처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0조「편집지침」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67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 문〉

한겨레 2011년 2월 8일자 9면 「"남는 밥 좀 주오" 글 남기고 무명 영화작가 쓸쓸한 죽음」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단칸방에는 채 마르지 않은 수건이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온기는 느낄 수 없었다. 이미 가스가 끊긴 지 오래여서 음식을 해 먹은 흔적도 없었다. 마실 물도 남아 있지 않았다.

설을 앞둔 지난달 29일, 유망한 예비 시나리오 작가 최아무개(32 · 여)씨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의 월셋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 몇 달째 월세가 밀린 상태였다. 형편을 딱히 여긴 인근 상점 주인들이 외상을 주기도 했지만 최씨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깡마른 상태로 숨진 최씨를 발견한 사람은 같은 다가구주택에 살던 또 다른 세입자 송아무개(50)씨였다.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 최씨는 사망 전에 송씨의 집 문 앞에 이런 내용의 쪽지를 붙여 놓았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송씨가 음식을 챙겨 왔지만, 이미 최씨의 몸은 싸늘해진 상태였다. 최씨가 누운 자리 옆으로 열이 식은 전기장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동네 주민들도 최씨의 모습을 본 지 사나흘이 지났을 때였다.

송씨의 신고를 받은 안양시 만안경찰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던 최씨가 수일째 굶은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일하던 영화계에 이런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그의 지인들 사이에서는 최씨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몬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탄식이 쏟아졌다. 극소수를 제외한 예비 영화인들은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든 대우를 참아내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씨의 선배인 한 현역 영화감독은 "신인 작가들은 2000만 원 정도인 계약금의 극히 일부만 받고 시나리오를 일단 넘긴 뒤 제작에 들어가야만 잔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제작사가 좋은 시나리오를 묶어두기 위해, 기약도 없는 제작 일정까지 작가 같은 약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씨는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영화과(시나리오 전공)를 졸업한 뒤 실력을 인정받아 제작사와 일부 시나리오 계약을 맺었지만, 영화 제작까지 이어지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영화화된 것으로 보면) 나는 5타수 무안타", "잘 안 팔리는 시나리오 작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지난 1일, 최씨의 유가족들은 충남 연기군에 있는 은하수공원에서 최씨를 화장했다. 박종원 한예종 총장과 이창동, 김홍준 교수를 비롯해 한예종 영상원 동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유가족들에게 건넸다.

최씨를 아꼈던 선후배들은 그가 직접 쓰고 연출한 단편영화 〈격정소나타〉 상영회와 유작 시나리오 읽기 등 추모 모임을 열 예정이다.

최씨의 작품을 좋아했다는 후배 작가 윤아무개씨는 트위터에 추모글을 남겼다.

"그녀의 〈격정소나타〉는 단편 시나리오를 쓸 때마다 내겐 훌륭한 참고서 같은 영화였다. 언젠가 판을 기웃거리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가 구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행복하시기를."』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기사에는 최아무개로 표기)씨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다가구주택 1층 월세집에서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다가 지난 1월 29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다.

한겨레는 최씨의 어려웠던 형편을 두루 전하면서 최씨가 사망하기 전 이웃에 사는 송아무개 씨 집 문 앞에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놓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안양시 만안경찰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던 최씨가 수일째 굶은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이 같은 설명에다 쪽지 내용을 덧붙인다면 최씨는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고 굶주리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편집자는 쪽지 내용 중 '남는 밥'에 초점을 맞춰 「"남는 밥좀 주오" 글 남기고 무명 영화작가 쓸쓸한 죽음」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위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에 인터넷 신문인 '민중의 소리'가 이웃 송씨에게서 입수해 사진과 함께 보도한 쪽지의 내용은 한겨레의 기사 내용과

상당 부분 달랐다.

최씨는 쪽지에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한겨레가 보도한 쪽지 내용 중 "창피하지만" "며칠 째 아무 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 등 표현은 없다. 민중의 소리는 〈최작가가 가끔씩 2층집 송씨에게 쌀과 김치 등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최씨가 쌀과 김치를 얻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최씨가 굶주림 때문에 숨졌다고 추정하는 것도 무리라고 할 것이다. 최씨의 지병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먹어도 배는 고프고 몸은 말라가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취재기자가 문제의 쪽지를 직접 보지 못하고 그 내용을 취재원으로부터 듣기만 한 것이라면 취재원의 설명을 인용부호를 활용해 전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보도태도라고 할 것이다.

위 기사는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과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홈페이지 게시글 사실 확인 없이 보도

▲ 2010 - 1178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8월 23일자 10면 「중노위원들도 폭언 · 막말 물의/"월급 주는 사장 말 들어라" 인신공격 · 무성의 심리 일쑤/중앙노동위 노동위원

대상 홈피 등에 성토 목소리 빗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의장의 저급하고 수준 낮은 질문과 다그침에 놀라웠습니다."(해고 구제 신청 심리 받은 K씨)

"졸지를 않나, 인상이 어쩌고저쩌고 않나 등 참 한심하더군요."(현대차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한 J씨)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비등한 가운데 노동분쟁을 다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거친 말투에 대한 비난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언어폭력 수준에 달하는 다그침은 물론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무성의한 심리 준비 등 노동분쟁 관련 '판사' 역할을 해야 하는 중노위 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지적이 한둘이 아니다.

중노위 위원들의 태도와 발언을 비난하는 글은 중노위 홈페이지(www.nlrc.go. kr) 자유게시판에 집중적으로 제기돼 있다. 일례로 K씨는 지난달 중순께 중노위 공익위원 의장의 저급한 질문을 문제 삼는 글을 올려놨다.

K씨는 "공익위원 의장이 '임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그럼 누구의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다그쳤으며, '대표이사가 돈을 주니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식에 황당하고 당황했다"며 기분 나빴던 기억을 서술해놓았다.

J씨는 지난 6월 말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얼굴 생각만 하면 밥맛 떨어져 5*kg* 감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의 사건번호(중2010부해276)까지 밝힌 J씨는 "(위원들의 발언이) 가관이더군요. 졸지를 않나. 인상이 어쩌고저쩌고를 (거론하지) 않나. 참 한심하더군요. '존심 꿀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기술했다. 그는 또 "자격도 없는 위원들 앞에서 심판받은 게 정말 수치스럽다"는 격양된 반응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 다른 K씨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의 부당해고 관련 심리를 마친 뒤 "재수

없게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공익위원에게 걸렸으며, 노동자 이유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은 듯 증거까지 명확한 자료를 왜 자꾸 물어보는지 (알 수 없다)"라며 푸념 섞인 이야기를 게시했다.

현재 노동분쟁을 담당하는 중노위 위원으로는 총 161명이 활동 중이다. 유명 대학교수는 물론, 노동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고위 공무원 및 법조인 등이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용자 위원은 기업인 출신이 많고, 근로자 위원은 노조 출신 인물 중심으로 위촉돼 있다.

이들은 심리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노사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 3명과 사용자 위원 1명, 근로자 위원 1명이 참석해 각종 심리회의를 진행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친 말투에다 무성의한 태도를 일삼아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중간에 "중노위 위원들의 태도와 발언을 비난하는 글은 중노위 홈페이지(www.nlrc.go.kr) 자유게시판에 집중적으로 제기돼 있다"고 소개한 것처럼 담당기자는 중노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취재원으로 삼아 기사를 작성한 듯하며, 편집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중앙노동위 노동위원 대상 홈피 등에 성토 목소리 빗발」이라고 작은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중노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올 초부터 위 기사가 나온 8월 23일까지 자유게시판에는 모두 53건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중노위원들의 말과 태도를 문제삼은 글은 3명이 작성한 7건에 불과했다. 특히 위 기사에서 'J씨'로 소개된 사람은 혼자 5건을 게시했는데, 위 기사 보도 이후에도 'J씨'는 중노위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 · 판정하는 기관으로, 노사 쌍방의 이해가 수시로 맞서다보니 조정 · 판정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불만과 비

난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노위 자유게시판에 비난의 글이 올라왔다면 이해당사자 양쪽의 의견은 물론, 중노위원 등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의 말까지 모두 들어봐야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위 기사를 취재한 기자는 단지 게시판 글 내용을 발췌해 기사로 재구성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비난의 당사자인 해당 중노위원들의 해명을 듣는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이해 당사자 중 한쪽의 주장에만 의존해 작성한 편파적이고 과장된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및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선정보도의 금지

-자극적 제목 독자 호기심 부추겨

▲ 2011 - 103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1년 1월 20일자 17면「남성에겐 크기보다는 굵기!」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의 '크기'일까, '굵기'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가늘고 길게'보다 '짧고 굵게'란 마초이즘에 손을 들어줘야 할 듯싶다. 일반적으로 길이에 방점을 찍는 남성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말이다.

늘푸른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은 "실제 여성의 쾌감대는 질 입구로부터 약 3분의 1지점, 즉 3cm 정도에 몰려있다"며 "남성 성기가 크다고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길이 연장에만 집중해서는 남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며 "성기가 지나치게 크면 여성에게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작은 남자들을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음경 왜소 콤플렉스'를 앓고 있는 남성들에게 희망적인 말이다.

지난 연말 행복한성문화센터(소장 배정원)가 기혼 여성 포털사이트 '아줌마 닷컴'과 함께 40세 이상 중년 여성 224명을 대상으로 한 성생활에 관한 조사에서 중년 여성 10명 중 7명이 "성생활이 인생 만족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그만큼 성생활에 대한 오해는 부부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칸은 위 기사에서 남성의 성기를 소재로 삼아 〈큰 것보다는 굵은 것이 여성을 더 만족시킨다〉며 매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제목도 「남성에겐 크기보다는 굵기!」 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오래 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다뤄진 사안을 별다른 계기도 없이 자극적인 제목을 곁들여 보도했다는 점에서 오로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기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답변의 기회

-비난받은 당사자의 해명 반론 없어

▲ 2010 - 1095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주 문〉

경인일보 2010년 4월 6일자 1면 「학교 창호공사 특정업체 특혜의혹/도내 교육청 10곳, 등록번호 등 지정 일부 제품 사용 강요」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국적으로 교육계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상당수 지역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창호(창문틀) 교체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지정, 사용토록 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교육청들은 조달청에 창호공사 입찰을 주문하면서 시방서에 특정 제품만 사용토록 한 '특기시방서'를 첨부, 특정업체를 밀어줘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2009년까지 2년간 150여억원을 들여 학교 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도내 97개 초·중학교, 1천885개 교실의 창호 교체 공사를 실시했다. 이중 일부 지역 교육청은 관내 초·중학교의 창호 교체 공사를 발주하면서 부산에 소재한 창호제조업체인 H공업 제품이 획득한 실용신안과 특허번호, 제품규격까지 그대로 명시한 '특기시방서'를 시방서 뒷면에 첨부,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낙찰받은 시공업체는 제품에 대한 선택권 없이 H공업에서 창호를 일괄 구입해 해당 학

교에 설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여주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S초교와 B초교 분교의 노후 창호 95개 면의 교체 공사를 위해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주문하면서 시방서 뒷면에 '조립식 철제 창호(창 및 창틀 포함) 제작 특기 시방서'를 첨부했다. A4 4매 분량의 특기 시방서는 창호의 경우 '철제 창호'로만 제한했으며, 조립식 창틀은 실용신안등록 제01652××호, 의장등록 제2259××호를 획득하고, 해당 품목의 특허를 가진 제품만 사용토록 했다. 또 조립식 창문의 경우에도 의장등록 제2259××(창문바), 의장등록 2314××(창문틀 모서리), 의장등록 2314××(창문틀 방풍구의 코너연결구) 등으로 명시했다.

확인 결과, 여주교육청이 특기시방서에 명시한 창호는 H공업에서 제품 홍보를 위해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실용신안 번호 등과 동일했다. 여주교육청의 경우 S초교와 B초교 분교 외에도 L중학교, S중학교의 창호 교체 공사 발주에서도 똑같은 '특기시방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공사가 발주된 경우는 취재 결과 화성 · 광명 등 지역 10개 교육청 관내 19개교(407교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A지역교육청 창호공사를 수주했던 모 시공업체 관계자는 "시방서가 상호만 명시하지 않았을 뿐 제품 홍보책자와 다를 게 없다"며 "관급공사만 10년 이상 해왔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시방서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A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철제 창호가 알루미늄보다 튼튼하다고 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경기도내 10개 교육청이 관내 학교 창호 교체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창호만 사용하도록 특기시방서를 첨부해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여주교육청의 특기시방서를 구체적인 예로 들고, 화성 광명 등 교육청도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A교육청 관계자의 "철제 창호가 알루미늄보다 튼튼하다고 해서 사용하게 됐다"는 해명만 기술하고 정작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여주 화성 광명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35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 문〉

머니투데이 2010년 5월 26일자 11면 「SBS, 남아공월드컵 길거리 축제 '찬물'/식당에 경기당 500만원 요구/미방송지역 대책은 묵묵부답/KBS · MBC 법적 대응 하기로」 제하의 기사, 5월 27일자 12면 「SBS, 월드컵 단독중계권 돈벌이 급급 빈축/호텔 · 음식점 · 3D 재전송…/중계권료 과다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 5월 28일자 2면 「KBS, SBS 윤세영 회장 등 8명 고소/월드컵 단독중계 갈등 결국 법정 비화/MBC, 오늘 고소… "민사소송도 제기"」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SBS, 남아공월드컵 길거리 축제 '찬물'〉= 『'2010 남아공월드컵' 경기가 SBS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민축제'라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SBS는 남아공월드컵 경기를 '단독중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허인구 SBS 방송단장은 "우리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방송권을 샀다. 재판매할 때는 사전에 FIFA와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얘기가 잘 안됐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 단장은 "SBS는 민영방송이다. 모든 게 자기 책임에 달려있다"며 월드컵경기 부진에 따른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SBS는 경기가 부진할 것에 대비해 이미 '중계료 장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 시중 호텔을 비롯해 음식점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월드컵경기를 시청하려면 중계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요구하는 금액도 적지 않았다.

음식점 관계자는 "한 경기당 500만원을 내라는 공문이 왔다"면서 "온 국민이 시청해야 할 월드컵경기를 통해 이런 식으로 돈벌이하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음식점뿐 아니다. SBS는 호텔에도 비슷한 유형의 공문을 보내 중계료를 요구했다.(하략)』

〈SBS, 월드컵 단독중계권 돈벌이 급급 빈축〉=『SBS가 월드컵 단독중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중계권 판매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방송3사간 협약을 어기는 등 잡음 속에 따낸 단독중계권으로 '돈벌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SBS는 최근 자회사인 SBS플러스를 통해 호텔이나 대형음식점 등에 월드컵 축구경기를 방영하려면 중계권료를 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소 200만원에서 1억원이다. 시청 등 길거리 응원전을 후원하는 기업들에게도 중계권료와 공공시청권(PV)료로 2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앞서 SBS는 인터넷 포털업체에도 지난 독일 월드컵에 비해 3~4배 많은 20억원 넘는 중계권료를 요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포털업체 다음이 약 15억원의 중계권료를 내기로 SBS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SBS는 지난 동계올림픽에 이어 인터넷TV(IPTV) 업체에도 중계권료를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밴쿠버동계올림픽 때는 5억원 가량을 받았다.(중략)

SBS가 이같이 무리하게 중계권 장사를 하는 것은 월드컵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월드컵 단독중계를 위해 6500만달러(750억원)의 중계권료에 제작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하략)』

〈KBS, SBS 윤세영 회장 등 8명 고소〉=『KBS와 MBC가 결국 SBS를 고소했다. 공동중계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온 두 방송사는 SBS가 지난 25일 '단독중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자 곧바로 고소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27일 KBS는 윤세영 SBS 회장 등 전 · 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BS는 고소장에서 "2006년 5월 8일 SBS는 IB스포츠와 단독중계를 위한 비밀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방송3사 사장단 합의를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중략)

MBC도 28일 SBS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MBC관계자는 "28일 SBS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와 MBC는 형사고소에 이어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두 방송사가 이처럼 법적대응까지 나서게 된 것은 SBS의 단독중계가 이번 남아공월드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SBS는 2016년까지 진행되는 동 · 하계올림픽 4개 대회와 월드컵 2개 대회 중계권을 독점한 상태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기사들 가운데 5월 26일자와 5월 27일자는 남아공월드컵 경기를 단독중계키로 한 SBS가 시중호텔과 대형음식점 등에 공문을 보내 월드컵 방송을 틀려면 거액의 중계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다.

5월 28일자는 KBS가 SBS 윤세영 회장 등 전 · 현직 임직원 8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MBC도 검찰 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위 기사들은 비난의 대상이자 이해다툼의 당사자인 SBS의 반론과 해명은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특히 5월 28일자 기사는 KBS와 MBC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상당수 언론들이 기사화한 SBS의 반박문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SBS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3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전북매일신문 발행인 박 준 용
2. 경북매일신문 발행인 최 윤 채

〈주 문〉

전북매일신문 2010년 6월 1일자 11면「갈길 먼 군산시 관광정책」제하의 기사,경북매일신문 6월 17일자 7면「대구시 황당한 물정책 '혈세 낭비'」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매일신문 경북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매일신문)=『군산시가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천혜의 고군산군도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고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고군산군도 찾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산시 관광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0일, 울산광역시에서 체험관광을 위해 군산시 선유도를 찾은 송 모씨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선유도 선착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것.(중략)

군산시에 변상을 요구한 송씨는 "관광객을 봉으로 보는 군산시 관광행정에 문제가 있다. 주위에 물어보니 전에도 만조 때 차량이 침수된 사고가 있었던 주차장이란 사실을 관광객들만 모르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3일 석가탄신일 연휴를 즐기기 위해 선유도를 찾은 김 모씨는 숙박시설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시는 군산을 찾지 않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중략)

김 씨는 "돌아오는 길에 고속화도로 옆에 걸린 군산시의 슬로건에는 서해안시대의 주역도시라는 것을 봤지만.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상식이하의 고객서비스를 일삼는 이런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는 허울일 수밖에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경북매일신문)=『대구시가 황당한 물 정책으로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 물 정책은 수천억원을 들인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대구시의 상수도 정책과 상반된 정책으로 수질과 수량 등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동네 우물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먹는 물로 이용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천연암반수 개발에 따른 문화행사' 비용으로 4억5천만원이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함께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연암반수 개발에 따른 문화행사는 결국 검증도 되지 않은 동네우물 홍보행사를 4억5천만원이라는 빚을 내 치르겠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네우물은 60억원을 들여 지역 내 이미 뚫어진 지하수공 가운데 35곳을 동네우물로 복원해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시에 시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지하 암반층에 매장된 천연 미네랄 물을 개발해 도시 브랜드화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시민에게 일일 78만여t을 공급하는 것에 반해 동네우물로 확보할 수 있는 지하수는 고작 하루 1천750여t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실효성과 정책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대구시 모 공무원은 "그동안 수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동네우물사업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구시의 수돗물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 뒤 "게다가 빚을 내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 중 전북매일신문 기사는 군산에 관광을 왔다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은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군산시 관광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 사례로 제시된 사건들이나 군산시 관광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군산시 측의 의견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경북매일신문 기사는 대구시가 동네우물을 복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예산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7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주 문〉

스포츠조선 2010년 9월 7일자 21면「블랙야크 과욕이 부른 '오은선 논란'/

홍보 수단 활용 무리하게 원정 부추겨/칸첸중가 의혹 무마 도덕성 비난 일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산악인 오은선 대장(44 · 블랙야크)의 칸첸중가 등정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여자 황우석' '산악계의 신정아' 등 오 대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고 지난해 말 이미 의혹 검증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갔다가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여론의 향배에 슬쩍 묻어가는 결론을 내린 대한산악연맹에 대한 질타도 거세다.

게다가 정작 오 대장을 홍보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원정을 부추기고, 칸첸중가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려 했었던 소속사 블랙야크의 도덕성도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미지와 돈을 주고받는 소속사와 산악인의 계약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다수의 산악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생리라고는 해도 소속사의 지나친 욕심에 오 대장이 희생된 측면도 있다"며 블랙야크의 행태를 꼬집었다.

블랙야크는 1966년 동진레저가 탄생시킨 토종 브랜드다.

쟁쟁한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틈바구니 속에서 군소 브랜드에 머물렀던 블랙야크는 1992년에야 히말라야 원정대 지원을 시작했을 정도로 지명도나 제품력에서 큰 인정을 받지 못했다. 코오롱과 골드윈코리아(노스페이스), 에델바이스 등이 일찌감치 국내 14좌 완등 삼총사인 엄홍길, 박영석, 한왕용 대장을 각각 후원한 것에 비해 지명도 있는 산악인을 끌어들이지 못했던 블랙야크는 한국 여성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오른데 이어 14좌 가운데 5좌 등정을 마친 오 대장과 2008년 2월 후원 계약을 맺으며 비로소 '산악인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오 대장은 블랙야크의 지원을 받는 2년여의 기간 동안 나머지 9좌 원정에 나설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후원 계약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엄홍길(1988~2000년), 박영석(1993~2001년), 한왕용 대장(1994~2003년) 등이 최소 8년2개월에서 최대 12년에 걸쳐 14좌 완등을 이뤄냈을 만큼 히말라야 원정은 남성들에게도 버거운 도전이다. 하지만 블랙야크는 여성 첫 14좌 완등이라는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오 대장의 무리한 도전을 부추기며 극한 경쟁 속으로 밀어넣었다. 국내외 경쟁자들이 턱밑까지 추격한 급박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 대장의 조급함을 블랙야크는 철저히 활용한 셈이다.(중략)

오 대장과 함께 칸첸중가에 오른 다와 옹추(셀파의 우두머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 대장이 밟은 곳은 (내가 2002년 함께 산행을 했던) 한왕용 대장이 밟은 칸첸중가 정상과 같은 곳"이라며 "만약 오 대장이 정상에 못 오른 것이라면 나머지 사람(한 대장)도 못 오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4좌 완등을 공인받은 한 대장을 끌어들여 오 대장을 정상으로 인도한 자신의 역할을 변호했는데, 한 대장은 최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옹추와 함께 정상에 선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의심에서 벗어났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몇몇 산악 전문가들은 옹추가 네팔 현지 소속사로부터 자신의 얘기를 제외한 일에 함구령이 내려졌음에도 굳이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인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일이 잘 무마돼야 하는 블랙야크가 옹추에게 이런 발언을 부탁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블랙야크는 회사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산악인 오은선 씨가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의혹에 휘말린 배경에는 소속사인 블랙야크의 무리한 등정 부추기기도 한몫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사는 오 씨가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5좌 등정을 마친 2008년 2월 블랙야크가 후원 계약을 맺은 이후 오 씨가 여성 첫 14좌 완등이라는 타이틀을 따내

도록 "극한 경쟁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오 씨와 함께 칸첸중가에 오른 셀파 다와 옹추가 오 씨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블랙야크가 배후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기자는 비판과 의혹의 대상인 블랙야크 측의 반론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8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2.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경북일보 2010년 9월 3일자 3면 「정치권 "SD(이상득 의원) 때리기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9월 3일자 5면 「정두언 · 정태근, 이상득 때리기 계산된 행동?」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일보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일보)=『한나라당 정두언 · 남경필 · 정태근 의원 등 소장파들이 2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이상득(SD)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사찰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 지도부 및 중진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 직후 "전날 회의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불법사

찰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입장 표시가 있었고, 오늘 회의에서 정 의원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중략)

실제 이들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연찬회에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면전에 두고 "전 국민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조지 오웰 소설에 나오는 거대한 감시자)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맹공격했다. 또 실명을 거론하면서 '불법사찰의 배후', '영감'으로 표현하며 정면 비판했다. 정두언 의원의 SD공격은 진작에 있어왔지만 실명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략)

그런데도 소장파 의원들이 다시 정치사찰과 관련해 이 의원의 이름을 정식으로 거론하고 나서자,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나오는지'에 대해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들 의원들은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SD라인과의 권력다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 의원들인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정권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 '쇄신의 희생양'으로 SD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하략)』

(영남일보)=『"그들에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최근 불법사찰 논란에 불을 붙인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정태근 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정 최고위원과 정 의원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물론 청와대와 '한판 붙어보자'는 식으로 나오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정 최고위원이나 정 의원이 '친이 직계'로 분류된 인사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한나라당 주류 내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중략)

정치권에선 정 최고위원이나 정 의원이 스스로를 '권력의 희생양'으로 만들며 민심을 얻으려는 행위로 해석하기도 한다.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 최고위원이나 정 의원이 아주 정치적으로 고단수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부의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있다"며 "이 전 부의장이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행동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세게 치고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차기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사찰 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 공천의 배수진을 미리 친 느낌이다.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진다면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할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한나라당의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같은 당 소속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배후로 지목, 비판하는 일의 추이 또는 분석을 다룬 기사들이다.

이 기사들은 정두언 의원 등의 행태를 두고 한나라당 일부에서 내놓는 "SD라인과의 권력다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수도권 의원들인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정권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 '쇄신의 희생양'으로 SD를 겨냥하고 있다."(경북일보), "한나라당 주류 내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 사찰 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진다면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다."(영남일보) 등의 풀이를 전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특정한 인물들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비판 받는 당사자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06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10월 12일자 1면 「성범죄 교사 전근도 막는 전교조/강원지부 "공금횡령 · 성적조작 교사도 학교 남을 수 있게… 조항 신설해달라"/전교조 출신 교육감에 단체교섭 요구안 보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심지어 성범죄와 관련된 교직원도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내용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3차례 역임했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한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따르면 전교조 측은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공금횡령뿐 아니라 성적조작, 성범죄 같은 중죄(重罪)도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문제 교사들이 학교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내용이 너무 황당해 교육청에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선 '오타가 아니고, 제출한 원문이 맞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적조작이 어떻게 학교와 관계없을 수 있느냐. 혹여 성범죄를 학생이 아닌 다른 일반인에게 저질렀다 해도 이 교사를 전근시키지 않으면 학생들이 불안할 것"이라며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교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실시할 것과 △교원연수 결과에 대한 점수제를 폐지하고 합격과 탈락으로만 평가하고 △전보인사에 근무성적 평정 점수 반영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 학교의 전교조 분회장은 노조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본인 희망에 따라 담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자 마치 해방구라도 된 듯 전교조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1면 머릿기사로 올린 위 적시 기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한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토대로 "전교조 강원지부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심지어 성범죄와 관련된 교직원도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큰 제목은 「성범죄 교사 전근도 막는 전교조」라고 달았다.

취재기자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요구가 일으킬 파장을 감안한 듯 기사 중간에 "내용이 너무 황당해 교육청에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선 '오타가 아니고, 제출한 원문이 맞다'고 회신했다"는 김 의원의 언급도 소개했다.

그러나 취재기자가 당사자인 전교조 강원지부의 반론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위 기사가 나간 후 "지난 8월 초에 초안으로 작성된 문법에도 맞지 않는 내용의 파일을 실무자가 잘못 보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실제 본교섭 요구안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비정기 전보하고, 그 외의 학교활동과 관계가 없는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이 진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기사는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

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07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조 용 기

〈주 문〉

국민일보 2010년 10월 8일자 6면「조씨, 벌금 내려고 50억 증여받고도 세금 한 푼 안내/혐의 내용과 전망」「자료 · 회의 내용 빼내 국민일보 경영권 침탈 노골화/왜 고발할 수밖에 없었나」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2건의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혐의 내용과 전망〉=『국민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희준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이 중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조희준, 탈세 배임 등 중범죄 혐의

조씨는 2001년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지만 벌금 50억 원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로 도피했다. 일본에 머물던 2007년 12월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조씨 측은 당시 지인 55명으로부터 50억 원을 빌려 벌금을 완납하고 풀려난 뒤 이듬해 5월까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씨는 당시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50억 원을 사실상 증여받아 벌금을 냈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증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억여 원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일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세금부과를 피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조씨가 2001년 탈세혐의로 기소됐을 때 드러난 것과 동일하다.

조씨는 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에서 2005년 13억여 원, 2006년 3억여 원 등 모두 38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06년 이 중 상당액수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

◆협박 감금에 강요까지

조씨는 국민일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김주탁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이인재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설상화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등과 짜고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 조씨의 사주 하에 김씨는 지난 6 · 8월 국민일보 내부회계자료 등을 빼돌렸으며 설씨는 이를 바탕으로 8월 3일 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씨는 자신의 최측근 이씨를 어머니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의 비서실장에 앉혔으며 김 총장은 노 회장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집무실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사퇴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했다.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종합일간지 회장이자 발행인인 노 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하략)』

◆왜 고발할 수밖에 없었나

『국민일보 설립자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2006년 문화관광부에 국민일보 주식 100%를 갖는 국민문화재단(이사장 박종순 충신교회 당회장) 설립 신청을 할 당시 장남 조희준씨를 포함한 친인척 개입 배제를 천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와 문화관광부가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려는 속셈으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건 데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었다.(중략)

이 같은 조 원로목사의 숭고한 뜻이 훼손될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중순. 장남 조씨가 국민일보와 관계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사장 시절 경영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때만 해도 조씨가 말한 명분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동생인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이 취임한 2006년 이후의 경영자료까지 요구하면서 야심을 노골화했다.

국민일보는 당시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작전세력이나 요구할 법한 자료를 달라는 것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간섭하겠다는 의도'라는 판단 아래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조씨 측은 7월 18일 김주탁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을 꾀어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이 주재한 구수회의 발언을 녹음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무기로 노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노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조씨는 8월 3일 고모부 설상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엘림복지회 상임이사)와 교회 내 사조직인 한마음산악회를 동원, 노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집요하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조씨의 국민일보 경영권 · 인사권 개입 음모는 어머니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8월 28일 노 회장을 국민일보빌딩 11층 집무실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해 놓고 자신이 직접 쓴 사퇴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김 총장은 9월 16일 국민일보 사원 비상총회가 열리는 시간에도 노 회장에게 더 강도 높은 방법으로 사퇴 발표를 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노 회장은 다음 날 회사 인트라넷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띄웠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희준 전 넥스트미디어 그룹 회장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측근 3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실은 해설성 박스 기사들이다.

기사는 조 전 회장이 벌금 50억 원을 내려고 제3자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고도 이를 숨겨 20억여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측근들과 짜고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협박을 하고 감금까지 했다는 등 비대위 측의 주장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에 비판 대상으로 등장하는 실명 인물만 하더라도 조 전 회장을 비롯, 김성혜 한세대총장과 이인재 한세대총장 비서실장, 설상화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김주탁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 5명이다.

기사는 '비윤리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까지 섞어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반대편 이해당사자들의 반론이나 해명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보도 자세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34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중부일보 2010년 10월 26일자 1면 「김문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도 손학규 책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5일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또다시 전임지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서 골프장 승인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공방이 예상된다.(중략)

특히 김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도가 도교육청에 지금까지 미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이 1조원을 넘는다"며 "그러나 이는 전임 지사들 재임 당시 발생한 것으로, 내가 취임한 민선 4기 및 5기에는 미지급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용지부담금과 과거의 부담금까지 모두 내라고 해 도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무상급식까지 도가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중략)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골프장 승인 문제와 영어마을 부실 운영 등에 대해 전임 지사였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사 시절 책임론을 꺼내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김 지사와 손 대표를 둘러싼 여 · 야간 공방이 또 한 차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문제와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손학규 전 지사 등 전임지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또다시 전임지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공방이 예상된다〉〈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골프장 승인 문제와 영어마을 부실 운영 등에 대해 전임 지사였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사 시절 책임론을 꺼내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김 지사와 손 대표를 둘러싼 여 · 야간 공방이 또 한 차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으면서도 정작 내용 중에는 손 대표나 민주당 측의 반론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03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1년 1월 3일자 1면「보도채널 '중복투자규제' 위법논란/HTV 탈락…대주주 대성지주, 타종편 대구도시가스와 별개법인 불구 동일기

업 판단」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적용한 '중복투자 규제'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사실상 1개도 선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추가 승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미디어가 주축이 된 헤럴드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31일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결과에서 승인 총점 800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 동일인이 여러 컨소시엄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 이른바 '중복투자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헤럴드 컨소시엄은 이로 인해 60점 가량을 감점 당했고, 관련 심사 항목에서도 승인 최저 점수를 밑돌았다. 헤럴드 컨소시엄의 경우 중복투자로 분류된 참여주주 대성지주가 공동 대주주여서 타격이 가장 컸다.

방통위의 중복투자 규제는 애초부터 논란이 됐었다. 방통위 스스로도 2010년 9월 열린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현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지분 제한을 신규 사업자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적 근거 없이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 "신청법인이 사업자 선정 이후 상장될 경우 주식의 매매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의 실익이 없다"며 스스로 규제의 허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논란 끝에 ▷신청법인 간 차별성을 강화해 방송의 다양성 제고 ▷다양한 주체의 방송 사업 참여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중복투자 규제를 강행했다.

문제는 이번 헤럴드 컨소시엄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헤

럴드 컨소시엄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한 대성지주와 사실상 전혀 별개인 대구도시가스(형제 기업이지만, 실질적 계열 분리)가 타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았다. 모든 언론은 이 두 회사를 '계열 분리된 독립된 기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제시한 규제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음에도, 방통위는 형식 논리에 매몰돼 이를 '동일 회사'로 규정하고 헤럴드미디어를 탈락시켰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승인 과정에서 적용한 '중복투자 규제'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어느 한 종편 · 보도 방송채널 사업신청 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방통법상 특수 관계자)이 다른 사업신청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공청회에서 방통위가 배포한 자료에는 "법적 근거 없이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적시돼 있었지만 방통위는 이를 그대로 적용했고, 결국 헤럴드미디어가 주축이 된 헤럴드 컨소시엄이 불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공청회 단계부터 문제가 됐음에도 도입한 것이라면 헤럴드경제는 비판의 당사자인 방통위의 반론이나 해명을 들어 기사에 반영해야 마땅했을 법한데도 기사에서는 방통위쪽 의견은 찾아볼 수 없다.

보도채널 문제가 헤럴드경제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답변의 기회'를 위반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114	東亞日報	5. 13.	"천안함 좌초-충돌사고 주장/민주당 추천 위원/…	주 의
2010-1115	제민일보	5. 5.	주민갈등 손 놓은 서귀포시	주 의
2010-1136	한국경제	6. 11.	한전, 폐변압기 처리 비리 의혹/입찰 담합 · 무게 허위…	주 의
2010-1164	南道日報	7. 13.	나주시장 6급 정책비서 인사 논란	주 의
	全羅日報	7. 23.	전일은행 불법대출 의혹 확산	〃
	인천신문	7. 28.	택시업계 탈세 등 관행적 비리	〃
2010-1181	경인일보	9. 9.	"민주당 의원들 무소신 · 무책임 행태"	주 의
2010-1182	경기일보	8. 24.외	간부공무원에 '골프 쿠폰' 상납 외	주 의
	경인일보	8. 24.	지도층 인사에 '공짜 골프쿠폰' 수년째 뿌려/…	〃
	새전북신문	9. 1.	간판 정비한다더니 예산만 낭비	〃
	全羅日報	9. 1.외	김승환 도교육감 재산신고 누락 논란 외	〃
	한라일보	9. 2.	제주자치도 기금 사용 '제 맘대로'	〃
	慶南日報	9. 3.	진주시 예산 낭비 심했다 외	〃
	호남매일	〃	신안군 각종 보조금사업 선심성 지원 의혹	〃
	중부일보	9. 6.외	김학규 용인시장 '특정인 중심인사' 논란/… 외	〃
2010-1183	중부일보	9. 6.	이마트, 우유제품 등 공산품 물류센터 통해 일괄/…	주 의
	大田日報	9. 7.	신세계 이마트 신부점 입점/(주)아라리오 알면서 모른척?	〃
2010-1208	서울경제	10. 8.	카지노 도박소송 피하려 강원랜드 전산망 교체?/…	주 의
2010-1209	南道日報	10. 8.	全發硏〈전남발전연구원〉 '맹탕 발전 보고서' 빈축	주 의
	무등일보	〃	신안군 150억 대 예산 전용 '말썽'	〃
	중부일보	10. 12.	국감서 또 터진 측근 L씨 의혹	〃
	경북매일신문	10. 13.	대한적십자사 부동산개발업체 변신?	〃
	새전북신문	〃	전통문화센터 비상식적 경영 논란	〃
	全羅日報	10. 14.	눈감고 입 닫은 도 감사관실	〃
2010-1235	충청투데이	10. 26.외	청양 한국춘란 대제전 '의혹 무성' 외	주 의
	大邱日報	10. 29.	소비성 행사에 예산 낭비 지적	〃
	무등일보	11. 1.	순천시, 이상한 상호변경 허가	〃
	중부일보	11. 8.	폭언 감사반원 검찰에 고소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235	全北日報	11. 10.	거꾸로 가는 '교육행정'	〃
2010-1256	東亞日報	11. 24.	"北 고농축 우라늄 개발 사실 DJ-盧 정권 알면서도 묵인"	주 의
	서울신문	〃	"DJ · 노무현 정부때 北 우라늄 농축 은폐	〃
2010-1257	전북중앙신문	12. 6.	정읍시 행정재산 관리 '도마위'	주 의
	경북일보	12. 8.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꼼수"	〃
	全北日報	12. 13.	도 교육청 NIS, '특정업체 감싸기' 논란	〃
2011-1002	기호일보	1. 4.	시흥청소년센터 허울뿐인 위탁공모	주 의
	중부매일	1. 4.외	아산시 올 첫 인사 구설수 난무 외	〃
	부산일보	1. 5.	김해공항 수요 예측 오류 수정 없이 고시 강행/…	〃
	인천신문	1. 6.	불법업소 양성하는 시흥세무소/휴게음식점 주류판매…	〃
	南道日報	1. 10.	신안군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
	忠淸日報	1. 12.	"이 판국에 해외연수라니…"	〃
	경북매일	1. 17.	문경레저타운 또 '낙하산 인사' 논란	〃
2011-1041	중부일보	1. 20.외	檢, 강원춘 선거차량 '이중계약서' 확인 외	주 의
	충청투데이	〃	허술한 도민체전 출전비 관리 도마위 외	〃
	한라일보	1. 22.	제주시 인사 순환원칙 마저 무시	〃
	인천신문	1. 24.	시흥시장 '내 사람 심기' 논란 가열	〃
	충북일보	〃	"입김 인사" 시끌시끌/충북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놓고…	〃
	충청타임즈	1. 25.	봉명 청솔A〈천안 동남구〉 하자보수 특혜 의혹/…	〃
	경기신문	1. 28.	"기망에 의한 사표, 수리는 부당"/용인지방공사 사장…	〃
	경북일보	2. 1.	막 퍼주는 포항시… 포세이돈스와 황당계약	〃
	새전북신문	〃	"대출받으려 회원권 위장 분양"	〃
	光州日報	2. 8.	농림부의 딴지/"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못믿어"…	〃
2011-1074	강원도민일보	2. 21.	양양군 과잉제설 논란	주 의
	경북도민일보	2. 23.	포스텍, 법인기금 부실투자 논란/"이사회 리스크관리 주문도 무시했다"	〃
	중부매일	〃	아산시가 시장 사조직인가	〃
	중부일보	3. 1.	포천시, 시민축구단 단장직 시장 직접 임명 추진/…	〃
	경북매일	3. 2.	포항시설관리공단 부실운영 논란	〃
	南道日報	〃	광주시 공기업 수장 내부인사는 왜 안 되나…	〃
	대구신문	3. 4.	대구시 '동네우물사업' 논란/대구경북녹색연합…	〃
	전북중앙신문	3. 8.	'멋대로 심사' 네티즌 부글부글/무주리조트 UCC…	〃
	서울일보	3. 9.	사교육으로 탈선하는 방과 후 학교	〃

5. 피의사실의 보도

-수사 중인 사건 예단한 기사

▲ 2010 - 1116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매일 발행인 박 성 규

〈주 문〉

중부매일 2010년 4월 29일자 1면 「이향래 군수, 옥천군수 전철 밟나」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향래 보은군수가 건강상 이유로 오는 6 · 2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검찰이 보은군 탄부면 골프장 조성 특혜 의혹 뿐 아니라 승진인사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이 군수 재임기간 중 5급 사무관으로 승진된 보은군 공무원 C씨를 조사한데 이어 C씨의 부인과 친인척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C씨는 당시에 직렬상 승진 조건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사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8일 C씨의 친인척을 소환해 C씨의 승진인사 이후 이 군수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 및 배경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이는 검찰이 이향래 군수의 재임 중 인사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중략)

앞서 검찰은 보은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보은군청 5급 공무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7년 7월께 보은군 관내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전 군유지와 사유지 24만㎡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갖고 있던 자신의 친구 B씨의 땅이 비싼 것처럼 속여 군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회에 허위보고한 혐의다.(중략)

보은지역에서는 이 군수 가족이 골프장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뒤늦게 되돌려줬다는 구체적인 설 등이 나돌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미 그를 향했다는 분석도 나돌았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검찰이 충북 보은군 공무원의 인사비리 첩보를 입수해 해당 공무원을 소환조사하고, 골프장 특혜와 관련된 공무원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 같은 독직사건에 현직 군수가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향래 보은군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도 되기 전에 확대수사를 예단한 기사를 작성하고,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옥천군수 사건을 빗대 〈이향래 군수, 옥천군수 전철 밟나〉 라는 제목을 단 것은 사실보도의 궤를 이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 군수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⑥항(피의사실의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익명 취재원 비방을 여과 없이 보도

▲ 2011 - 1030 신문윤리강령 위반
忠淸日報 발행인 조 승 남

〈주 문〉

忠淸日報 2011년 1월 31일자 1면 「"곽임근 청주부시장 부적절"/이천 출신… 수도권 규제완화 미온적 대처 우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忠淸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행정안전부 곽임근 윤리복무관의 청주부시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청 공무원은 물론, 지역 경제계가 인사권자인 이시종 충북지사의 선택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행안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설 명절 후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정순 현 청주시 부시장과 곽임근 윤리복무관 간 교류인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정정순 청주부시장(지방이사관)을 행안부로 전출시키고, 곽 윤리복무관을 충북도로 전입시킨 뒤 청주부시장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 이천 출신인 곽 윤리복무관이 충북 12개 기초자치단체의 맏형격인 청주시의 부시장으로 임명되는 게 부적합한 요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먼저, 청주시와 경기도 이천시가 하이닉스 신규 투자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건축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총 77만 2200㎡(23만 4000평) 규모로 1만 1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29만3700㎡(8만 9000평)과 공업용지 6만㎡(1만 8000평)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이닉스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도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주 보다는 경기도 이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향후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를 철회시키기 위한 대규모 반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머리띠'를 매고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를 압박해야 하는 청주부시장에 경기도 이천 출신 고위 공무원이 임명될 경우 미온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56년생인 곽 윤리복무관이 1년짜리 지방교류 후 또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기 위해 야당 소속 단체장의 주장을 중앙 정부를 상대로 펼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청주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지역의 핵심 이슈를 이끌어야 하는 청주부시장 자리에 다른 지역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종합 행정기관인 충북도와 달리 청주시 등 기초단체 행정은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도 "민선 4기 다른 지역 출신인 박경배 행정부지사 취임 후 지역사회 곳곳에서 뒷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곽 윤리복무관의 청주부시장 임명 여부를 놓고 지역 경제계 등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행정안전부 곽임근 윤리복무관과 정정순 현 청주시 부시장 간 인사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나, 곽 윤리복무관의 청주시 부시장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주시와 경기도 이천시가 하이닉스반도체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천 출신인데다 1년 후 중앙 복귀가 예상되는 곽 윤리복무관이 하이닉스 신규 투자의 청주 유치에 적극성을 띄지 않을 우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기사는 밝혔다.

그런데 위 기사는 모두 12단락으로 이루어진 장문이지만 '지역 경제계가…' '청주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충북도의 한 공무원도…' 등 취재원을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서술부는 '알려졌다' '지적되고 있다' 등 피동형으로 일관해 기사 속 주장들이 지역 여론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 또는 일부 지역민의 주장을 과장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 곽 윤리복무관의 청주시 부시장 임명을 반대하는 충북도 공무원 및 청주시 공무원의 비판적인 발언들을 익명으로 전한 것도 '취재원이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지역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지역신문의 한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출신지역 때문에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예단하고 그러한 예단을 근거로 중앙과 지방 간 정기적 인사교류를 반대하는 '닫힌' 지역 여론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지역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전문 및 ②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투서내용 그대로 기사화

▲ 2011 - 1069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주 문〉

충북일보 2011년 3월 11일자 1면「"통장이 돈 착복" 주민투서 발견/청주매립장 주민기금 횡령 또 다른 의혹/투서 속 당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인」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속보=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일부 마을대표들이 주민지원기금을 부정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적힌 주민투서가 발견됐다.〈9일자 1면〉

본보는 10일 '○○지역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지역 한 지인에게 2010년 12월 10일 발송된 투서 형식의 문서를 입수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에는 "우리 동네 통장 외 2인이 매립장 피해 부락으로 포함되게 해 시에서 매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1인 당 1천 500만 원씩 총 4천 500만 원을 나눠가졌다"고 적혀있었다.

익명의 주민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법을 잘 아시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벌을 주시고, 돈을 다시 물어내게 해주세요"라고 글을 마쳤다.

투서를 받은 A씨는 "곧바로 문제의 지역 통장 B씨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는데, B씨가 해당 사실을 시인했었다"고 본보 취재진에게 전했다.

A씨는 그러면서 "마을대표들이 갖가지 수단으로 기금을 횡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매립장의 간접 피해지역인 강서1동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난해 지급된 장학금 2억 원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임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C씨는 “장학회가 설립될 때까지 2억 원을 주민지원협의체가 보관하고 있는데, ‘B씨 등이 이자를 함부로 빼 쓰고 있다’는 협의체 위원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돈을 빼 썼다가 다시 채워 넣는 등 개인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씨는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B씨는 “4천 500만 원은 농기계 구입비”라며 “마을회의를 거쳐 공동사업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주시가 소수의 명의자로 구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고, 구입비도 모자라 이월사업으로 넘겨놓았다”며 “현재 통장에 보관 중”이라고 개인 착복 의혹을 부인했다.

장학금 2억 원 임의사용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빼 쓴 사실이 없다”며 “통장을 확인해보면 알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근거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모든 의혹제기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보는 앞서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변지역(청주관내 9개 마을, 청원관내 5개 마을)에 반대급부로 매년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 25억 원(청주관내 15억 원, 청원관내 10억 원)이 부정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변 마을 대표들 3명이 주민지원기금을 착복하거나 불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투서가 발견됐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매년 25억 원이나 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일부가 마을 대표들에 의해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면 해당 지역으로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신문은 투서의 입수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전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투서 내용과 익명의 취재원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마을 대표가 주민지원기금 중 일부를 착복했다는 투서가 발견됐다”고 1면에 대서특필 하였다.

이처럼 당국의 수사가 착수도 되기 전에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취재원을 익명처리한 채, 다른 쪽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예단하기 쉽도록 보도한 것은 언론의 정도에서 일탈했다고 하겠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1. 자살보도의 신중

-‘동반 자살’ 등 표현 소홀

▲ 2010 - 113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동 화

〈주 문〉

서울신문 2010년 6월 3일자 17면 「6살 아이가 무슨 죄…/가정불화 아빠, 아들과 동반자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원 고성에서 가정불화를 비관한 40대 남성이 6살 난 아들과 함께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했다.

2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10분쯤 고성 토성면 봉포리 고모(41)씨 집에서 고씨와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최모(4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집안을 살펴봐 달라는 고씨 가족의 전화를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거실과 화장실에는 타다 남은 연탄과 ‘더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정불화를 비관한 40대 남성이 집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6살 난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을 놓고 ‘동반자살’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6살짜리 아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버지 때문에 숨진 것이므로 ‘동반자살’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위 사건은 ‘40대 남자가 자살했고 6살짜리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써야 객관적인 사실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자살 사건의 용어선택과 표현을 소홀히 한 위 기사는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64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1년 3월 8일자 4면 · 5면 「아직도 먼 학생인권」 제목의 기획기사와 관련한 삽화 및 4면 「공부 잘하던 그 아이가 왜…/목포서 고교생 분신 시도/성적 하락 비관…중태 빠져」 기사와 제목, 3월 10일자 10면 「청주 고교생 학교옥상서 투신자살/손바닥에 “다음 생애는 평화롭게”…괴롭힘 여부 조사」 기사와 제목, 3월 14일자 15면 「‘업무 압박 어땠기에’ 새내기 여교사 자살/유족은 “차세대 NEIS 맡아 스트레스 탓”」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삽화에서 각종 규제와 통제에 묶인 청소년기 학생들과, 경쟁과 개인주의 폐단에 얽매인 일반인들의 힘겨운 상황을 도살장의 갈고리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이와 함께 위 적시 3건의 기사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월 8일자〉=『학생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고교생이 길거리에서 분신자살을 시도, 중태에 빠졌다. 이 학생은 반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우등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10분쯤 전남 목포 용해동 골목길에서 임모군(17 · 고교 2년)이 갑자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길 가던 주민들이 달려가 불을 껐으나 순식간에 임군의 윗옷이 모두 타는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출동한 119구조대 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뒤 대전으로 긴급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임군은 이날 외출을 나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책가방과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 라이터를 수거했다. 경찰은 임군의 몸에서 진한 시너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으나, 시너를 담은 통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이미 몸 깊숙이 시너를 뿌린 후 길을 걷다가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군은 책가방에 넣어둔 유서를 통해 "부모님 죄송합니다"라고 밝히고, 20여명의 친구 이름을 일일이 적은 후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임군은 또 학교 성적을 고민한 듯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쓴 다른 메모도 남겼다. 경찰은 임군이 학교 성적에 대해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군의 분신 소식을 전해들은 교사들은 "새학년 들어 임군이 '반 1등'으로 배정됐다"면서 "임군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3월 10일자〉=『9일 오전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주기계공고 2학년 ○군(17)이 학교 3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학교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인부는 경찰에서 "툭 소리가 나서 가보니 학생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군이 전날 친구로부터 구입한 휴대폰을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됐다. 휴대폰을 빌려간 이 친구는 휴대폰이 잠겨져 있어 통화가 불가능하자 메모리칩을 뺀 채 ○군에게 되돌려준 것. ○군은 친구에게 메모리칩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이날 아침 학생복지부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이 교사는 "○군은 이날 2교시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교실을 나가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의 왼손바닥에는 '이런 세상에서 살기 싫습니다. 다음 생애는 평화롭게'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내성적인 ○군은 학교생활은 착실했지만 친구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기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몹시 싫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4일자〉=『지난 11일 경기 포천의 한 고교 관사에서 국어교사 안모씨(31)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안씨는 이번 학기에 처음 임용된 새내기 교사였다. 안씨의 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아무리 해도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애착이 가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13일 안씨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되고 싶어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죽 힘들었으면 선생님이 되자마자 자살했겠느냐"며 오열했다. 남자친구 김모씨와 안씨의 동생 등은 "요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를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죽기 전날 마지막 통화를 할 때 내가 보러 가겠다고 했더니 '오늘도 야근해야 하니 오지 마라. 쉬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중략)

유족들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신임 교사에게 '차세대 NEIS' 업무를 맡긴 것은 의아하다"며 "교과부도 교사들이 가장 바쁜 3월 이전에 시범 운영을 마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삽화는 청소년과 일반인 29명이 갈고리 줄에 잇따라 매달려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고는 하지만 얼핏 보면 목을 매 집단 자살한 것처럼 섬뜩한 느낌을 갖게 한다.

실제로 몇몇 인물은 갈고리에 꿰인 게 아니라 목에 줄을 감은 것처럼 그려졌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삽화가 4면과 5면 상단부를 차지한 가운데 4면 하단에

는 반 석차 1등인 전남 목포의 고교 2학년 남학생이 분신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진 사건을 별도 삽화를 곁들여 돋보이게 보도했다.

3월 10일자 기사는 청주기계공고 2학년 남학생이 학교 3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을, 3월 14일자 기사는 경기도 포천 고교 관사에서 새내기 여교사가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을 각각 가로 2단과 3단 크기로 상세하게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자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발생하며,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기사들은 자살 또는 자살시도의 동기를 성적하락 비관, 친구의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단순화하여 그 경위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기사 제목도「공부 잘하던 그 아이가 왜…」,「"다음 생애는 평화롭게"…」등 자극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어적 표현이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위 삽화와 기사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호기심 유발 우려

▲ 2010 - 108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13일자 1면「연기자 "자살계획 세운 적 있다" 40%/ 20%는 자살용 약 · 물품 구입 경험…캐스팅 불공정 · 현실과 연기생활 괴리 스트레스도」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최진실, 최진영 등 대중적 영향력이 큰 연예스타들의 자살이 잇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연기자 10명 중 4명이 우울증세를 겪고 있으며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톱스타 배우인 박진희가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연기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2009년)를 통해 밝혀졌다. 박진희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의 주연급 스타배우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조 · 단역을 포함한 260명의 연기자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설문 ·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논문은 특히 현역 스타배우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연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방법과 이론적 접근을 통해 연예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경향에 관한 상관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논문에 따르면 연기자 중 40%가 가볍거나 심각한 '임상적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사는 것이 지겹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다"는 등의 답도 40%에 이르러 충격을 줬다. 설문에 응한 연기자 중 10명 중의 2명꼴로 실제 자살을 위해 약을 모으거나 물품을 사는 등의 준비를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자들의 우울증과 자살충동에는 특수한 지위에 따르는 직무 · 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직무와 연관된 스트레스로는 고용 불안정이 첫 손가락에 꼽혔다. '내 일은 안정적이지 못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캐스팅이나 각종 시상 및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생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기자에 대한 화려한 인식과 실제 나의 생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고,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고 연기해야 한다'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사생활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고충도 컸다. '계속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일반인들은 갖지 않는 연기자들의 스트레스 주범이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국내 연기자 가운데 40%가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골자로 한 유명배우 박진희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10명 중 2명꼴로 실제 자살을 위해 약이나 물품을 사는 등의 준비를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몇 년 사이에 연예스타들의 자살사건이 잇따른 점에 비추어 기사는 유명배우의 석사논문을 통해 그 실태와 원인을 짚어봤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연기자들마저 자살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현실을 진단과 처방은 생략한 채 1면 머릿기사로 크게 소개한 것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자칫 호기심과 모방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자살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6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0년 7월 2일자 2면 「박용하 자살 이후…/한국스타 자살 다음은 누구?/전세계 언론들 잇단 비보에 원인분석 분주/경제적 문제 · 목표 상실 등 원인으로 꼽아/"소통 꺼린다" 한국인 성향도 문제 제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왜 한국 스타들은 계속 자살하는가.'

한류스타 박용하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한국 연예계의 잇따른 자살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은주 · 정다빈 · 최진실 등 톱스타에 이어 '겨울연가'로 아시아 스타로 떠오른 박용하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주 유력 일간지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1일 "아시아에서 수백만의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의 톱스타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한국은 톱스타인 최진실, 그의 동생인 최진영 등이 연달아 자살하는 등 자살률이 예외적으로 높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10만명 당 22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략)

한국의 드라마와 스타에 열광하는 외국팬들은 한국 스타들의 자살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다. 중국 시나닷컴에 올라온 박용하 관련 기사에는 "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자살하는 것인가. 다음은 또 누구란 말인가." "한국 연예계가 특별히 더 힘든 걸까. 중국 스타들은 더 힘든 일을 겪어도 꿋꿋하게 사는데, 한국 스타들이 좀 배워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이 올라와 있다.

1일 중국 포털사이트 봉황망은 '한국 스타들의 빈번한 자살로 연예인의 정

신건강이 우려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원인으로 사업 실패 등 경제적인 원인, 삶에 대한 목표 상실을 꼽았다. 이어 자살 원인을 한국인의 성향에서 찾기도 했다. 이 매체는 "한국인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린다.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친구나 가족들과 소통하기를 꺼리고 때로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한류스타 박용하의 자살에 대한 외국 언론과 온라인 독자들의 반응을 두루 묶어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는 본문 내용 중 "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자살하는 것인가. 다음은 또 누구란 말인가"라는 내용의 중국 온라인매체 댓글에 초점을 맞춰 「한국스타 자살 다음은 누구?」 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큰 제목을 달았다.

톱스타들의 잇따른 자살이 앞으로도 예고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살사건을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통신기사 등 출처명시

-통신기사를 자사기자 명의로

▲ 2010 - 112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2.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3. 우리일보 발행인 신 영 모

〈주 문〉

경인일보 2010년 5월 5일자 8면 「'마법의 아이패드' 밀리언셀러 달성」 제하의 기사, 호남매일 5월 11일자 2면 「김진표-유시민 "내가 적임자" 격돌」 제하의 기사, 우리일보 5월 14일자 1면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송도 개막'」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인일보 호남매일 우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3G 모델 판매 성과에 힘입어 출시 한 달 만에 미국 내에서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4일 업계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해외언론 등에 따르면 아이패드 3G 모델은 사흘 만에 30만대 이상이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는 공식 발표를 통해 "아이패드가 28일 만에 100만대 판매고를 달성, 아이폰의 74일 기록을 절반 이상 앞당겼다"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우리로선 이 마법의 기기를 소비자들 손에 전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앱스토어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이패드

에 특화된 5천개 이상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20만개 이상의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앱스토어에 올라 있다.

애플에 따르면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이미 앱스토어에서 1천200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았으며 아이북 장터에서 150만권 이상의 전자책을 구매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많은 분석가들은 아이패드가 올해 내에 500만대가량 팔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은 포레스터리서치에 따르더라도 300만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

WSJ의 월트 모스버그 칼럼니스트는 이를 '노트북 킬러'라고 표현하며, "터치스크린을 갖춘 이 아름다운 기기가 휴대용 컴퓨터의 잠재력을 근원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며, 노트북의 우월성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패드는 이달 말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에서 발매되며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최○○기자』

(호남매일)=『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를 놓고 민주당 김진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예비후보가 라디오 토론회에서 자신이 적임자라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론을 벌였다.

김 · 유 두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의 집중 토론에 출연, 누가 더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본선에서 본선경쟁력이 뛰어난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번 라디오토론이 11~12일 실시되는 여론조사와 경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후보는 "난 민주개혁진영은 물론 합리적 보수성향의 표까지 흡수할 수 있어 표의 확장력에서 우위에 있다."라며 "유 후보는 지지층 못지않게 강한 거부층이 있어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김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인 김문수 지사보다 온건하고 보수적으로 비쳐 득표력이 부족하다."라며 "내가 단일후보가 되면 이번 주에 김 지사와 지지율이 역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 "한명숙(서울)-유시민(경기)-송영길(인천)로 야권 연합이 돼야 3곳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후보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정당경쟁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책 공약과 관련, "유 후보는 복지총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김 후보의 복지 · 교육공약 역시 2 · 3년 내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하략) 이○○기자』

(우리일보)=『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재정시스템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66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가 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됐다.

UN 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지역 6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 사회 개발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역내 최대 규모의 정부간 기구이다.

지난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8번의 마라톤 논의를 거쳐 채택된 전 세계적 빈곤 타파를 위한 목표로, 당시 참가한 192개 유엔참여국들과 23개 국제기구들이 모여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 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했다.(하략) 박○○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 중 경인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4일 10:15에 전송한 〈아이패드, 출시 한달만에 '밀리언셀러'〉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을, 호남매일 기사는 연합뉴스 5월 10일 10:24 전송 〈김진표 유시민, 후보 단일화 앞두고 '격돌'〉 제하의 기사 중 거의 대부분을 일부 표현만 바꾼 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또 우리일보 기사는 UPKOREA.net의 5월 13일 16:51 〈66차 UN ESCAP 총회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 제하 기사의 대부분을 일부 표현만 바꾼 채 옮겨 놓았다.

그런데도 위 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기사 말미에 각각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였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47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6월 1일자 34면 「"슬럼프 선수 · 포지션 중복 결국 제외"/허정무 감독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종 엔트리 발표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12시간 앞당겨졌다. 기습적인 발표. 허정무감독이 기자들이 묵는 호텔로 찾아온 시간은 모두가 휴식에 들어간 오후 9시(현지시간)께였다. 밤새 명단이 퍼져 팀 전체 사기에 적잖이 영향을 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리더의 섬세함. 그러나 그는 그만큼 냉정하기도 했다. 기회를 줬지만 부응하지 못한 선수, 특히 최근 부진한 선수를 가려냈다고 했다. 다음은 허 감독과의 일문일답.

- 3명의 탈락 배경은?

이근호는 현재 대표팀 공격수들과 비교해보면 슬럼프를 못 벗어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신형민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제 벨라루스와의 평가전에서 안 좋았다. 앞으로 월드컵 본선 세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여파가 오래갈 것으로 판단했다. 구자철은 포지션 중복 등을 고려했다.

–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포워드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 공격수 중 이동국이 완전치 않은 상황이라 그 점이 가장 고민스러웠다. 공격 쪽은 확실한 옵션이 없는 상황이었고, 선수들의 컬러도 비슷해 고민이 많았다.

– 이승렬의 선발 이유는?

이근호와 비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승세를 타는 선수가 누구인가' '최근 경기력이 좋은 선수가 누구인가'에 집중했다.

– 이동국은 그리스와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출전이 힘들지 않은가.

다소 힘들겠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는 가능하다'고 메디컬、피지컬 쪽의 의견이 모아졌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가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는데 상처가 거의 아문 상태다. 1주 후부터는 100% 팀 훈련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리스와 첫 경기에도 후반 교체출전이 가능하겠지만 무리하진 않겠다.(하략) 임○○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한국 축구대표팀 허정무 감독이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지 호텔에서 남아공월드컵 본선에 참가할 최종 엔트리 23명 명단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현지에 기자를 파견하지 않은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일문일답 기사의 리드 부분을 손질하고 문답내용의 일부 표현을 바꾸거나 축약한 뒤 자사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8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종 렬

3. 대구신문 발행인 김 경 발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1년 2월 24일자 5면「"뉴질랜드 지진, 한반도에 직접 영향 없다"」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3월 9일자 14면「예멘교도소서 반정부 폭동 60여명 사상」제하의 기사, 대구신문 3월 11일자 3면「여야, 한 · EU FTA 비준안 내달 처리」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 부산일보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도민일보)=『뉴질랜드에서 강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한반도에도 지진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지진이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는 판구조론상 태평양판과 인도호주판의 경계 지점에 있으나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진과 화산은 판구조의 경계지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연간 1만 4천여 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피해가 나는 규모 5.0 이상만도 연 20회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기상청은 한반도와 인근 해역(영해)에서 지난해 발생한 지진은 모두 42회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3.0 이상은 5회였다.

또 우리나라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측을 해온 1978년부터 1998년에는 연평균 19회, 디지털방식으로 관측한 199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디지털 방식 관측으로 미세 지진까지 감지돼 수치상으로는 지진 발생건수가 늘었으나 규모 3.0 이상은 연 9회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환태평양 연안에 있는 일본, 대만, 미국, 칠레 등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규모 6.3의 강진과 수차례의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다. 김○○기자』

(부산일보)=『중동지역에서 대통령 등 국가지도자의 퇴진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예멘의 한 교도소 안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재소자들과 진압 경찰이 충돌, 재소자 1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20명은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포하고 공중에 총격을 가하며 진압에 나섰지만 담요와 매트에 불을 붙이고 교도소 마당을 장악한 재소자들을 쉽사리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 사나에 있는 교도소 재소자 2천여 명은 지난 7일 저녁 폭동을 일으키고 수십 명의 경비교도원을 인질로 잡은 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폭동이 8일까지 계속됨에 따라 예멘 군은 이날 교도소 외곽에 병력을 배치하고 진압작전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살레 대통령의 고향인 사난에서는 지난달 반정부 시위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낙서가 대거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

섰다. 또 살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다마르지역에서도 1만여 명이 "떠나라. 떠나라"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쿠웨이트에서도 민주화시위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청년단체 회원 수백 명은 8일 쿠웨이트시티 정부청사 앞에서 2006년 취임한 나세르 총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총리 해임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중동 시위사태 발생 이후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첫 시위로 관심을 모았지만,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바레인에서는 강경 시아파 3개 정파가 입헌군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오만에서는 수도 무스카트 국영TV 앞에서 150명이 언론자유 확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란에서는 보안군이 8일 테헤란 시내의 혁명광장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최○○기자』

(대구신문)=『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한 · 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10일 "4월 중순 임시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 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야당도 한 · EU FTA 비준 처리에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합의 처리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4월에는 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후속대책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FTA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장○○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 중 경북도민일보의 기사는 연합뉴스 2월 23일 09:46 송고 「뉴질랜

드 지진 한반도에 영향 없다“」 제하의 기사 내용을 글자 한자도 첨삭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재하고도 기사 끝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부산일보의 기사는 연합뉴스 3월 9일 00:14 송고 「예멘 교도소 반정부 시위…사상자 속출(종합)」 제하 기사의 12개 단락 중 9개 단락의 내용을 전재하면서 일부 표현과 순서를 바꾼 뒤 기사 끝에 자사 기사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대구신문 역시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크레딧으로 〈연합뉴스〉 대신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타 언론사 보도를 자사기자 이름으로

▲ 2010 - 112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0년 5월 10일자 19면 「“北, 버블제트 어뢰 공격 불가능”/EU 방위산업 전문가 조명진 박사 주장 눈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거야!”

군 고위 관계자가 지난 7일 “천안함 침몰 해저 펄 속에서 검출된 화약성분은 TNT보다 위력이 강한 ‘RDX’(백색 · 결정성 · 비수용성 폭약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폭약 성분 배합비율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천안함 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합금 파편들은 어뢰 앞부분의 탐지센서 외피를 구성하는 알루미늄 · 마그네슘합금이지만, 이것 역시 북한이나 중국 · 러시아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천안함이 미제 혹은 독일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가설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모 신문은 ‘독일제 어뢰다’라고 못 박아 보도하기도 했다. RDX가 미국 · 영국 · 독일 · 캐나다 등 주로 서방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그 가운데서도 독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방위산업 전문가로 활동 중인 한 연구가가 온갖 설들을 일축하는 주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눈길을 끈다. 누리꾼의 폭발적인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와 독일국제안보연구원 등에서 활동하고, 유엔 집행이사회 대외국 소속으로 동아시아 안보문제 자문역을 맡고 있는 조명진 박사는 8일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 공격이 유력하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 측면에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미제나 독일제 등 서방의 어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버블제트로 천암함을 단방에 두 동강낼 위력을 지닌 어뢰는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에나 장착되는데, 한미합동 훈련이 벌어져 미군의 이지스함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군함들이 바다에 떠 있는 상황에서 1300톤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우리 해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게 조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북한 잠수함의 어뢰발사대와 독일제 어뢰는 호환성이 없어서 북한에서 어뢰를 밀수입해 쓸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하략) 엄○○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사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문제의 대목은 두 번째 문장인 〈군 고위 관계자가 지난 7일 "천안함 침몰 해저 펄 속에서 검출된 화약성분은 TNT보다 위력이 강한 'RDX'(백색 · 결정성 · 비수용성 폭약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폭약 성분 배합비율과는 다르다"고 전했다.〉와 세 번째 문장 〈그는 또 "천안함 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합금 파편들은 어뢰 앞부분의 탐지센서 외피를 구성하는 알루미늄 · 마그네슘합금이지만, 이것 역시 북한이나 중국 · 러시아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등 두 군데이다.

이 두 문장은 위 기사를 실은 스포츠칸보다 이틀 전에 발간된 세계일보 5월 8일자 1면 단독 머릿기사에 있는 '군 고위 관계자'의 언급 내용과 약간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 거의 일치한다.

'군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이 세계일보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데다, 스포츠칸 기사 중 군 고위 관계자 발언 날짜가 세계일보와 같은 5월 7일인 점 등으로 미루어 스포츠칸이 세계일보의 단독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런데도 스포츠칸 취재기자는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은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 언론사 보도의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80 신문윤리강령 위반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주 문〉

호남매일 2011년 3월 18일자 1면 「후쿠시마 원전, 오늘 중대 고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호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망, 실종자가 1만 3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 원전의 17일 오후 2시 현재 상황은 헬기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에 물을 붓고 있으나 상황 반전이 쉽지는 않다.

대지진 다음날인 12일부터 시작된 폭발사고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된 데다 사용후 핵연료 과열로 인한 다량의 방사선 누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차 재앙으로 꼽히는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부 연안에 직격탄을 날렸다면 2차 재앙인 '핵공포'는 세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 최대 위협은 4호기= 일본 대지진 당시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4호기가 이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사용후 핵연료봉의 핵분열 우려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도쿄전력은 16일 후쿠시마 원전 4호기의 사용후 연료봉이 공기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핵분열 연쇄 반응의 재개 가능성이 "0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피폭시 원전의 피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재때 제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손상으로 인한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

성에 극도의 우려를 나타냈다.(중략)

◇ **향후 이틀이 중대고비=** 프랑스 원자력연구기관인 '방사능 방어 및 핵안전 연구소(IRSN)'의 티에리 샤를 소장은 16일(현지시간) "13일 이후로 어떤 대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48시간이 중대 고비"라고 말했다.(후략)/이○○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每日新聞 3월 17일 14:30 송고 기사(3월 18일자 1면 게재)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쳐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첫 문장을 새로 쓰고 每日新聞의 내용 중 절반가량을 줄였으나 每日新聞 기사의 전개 및 구성과 일치하고 '제때'를 '재때'로 오기한 每日新聞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뤄볼 때 명백한 표절행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통신기사 등 출처 없이 전재

▲ 2010 - 124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忠淸日報 발행인 조 승 남

2.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3.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주 문〉

忠淸日報 2010년 11월 1일자 20면「'로켓' 손흥민 데뷔골 '작렬'」제하의 기사와 사진, 호남매일 11월 10일자 2면「청목회 수사, 검-야당 대치 격화」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11월 15일자 20면「이대명 대회 첫 3관왕 명중」제하의 기

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忠淸日報 호남매일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忠淸日報)=『'로켓' 손흥민(18 · 함부르크SV)이 그림 같은 데뷔골을 쏘아올리며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 성공시대를 열었다.

사흘 전 프랑크푸르트와 치른 리그 컵 대회에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은 30일(한국시간) 2010-2011 분데스리가 10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전반 24분 골키퍼 키를 넘기는 역전 골로 독일 축구 연착륙을 알렸다.

손흥민은 2007년 다소 늦은 15세의 나이에 강원도 원주 육민관중학교에서 처음 축구공을 접했지만 타고난 스피드와 유연성으로 이듬해 16세 이하(U-16) 축구대표팀에 발탁됐고,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선수권대회에 첫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 4골이나 뽑아내며 준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이후 축구 명문 동북고에 진학한 태극소년 손흥민은 2008년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독일 분데스리가로 축구 유학을 떠나면서 한층 기량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선 대표팀 내 최다인 3골을 터트리며 한국의 8강행을 이끌었다.

비록 한국은 4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나이지리아와 8강전에서 손흥민이 전반 40분 상대 미드필드 진영 중앙을 휘젓다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장면은 FIFA가 '오늘의 골'로 선정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하략)』

(호남매일)=『(전략) 민주당 등 야5당은 검찰의 이 같은 소환조사를 일절 불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개입 의혹을 겨냥해 집중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당내에서도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어 여야간 대립 전선이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야 의원과 국회 모두를 마치 어려운 사람에게 돈 받아먹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공작에 절대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딱 한 부로 51곳에 대한 압수수색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검찰이 51건을 한 장으로 받아 이것을 사본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포폰 논란'을 겨냥, "어제 민주당 우제창 의원에 의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를 이용해서 수십만 건 지워 버렸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후에도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검찰 고위간부에 의해서 확인됐다"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야5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하략)』

(충북일보)=『한국 사격의 기대주 이대명(22 · 한체대)이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이대명은 14일 광저우의 아오티 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합계 685.8점(본선 585점 + 결선 100.8점)으로 중국의 탄종량(684.5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50m 권총 단체전과 이날 오전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낸 이대명은 한국 선수단 첫 3관왕에 올랐다.

이대명은 본선에서 탄종량과 같은 585점을 쐈지만 5번째 시리즈 점수에서 뒤져 2위로 결선에 올랐다. 긴장한 탓인지 결선 첫 발에서 7.9점을 쏘는 데 그친 이대명은 9.9점을 기록한 탄종량과 격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대명은 3발 째에 10.3점을 기록하며 페이스를 찾았고, 이후 5발 째까지 모두 10점대를 쏴 탄종량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6발 째에서도 10.5점을 쏜 이대명은 9.5점에 그친 탄종량을 밀어내고 역전에 성공, 승기를 잡았다. 나머지 4발에서도 모두 10점대를 기록한 이대명은 2위 탄종량을 1.3점차로 제치고 3관왕을 확정했다.(하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忠淸日報 호남매일 충북일보의 위 기사들은 각각 연합뉴스 10월 30일 11:28 송고「손흥민, 분데스리가 성공시대 활짝」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진, 11월 9일 10:30 송고「한 "檢 소환조사 응할 것" vs 野 "공작엔 협력 안해"」제하의 기사, 뉴시스 11월 14일 14:01 송고「[광저우AG] [종합] 사격 이대명, 10m 공기권총 金 '3관왕 등극'」제하의 기사 등 연합뉴스와 뉴시스 기사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들은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66 신문윤리강령 위반
江原日報 발행인 이 희 종

〈주 문〉

江原日報 2010년 12월 3일자 9면「위키리크스 비밀문서 공개 파문 확산/"김정일 줄담배… 건강은 양호"」,「"러시아 · 체첸 등은 사실상 마피아 국가"」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 줄담배…”〉=『미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줄담배를 피우는 등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지만 건강이나 정신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또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북한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때 주민들의 식량난과 영양실조를 숨기기 위해 제 때 식사와 비타민으로 상봉 대상자들을 살찌게 한 뒤 상봉장으로 보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영원한 적은 없다”며 미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 전혀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한 여성사업가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선양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알렸다. 묘향산 초대소에서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이 사업가는 김정일이 “건강이 좋고 정신도 또렷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했다. 상세한 부분까지 파고들고, 카리스마가 있었으며, 기억력이 좋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건강에도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식사 중에는 위스키 칵테일을 곁들였고 식사 내내 줄담배를 피웠다. 김정일의 실질적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은 별도의 소파에 앉아 면담 내용을 메모했다.

선양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2010년 1월 비밀전문에서 대북사업과 관련된 거물급 인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화폐개혁은 당고위층의 ‘갈수록 커지는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는 또 김정일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먼 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 체첸은 마피아 국가”〉=『스페인 검찰 간부가 러시아를 ‘마피아 국가’로 표현한 사실이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 공개로 드러났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1일 전했다.

공개된 외교전문에 따르면 지난 1월 스페인 검찰의 호세 페페 그린다 곤살레스 검사는 마드리드 주재 미국 외교관에게 러시아와 벨라루스, 체첸은 사실상 “마피아 국가”가 됐다고 발언했다. 곤살레스 검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체첸에서는 정부와 범죄조직의 활동을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문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마피아 조직에 연루돼 있는지 그리고 조직의 활동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다. 그린다 검사의 발언 가운데는 전 러시아 KGB 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러시아 정보 당국이 범죄 조직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그린다 검사는 또 러시아 정당들은 범죄 조직과 “손잡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江原日報의 위 기사들은 각각 연합뉴스 12월 2일 09:51 송고 「“김정일 줄담배…건강은 양호”〈위키리크스〉」, 12월 2일 10:12 송고 「“러시아는 마피아 국가”〈위키리크스〉」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전재한 기사다.

그런데도 江原日報는 기사 끝에 연합뉴스 크레디트를 다는 등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임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통신기사 등 출처 명시'에 위배되는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096	全光日報	4. 2.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전격 타결'	경 고
2010-1098	호남매일	4. 2.	김정일, 내달 1~3일 중국 방문	주 의
	江原日報	4. 6.	남아공 흑백갈등 심화… 월드컵 비상	〃
2010-1123	全光日報	〃	5 · 18 특별한 인연 '데이비드 도링거'씨 광주 온다	경 고
2010-1124	스포츠칸	5. 10.	"北, 버블제트 어뢰 공격 불가능"/EU 방위산업 전문가…	주 의
2010-1148	全光日報	6. 15.	"시간강사 자살사건 진상 철저 조사를"	경 고
	호남매일	6. 22.	'16강의 빛' 새벽을 밝혀라	〃
2010-1149	江原日報	6. 8.	"원유 유출 차단작업 가을까지 갈 수도"	주 의
	忠淸日報	6. 18.	첫 원정 16강 '희망은 있다'	〃
2010-1172	全光日報	8. 9.	새 국무총리에 김태호… 39년만의 40대 총리	경 고
	우리일보	8. 10.	8 · 8 개각 놓고 치열한 공방 불가피	〃
	호남매일	8. 13.	日징용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단합'	〃
2010-1173	江原日報	7. 7.	美-러시아 조지아 영토 통합 놓고 '설전'	주 의
2010-1195	우리일보	8. 31.	한나라당, 총리 후보자 등 사퇴 파장 수습	경 고
2010-1196	江原日報	9. 8.	IAEA 보고서 "이란 고농축 우라늄 22kg 확보"	경 고
2010-1197	호남매일	9. 6.	민주-공화 '오바마 자리' 쟁탈전	주 의
2010-1219	江原日報	10. 18.	"日, 한국 원화 사들이자… 강경론 대두" 외	경 고
2010-1220	호남매일	10. 6.	공공기관, 세금 탈루 '앞장'	주 의
2010-1247	江原日報	10. 30.외	천 회장〈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귀국시 소환조사 후 영장 청구 외	경 고
2010-1265	호남매일	12. 7.	자동차 터주고 축산물 양보 얻어	경 고
2010-1267	호남매일	12. 7.	北, 南해상 훈련에 '전면전' 위협	경 고
2011-1006	南道日報	1. 4.	광주 · 전남 개인워크아웃 '시들'	주 의
	全光日報	〃	〃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1-1007	호남매일	1. 4.	광주 · 전남 개인워크아웃 '시들'	경 고
2011-1008	아시아투데이	1. 4.	北 노농적위대, 軍 격상은 김정은 구상?	주 의
	충청타임즈	1. 5.	국립대 교수 철밥통 깨진다/3월부터 성과연봉제 시행	〃
	무등일보	1. 10.	민주당 손학규 대표 취임 100일/한나라 꼬리표 떼고 연착륙 성공	〃
2011-1009	호남매일	1. 6.외	아프간 미군, 첨단공중정찰기 실전배치 외	경 고
2011-1010	충청타임즈	1. 4.	"추신수, 올 겨울 장기계약 없다"	주 의
	南道日報	1. 13.	'홍영조 PK 실축' 북한, UAE와 무승부	〃
	전북중앙신문	1. 14.	'스타 꿈꾸는' 진짜 스타들 안방극장 점령 나섰다	〃
	충북일보	〃	"K리그보다 쉽네" 제파로프 결승골/…	〃
2011-1011	江原日報	1. 5.외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본격 논의 외	경 고
2011-1043	호남매일	2. 8.	李대통령 "4대강 살리기로 국격 높여"	경 고
2011-1044	아시아투데이	1. 21.	저축은행 고질적 문제 수술대 오른다	주 의
	경기신문	1. 24.	윤빛가람 '한풀이 골' 이란 모래바람 재우다/조광래호 1-0 승…	〃
	기호일보	2. 8.	"석 선장, 차도 안 보여"	〃
	全南日報	〃	"UAE원전, 손해 장사될 수도"/이혜훈, 11조 28년 상환 조건…	〃
2011-1045	江原日報	1. 25.외	헤커박사 "美도 北核시설 정교함에 놀라" 외	경 고
2011-1046	호남매일	1. 31.외	'6경기 5골' 구자철, 득점왕 등극 외	경 고
2011-1047	충청타임즈	1. 20.외	손흥민 역대 최연소 골 쐈다 외	주 의
	충북일보	1. 24.	"해적과 협상은 없다"/정부, 이례적 군사대응… 경고 메시지	〃
	南道日報	1. 28.	"축구가 가장 큰 인기 끌도록 하겠다"	〃
	대구신문	1. 31.	동계 아시안게임 팡파르	〃
2011-1080	호남매일	3. 18.	후쿠시마 원전, 오늘 중대 고비	경 고

2.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통신 등이 제공한 사진 출처 없이 전재

▲ 2010 - 1126 신문윤리강령 위반
부산일보 발행인 김 종 렬

〈주 문〉

부산일보 2010년 5월 4일자 23면 「김태균 시즌 100타점 이상 '정조준'」 기사의 김태균 단독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부산일보는 위 기사에서 연합뉴스 사진을 전재하고도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일보 스포츠 2010년 5월 4일 화요일 제 20378 호 23

김태균 시즌 100타점 이상 '정조준'

일본 프로야구 성공적 적응
타점 2위, 홈런 5위 등 맹타

기대 이상이다. 올해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김태균(지바 롯데 마린스)이 지난달 성공적인 적응기간을 거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감기리로까지 확립하고 있다.

5일 경기는 최근 김태균 활약상의 결정판이었다. 그는 지바 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린 니혼햄 파이터스와의 홈경기에서 1-2로 뒤진 3회 좌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3점 포로 올시즌 홈 구장 첫 홈런을 신고했다. 이어 4-4 동점이 된 5회에는 상대 투수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우측 담장을 다시 넘겼다. 또 7-5로 앞선 8회 2사 1, 3루에서는 커맷한 좌전 적시타를 때려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혼자는 6-3로 이겨 퍼시픽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김태균은 도루를 제외한 타격 전 부문에서 퍼시픽리그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격 7위(0.321)를 비롯해 홈런 5위(7개), 타점 2위(23점)에 올라 있고, 특히 승리 타점은 5개를 올려 공동 1위에 자리잡았다. 35경기에서 30타점을 수확한만큼 지금 추세를 이어간다면 144경기를 치르는 시즌 후 타점은 산술적으로 130개까지 거둬들일 수 있다. 적게 잡더라도 그가 올해 초 일본 출국 당시 밝힌 시즌 80타점 목표를 넘어 100타점은 충분히 따낼 전망이다.

김태균이 일본야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아구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이종범이나 이병규, 이승엽 등 먼저 일본에 진출했던 선배들보다 일본의 현미경 아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타자라고 입을 모았다. 부진해도 조바심을 내지 않는 성격에다 탁월한 선구안과 간결한 스윙폼을 갖고 있어 제구력이 뛰어난 일본 투수들에게 대응을 잘 할 수 있다는 평가였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는 일반적인 거포와는 달리 바람쪽 공을 밀어치는 부챗살 타법에도 능한 것이 김태균이 쉽게 적응을 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3일까지 김태균의 안타 분포도를 보면 좌측이 17개, 우측이 10개, 중견수 방면이 8개로 전형적인 스프레이 히터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태균 일에서 1-3번을 치는 니시다 스요시타율 0.331 20타점) 오가노 다카시오.338 24득점 11도루) 아구지 다다히로0.355 3홈타점) 등이 김태균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빼른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

김태균은 "팀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줘 가벼운 마음으로 타석에 설 수 있다"면서 "나는 홈런타자가 아니고 노려치지도 않는다. 앞으로도 찬스에서 타점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태균이 햄버거 먹는 이유는?

"태균 햄버거를 팬들이 싸게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이 3일 니혼햄 파이터스 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친 뒤 한 말이다. 롯데 구단은 지바 마린스타디움 내 매장에서 '태균 김치 버거'를 팔고 있다. 가격은 480엔이지만 김태균이 홈런을 치면 선착순 50명에 대해 50엔으로 판매를 한다.

김태균이 햄버거를 팬들에게 많이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홈에서 많은 홈런을 치겠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

강희경 기자

김 태 균 성 적

부 문	순 위	기 록
승리타점	1위	5개
타점	2위	23점
홈런	5위	7개
안타	7위	43개
타율	7위	0.321
득점	10위	22점
볼넷	4위	16개
출루율	6위	0.391
장타율	5위	0.615
희생플라이	1위	2개

▲ 2010 - 124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세계일보 발행인 유 종 관
2.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세계일보 2010년 10월 30일자 19면 「이창동 감독 '시' 최우수작품상 영예/제47회 대종상 4개 부문 석권…윤정희 여우주연상」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 헤럴드경제 11월 15일자 29면 「마장마술 金 뒤에 가슴 아픈 사연 있었네/김균섭 낙마사고 삼촌 대신 금」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세계일보는 연합뉴스가 東亞日報에서 제공받아 서비스한 사진을,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 제공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계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잇따라 '주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창동 감독 '시' 최우수작품상 영예

제47회 대종상 4개 부문 석권… 윤정희 여우주연상

이창동 감독의 '시'가 29일 저녁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47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주요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 각본상 수상작인 이창동 감독의 5번째 장편 '시'는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시나리오상 등 주요 4개 부문을 차지했다. '시'는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60대 할머니 미자(윤정희·사진)가 시쓰기에 도전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린 영화다.

특히 윤정희는 '만무방'에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한 후 16년만의 복귀작 '시'로 또다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윤태호의 원작만화를 바탕으로 한 강우석 감독의 '이끼'도 감독상을 비롯해 음향기술상, 미술상, 촬영상 등 4개 부문을 수상, '시'와 함께 최다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최다관객(622만명)을 동원한 '아저씨'는 남우주연상, 영상기술상, 편집상 등 3개 부문을, 김태균 감독의 '맨발의 꿈'은 기획상과 음악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스릴러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은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남녀 신인상은 '바람'의 정우와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이민정에게 돌아갔다.

여우조연상은 '하녀'의 윤여정이, 남우조연상은 김희라('시')와 송새벽('방자전')이 공동수상했다. 원로배우 신영균과 최은희는 각각 자랑스런 영화인대상과 영화발전공로상을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목록.

▲최우수작품상='시' ▲감독상='이끼' ▲남우주연상=원빈('아저씨') ▲여우주연상=윤정희('시')▲남우조연상=김희라('시') · 송새벽('방자전') ▲여우조연상=윤여정('하녀') ▲신인감독상=장철수('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신인여우상=이민정('시라노 연애조작단') ▲신인남우상=정우('바람') ▲영상기술상='아저씨' ▲음향기술상='이끼' ▲시나리오상='시' ▲편집상='아저씨' ▲조명상='악마를 보았다' ▲촬영상='이끼' ▲음악상='맨발의 꿈' ▲의상상='방자전' ▲미술상 ='이끼' ▲기획상='맨발의 꿈' ▲영화발전공로상=최은희 ▲자랑스러운 영화인대상=신영균 ▲해외영화특별상=압둘 하비드 쥬마 두바이국제영화제 회장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세계일보 2010년 10월 30일자 19면〉

마장마술 金 뒤에 가슴아픈 사연 있었네

김균섭 낙마사고 삼촌대신 금

승마

주위에선 '아시안게임 4연패'의 위업을 축하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번 금메달은 그 이상이다.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아시안게임 4연속 금메달을 달성한 한국 승마 대표팀에 남다른 사연을 가진 선수들이 주목을 끈다. 김균섭(인천체육회)과 김동선(한화갤러리아 승마단)이 그들이다.

김균섭은 4년 전 이맘때 비보를 들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종합마술에 출전했던 작은아버지 김형칠 선수가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장례식 사진에서 영정을 든 채 눈물을 흘리던 이가 바로 김균섭이었다. 그는 슬픔을 딛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했고 결국 작은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뤘다.

한국 승마 마장마술 대표팀이 14일 중국 광저우 승마경기장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사하고 있다.

김균섭은 승마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할아버지 김철규 씨는 1964년 도쿄올림픽 승마 대표선수였다. 아버지 김성칠 씨는 인천승마협회 전무이사다. 김균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승마에 입문하며 작은아버지 김형칠 씨의 혹독한 지도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은 대회 전 몸의 무게를 빼어 세 간의 이목을 끌었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입건됐던 것. 당시 비난 여론이 일어 대회 참가가 불투명해 보였으나 어렵게 출전 기회를 잡았고 결국 금메달 사냥에 일조했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헤럴드경제 2010년 11월 15일자 29면〉

▲ 2011 - 1086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1년 2월 23일자 D3면 「암덩어리 2cm 이하 때 찾으면 췌장암 · 담낭암 완치된다」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朝鮮日報의 위 적시 사진은 프리랜서 작가가 찍은 것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입수해 공개한 사진으로 朝鮮日報는 출처 소개 없이 사진만 게재했다.

이 같은 사진 게재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뉴스 속의 질병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 암인 췌장암과 담낭암에 최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말기라는 보도가 나오고, 소설가 박완서씨가 담낭암으로 별세한 뒤의 일이다.

국내 전체 암 가운데 담낭·담도암은 6위, 췌장암은 9위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9000여명의 췌담관암(췌장암·담낭암·담도암) 환자가 발생하는데,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완치율(5년 생존율)은 7.6%(췌장암)과 24.9%(담낭·담도암)에 불과해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모든 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60%에 가깝다.

◆암세포 매우 빨리 자라고 전이 잘 돼

췌담관암은 조기 발견이 잘 되지 않는다. 암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고, 특히 췌장은 위 뒤에 숨어서 몸통 깊숙이 위치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복부초음파 검사 등으로 암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또, 두 암은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다른 장기나 림프절에 잘 퍼진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서동완 교수는 "췌담관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고 복부 불편감이 있거나 복통 등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암기로 경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치료법도 마땅치 않다. 암이 아주 초기가 아닌 경우 항암제나 방사선치료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나마 최근 표적항암제가 개발되면서 생존율 향상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도 여의치 않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정고은 교수는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은 20~25%, 담낭암은 10~30%, 담관암은 40~50% 정도"라며 "수술 후 재발률도 높아 췌장암은 80%, 담낭·담도암은 70% 정도"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췌담관암은 여기저기 배

췌장·담낭의 위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제공

담낭암은 복부초음파로 찾고

조기 발견 힘든 췌장암은

고위험군 내시경초음파 권장

우 빨리 퍼지기 때문에 수술해도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췌담관암 환자의 98% 정도가 결국 이 암 때문에 사망할 정도로 완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 덩어리가 2cm 이하이면서 다른 장기나 림프절에 전이되지 않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유일한 해법이다.

◆담관암은 복부초음파, 췌장암은 복부CT로 검진

담낭·담도암은 대부분의 종합건

췌장암이 전이돼 간이식을 받았던 스티브 잡스가 최근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췌장암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췌담관암종 암은 다른 암보다 5년 생존율이 월이지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오른쪽 큰 사진이 최근 모습.

강검진에 포함돼 있는 복부초음파 검사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담석, 간디스토마 감염, 만성 췌장성 대장염, 담관염 등이 있으면 담낭·담도암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췌장암은 복부초음파만으로는 췌장의 3분의 1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 복부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으면 췌장 모든 부분에 발생하는 암을 발견할 수 있지만, 피폭 방사선량 등을 고려하면 매년 검사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 그 대신,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40대 이후, 유전성 췌장염·만성 췌장염 환자, 당뇨병 환자 중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 등은 매년 내시경초음파로 췌장암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서 교수는 "내시경초음파는 위장벽에서 초음파를 쏜아 검사하는 것으로, 2cm 이하의 췌장암이나 담낭암까지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원 헬스조선 기자 kkw@chosun.com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hj@chosun.com

〈조선일보 2011년 2월 23일자 D3면〉

〈통신 등이 제공한 사진 출처 없이 전재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097	경도신문	4. 16.	천안함 침몰 20일만에 함미 인양 모습 드러내	경 고
2010-1099	머니투데이	3. 29.	1주일 훈련해 銀… “연아야 잘했다”	주 의
	파이낸셜뉴스	3. 31.	서희경 이젠 메이저퀸도 넘본다	〃
	한국일보	3. 31.	김태균 2경기 연속 결승타	〃
	경향신문	4. 5.	13세 김해진 트리글라프 우승/02년 김연아 닮았네	〃
	국민일보	4. 5.	김해진 “연아 언니 닮을래요”	〃
	매일경제	4. 7.	김연아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
	세계일보	4. 12.	‘새색시’ 이영애 남편과 첫 공개 나들이	〃
2010-1101	江原日報	4. 13.	추신수 터졌다, 시즌 첫 홈런!	주 의
2010-1101	경인일보	〃	꿈만 꾸던 그린 탐낼만한 재킷	〃
	全羅日報	〃	“톱10 만족”	〃
	大田日報	4. 14.	예열 끝난 탱크 “이제는 우승”	〃
	蔚山每日	4. 16.	연아, 오늘 아이스쇼	〃
2010-1102	중부매일	4. 9.	신임과 불신임 ‘엇갈린 운명’/‘부진에도 등판’ 박찬호…	주 의
	忠淸日報	4. 13.	모습 드러낸 함미	〃
	전북중앙신문	4. 16.	실종자들 주검으로 돌아왔다	〃
2010-1125	한국일보	4. 29.	“칸첸중가 등정 논란… 홀리 여사 만나 의혹 풀 것”/…	주 의
	경향신문	5. 3.	일본서 시즌 첫승 신지애 ‘세계 1위 보인다’/…	〃
	국민일보	5. 12.	박지성 · 안정환 · 이청용 ‘발끝’을 주목하라/…	〃
	서울신문	〃	“상업주의 등반? 개인의 선택일 뿐”/‘14좌 완등’ 오은선 귀국회견/…	〃
2010-1150	東亞日報	5. 24.	장타 울린 신들린 퍼트	주 의
	파이낸셜뉴스	5. 26.	‘특급 신인’ 몰려온다, 신인왕은 누가?	〃
	한국일보	〃	“브라질과 함께 16강 진출”/북한대표 정대세 큰소리	〃
	문화일보	5. 27.	유승민 “게임마다 감독님과 내기…돈 잃긴 싫더라구요”	〃
	머니투데이	6. 7.	MB, 대통령 최초 사병묘역 깜짝방문	〃
	세계일보	6. 8.	차범근 前감독 SBS 마이크 잡는다/한국戰 등 주요경기 해설 맡아	〃
	서울경제	6. 12.	‘제주 바람’이 선택한 그녀, 홍란	〃
	헤럴드경제	6. 17.	예선 1차전 ‘무패 南美’ 오늘밤 한국이 깬다	〃
2010-1151	全羅日報	5. 25.	추신수, 역시 해결사	주 의
	새전북신문	5. 26.	“그리스 깰 비책 북한 통해 찾는다”	〃
	慶南日報	6. 11.	허정무-레하겔, 지략대결 승자는	〃
	경상일보	〃	휘슬이 울리면 ‘원정 16강’ 붉은 마법이 시작된다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151	중부매일	〃	그리스 ‘先수비 後역습’ 대응책은	〃
2010-1152	每日新聞	5. 24.	4년만에… 유선영 LPGA 첫 우승	주 의
	江原日報	6. 14.외	이정수 최단시간 첫 골 축포… ‘캡틴’ 박지성 이름값 외	〃
	忠淸日報	6. 22.	나이지리아 ‘무조건 깬다’	〃
2010-1174	파이낸셜뉴스	7. 15.	전군 지휘관회의	주 의
	국민일보	7. 24.	최나연 공동2위/안선주도 추격전/에비앙마스터스 둘째날…	〃
	헤럴드경제	7. 26.	‘탱크’ 쿼드러플보기 와르르~	〃
	세계일보	7. 29.	“사실상 결승전… 반드시 꺾겠다”/최인철 감독 문답	〃
	서울경제	〃	한나라 수도권 · 충청서 완승/서울 은평을 등 5곳 휩쓸어…	〃
	매일경제	8. 5.	‘역시 메시!’ 4분간 2골/K리그올스타, FC바르셀로나에 2대 5 역전패	〃
	한국일보	8. 7.	조윤지 “신인왕이 보여요” 볼빅 여자오픈 우승	〃
	문화일보	8. 10.	내일 수원경기장에 가면 ‘내일의 한국축구’를 본다/…	〃
2010-1175	영남일보	7. 7.	‘결승 티켓 · 황금 신발’ 누구 발 끝에 걸릴까/…	주 의
	호남매일	7. 29.	한나라, 7 · 28재보선 5곳 완승	〃
	忠淸日報	8. 12.	떠나는 정운찬	〃
2010-1198	머니투데이	8. 27.	판초입은 李대통령	주 의
	헤럴드경제	〃	카터 訪北/김정일 면담 성사땐 美 “의중파악 가능”	〃
	국민일보	8. 30.	여고생 배희경 “고맙다 폭우”	〃
	세계일보	9. 3.	2기 조광래호 “세트플레이 더 세밀하게”	〃
2010-1200	제주일보	9. 4.	‘추추 트레인’ 타격 폭발	주 의
	호남매일	9. 7.	‘4대강 사업’ 국회 검증 촉구	〃
2010-1221	한국경제	9. 29.	‘美 PGA 스타’ 카브레라 · 비예가스 “우승하러 한국 왔어요”	주 의
	국민일보	10. 5.	‘클리브랜드 새 역사’ 추신수	〃
	머니투데이	〃	박근혜 ‘첨단 이미지’/스마트폰 꺼내들고 “美 정보공개 본받아라”	〃
	파이낸셜뉴스	〃	不惑!… 물 오른 ‘한국산 탱크’ 최경주	〃
	세계일보	10. 12.	‘영원한 에이스’ 가을잔치 이름값/배영수 무실점 세이브	〃
	東亞日報	10. 18.	日 그린 ‘코리안데이’	〃
	헤럴드경제	〃	‘김-김 초정밀 샷’ 韓日 그린 점령하다	〃
2010-1222	중부일보	10. 1.외	추신수, ‘쾅~’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 타점 외	주 의
	大田日報	10. 4.	코리안 특급, 아시안 특급 되다	〃
	호남매일	10. 8.	헝가리 슬러지 유출 복구 1년 전망	〃
	忠淸日報	10. 14.	칠레 매몰광부 첫 구조 ‘69일만의 기적’	〃
2010-1250	파이낸셜뉴스	10. 25.	강지민, LPGA 투어 5년만에 우승/9언더파 204타…	주 의
	국민일보	11. 2.	토종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 복원	〃
	머니투데이	11. 5.	李대통령 “세계1등 목표, 한국의 국력”	〃
	한국경제	11. 8.	신지애 2승째… 사흘간 파5홀서만 버디 11개/…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250	경향신문	11. 15.	2관왕 명중, 김윤미 “아가야 고마워”	〃
2010-1251	每日新聞	10. 28.	에이스 류현진 대만전 출격 예약	주 의
	중부일보	11. 4.	‘산소탱크’ 박지성 맨유의 ‘심장’으로…	〃
2010-1268	헤럴드경제	11. 25.	‘亞인간탄환’ 류상 화려한 부활/남자 110m허들 13초09金	경 고
2010-1269	머니투데이	11. 29.	李 대통령, 中특사 면담	주 의
	문화일보	〃	지영준-남자마라톤	〃
	東亞日報	11. 30.	동아가 키운 ‘희망’, 한국의 ‘자랑’ 되다	〃
	한국일보	〃	조연으로 깜짝 金/2년 뒤엔 당당한 주연	〃
	서울경제	12. 11.	“날 내친 요미우리 후회하게 만들어야죠”/…	〃
2010-1270	중부매일	12. 8.	김비오 “꿈만 같다”/한국 최연소 PGA 투어카드 획득	주 의
2010-1271	경남일보	12. 8.	신지배, 세계1위로 시른 바람	주 의
	중부매일	12. 10	AG 3관왕 마린보이 박태환 포상금 6억원/…	주 의
2011-1022	문화일보	1. 6.	175cm 안재욱 작다고 얕보면 큰 코 다친다	주 의
2011-1012	서울신문	1. 12.	축구천재 메시, 통합 ‘FIFA발롱도르’ 첫 수상	〃
	한국일보	1. 13.	‘한명숙 재판’ 밝혀야 할 3가지 쟁점	〃
	헤럴드경제	〃	호주 스타 케이힐 “박지성이 亞 최고”	〃
	매일경제	1. 15.	하버드대법대 아시아계 첫 종신 女교수 석지영씨/…	〃
2011-1013	全北日報	1. 4.	하인스 워드 ‘터치다운’ 피츠버그, 디비전 우승	주 의
	大邱日報	1. 5.	‘눈폭탄’ 포항…이틀째 교통 · 물류대란	〃
	충청타임즈	1. 6.	분실 스마트폰 사생활 걱정없다	〃
	호남매일	〃	호화여객선 ‘디즈니 드림’	〃
	기호일보	1. 7.	대한항공, 박태환 선수 후원 ‘1년 더’	〃
	무등일보	〃	대한항공, 박태환 후원 연장	〃
	忠淸日報	〃	“태풍의 레이업슛”	〃
	인천신문	1. 11.	문태종 팬 투표 4위/30일 올스타전 출전	〃
	인천일보	〃	인천 전자랜드 문태종 올스타 ‘베스트 4위’에	〃
	중부일보	1. 12.	C조 1차전 바레인전서 전반 40분 · 후반 7분 연속골로 2-1 승리	〃
2011-1016	아시아투데이	1. 5.	정성룡, 몸값 높이기 워밍업?	주 의
2011-1048	매일경제	1. 29.	구자철을 잡아라… 유럽팀 러브콜	주 의
	서울경제	〃	英 볼튼도 구자철에 눈독	〃
	국민일보	1. 31.	김효범 · 이종애 ‘별 중의 왕별’	〃
	문화일보	2. 1.	얼음…모래…그린 위에서… 설연휴, 스포츠는 쉬지 않는다	〃
	파이낸셜뉴스	2. 2.	“검찰 魂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 필요”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1-1048	헤럴드경제	2. 7.	밴쿠버 여운 가시기도 전에…훈련 또 훈련 ‘3관왕’ 결실	〃
	머니투데이	2. 9.	개헌 ‘목청 높인’ 친이 ‘말 아끼는’ 친박	〃
	한국일보	2. 12.	구자철-손흥민 분데스리카 코리안 첫 맞대결 새역사 쓸까	〃
2011-1049	경상일보	1. 19.	집중력 앞선 삼성, KT 7연승 저지	주 의
	중부일보	1. 24.	윤빛가람 ‘벼락 결승골’ ‘내가 바로 이란 종결자’	〃
	충북일보	〃	해외파 싸움 압도한 ‘캡틴 박’	〃
	호남매일	〃	이규혁, 통산 4번째 정상 ‘금자탑’	〃
	중부매일	1. 27.	조광래 감독 믿음, 결국 독… 그러나 희망을 봤다	〃
	아시아투데이	1. 31.	태광 비자금 수사 마무리… 이호진 회장 구속 기소	〃
	충청타임즈	〃	커밍스 강력한 덩크	〃
	인천신문	2. 1.	SK ‘대만 시리즈 MVP’ 짐 매그레인 영입	〃
	光州日報	2. 7.	곽민정 희망봤다	〃
	새전북신문	2. 9.	새만금방조제서 상괭이 100여 마리 떼죽음	〃
	전북중앙신문	2. 11.	“상괭이 집단폐사 새만금 수질과 무관”	〃
	蔚山每日	2. 14.	모비스, 6강 멀어지나	〃

3. 취재원이 제공한 사진 출처 없이 게재

▲ 2011 - 1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주 문〉

충북일보 2011년 1월 11일자 6면 「"신묘년 복 많이 받으세요"」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충북일보는 대한항공이 제공한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했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묘년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항공이 내달 6일까지 복조리 걸기 행사를 실시한다. 인천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객실승무원들과 인천여객서비스지점 여직원들이 함께 복조리를 걸고 있다.

〈충북일보 2011년 1월 11일자 6면〉

편집지침

1. 표제의 원칙

-기사 내용과 다른 제목

▲ 2010 - 1087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5일자 3면 「"왜 이제서야…" 첨단장비 속속 백령도로/'삼아 2200호' 등 도착/청해진함 성과 없이 퇴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침몰한 해군 천안함의 인양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형 크레인, 구조함 광양함 및 잠수정구조함 청해진함 등이 속속 사고해역으로 모이고 있다. 구조장비들이 규정대로 확충만 돼 있었어도 귀중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동강이 난 함체를 바다 속에서 꺼낼 대형 크레인은 삼호I&D의 해상 크레인 '삼아 2200호'와 대우조선해양의 '대우 3600호' 등 2대. 각각 2200t과 3600t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비다. 삼아 2200호는 지난 4일 도착했으며 대우 3600호는 오는 9일께 사고 해역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중략)

하지만 해군 유일의 잠수함구조함인 4300t급 청해진함의 투입은 유보됐다. 청해진함에 실린 심해구조잠수정(DSRV)이 천안함 구조 및 인양작업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1996년에 취역한 청해진함은 500m 정도의 심해에서 잠수함을 구조하는 심해잠수정(DSRV)과 최신형 감압챔버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해진함이 투입되면 침몰한 천안함의 선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수색 · 구조 작업에 투입된 잠수요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감압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청해진함은 수개월 전부터 정기정비에 들어간 상태로 지금까지 사고해역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초기 도입 목표였던 3대의 잠수함구조함을 모두 도입했다면 청해진함이 수리 중이라도 다른 배를 투입시킬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심해잠수정이 있을 경우 수중탐색구조사들의 수중 활동시간이 길어지면서 초기 인명구조 등 작업이 수월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청해진함은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된 수리가 끝난 후 해당 해역에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투입 시 해저에 남아 있을 파편 등을 수거하는 작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천안함 인양작업과 관련하여 본문 중에 청해진함을 언급한 대목에서 "…하지만 청해진함은 수개월 전부터 정기 정비에 들어간 상태로 지금까지 사고해역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소제목은 "청해진함 성과 없이 퇴진"이라고 마치 '청해진함이 사고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성과가 없어 물러갔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이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기사의 내용과도 명백하게 다른 표현으로, 이같이 사실과 다른 제목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6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 문〉

중앙일보 2010년 8월 5일자 2면 「양용은이 여는 'PGA 만찬'/김윤옥 여사가 한식메뉴 짠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콜러의 휘슬링스트레이츠 골프장에선 '바람의 아들' 양용은 선수가 주인공인 만찬이 열린다.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 개막을 이틀 앞두고 마련된 'PGA 챔피언십 챔피언스 디너'다. 50여 년간 이어져온 이 행사의 전통은 만찬 메뉴를 전년도 우승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엔 양 선수의 몫이다. 양 선수는 지난해 타이거 우즈와 최종 라운드 맞대결에서 환상의 이글을 잡아내며 우승해 이변의 주인공이 됐었다.

이번에 양 선수가 정한 만찬 메뉴는 한식 풀코스다.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을 비롯한 역대 우승자들과 PGA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 양 선수가 추천한 한식을 즐기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한식 메뉴 선정과 한식 요리사 파견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큰 도움을 줬고, 이 과정에 양 선수와 친한 가수 이승철씨의 건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사연은 6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소외아동돕기 바자회'에 이승철씨가 참여한 게 계기가 돼 김 여사와 이씨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씨는 양 선수와 '절친' 사이다. 지난달 열린 '디 오픈 챔피언십' 경기 때는 이씨 부부가 함께 스코틀랜드 현지를 찾아가 양 선수를 위해 갈비찜과 된장국을 요리해줬을 정도다. 김 여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씨는 "양 선수가 PGA 챔피언십 디너 파티에서 한식을 홍보하고 싶어하는데, 김 여사께서 도움을 주실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고 한다. 정부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을 맡을 정도로 한식 홍보에 열성적인 김 여사는 이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당장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의 박효남 총주방장을 양 선수 측에 추천해 행사 준비를 돕게 했고, 직접 본인도 박 주방장과 함께 메뉴를 고민했다. 박 주방장은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 행사 때 한식 분야를 총괄했고, 주한 외국대사 부인들에게도 한식 강의를 자주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다. 김 여사의 추천을 받은 박 주방장은 보조 요리사 3명과 함께 이번 만찬 행사가 열리는 미국 위스콘신주로 직접 건너가 한식을 요리하게 됐다.

양 선수는 만찬 당일 연설과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요리사 추천과 메뉴 선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소개하며 한식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인 한식 풀코스 메뉴도 정해졌다. 칵테일과 어울릴 식사 전 리셉션 메뉴로는 건구절(일곱 가지의 안주를 하나의 그릇에 담는 마른안주)과 오색밀쌈, 꼬치산적, 대하 잣 무침이 제공된다. 이어 전채 메뉴는 잡채와 모둠전으로, 주 메뉴는 불고기 · 쌈야채 · 밥과 반찬 · 시금치 된장국으로 결정됐다. 디저트는 수삼 대추단자와 인삼캔디, 과일이다.

양 선수의 지난해 우승을 축하하는 '잔치'의 의미를 살려 잔치에 빠지지 않는 잡채와 모둠전이 포함됐고, 주 메뉴에선 '한국의 쌈 문화'를 강조한다는 컨셉트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미국 PGA 챔피언 십 개막을 이틀 앞두고 전년도 우승자가 만찬을 주재하는 이 대회 전통에 따라 양용은 선수가 우승자 만찬을 주재한다는 내용이다.

기사 중에는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밀레니엄 힐튼 호텔 총주방장을 양 선수 측에 추천해 행사를 돕게 했으며 이와 관련, 양선수는 "김 여사가 요리사 추천과 메뉴선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소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을 "김윤옥 여사가 한식 메뉴를 짠다"고 사실

과 다르게 뽑는 바람에 독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60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12월 6일자 1면「"선생님이 그러는데… 북한 짓 아니래요"/초중고생 57%만 "北이 연평도 도발"… 43%는 엉뚱한 답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과 부실한 안보교육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초 · 중 · 고교생의 안보관을 무디게 만들어놓고 있었다.

본지가 한국교총과 함께 지난달 29~30일 서울시내 초 · 중 · 고교생(초등학생은 5 · 6학년) 1240명을 대상으로 국가 · 안보관을 묻는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연평도 피격이 북한의 도발인 것을 모르거나 한국의 군사훈련이 북한에 원인제공을 했다는 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43%에 달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소행이란 답을 적지 못한 학생이 36%에 달했고, 26%는 북한이 6 · 25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틀린 대답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0년간 학교 현장에서 국가 · 안보관 교육이 사라졌고, 일부 교사들이 편향적인 친북(親北) · 반미(反美)적 시각에서 학생들을 가

르쳐 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가 · 안보관 테스트는 무작위로 뽑은 서울시내 7개 학교(초등 2개교, 중 3개교, 고 2개교) 학생 1240명에게 6개 문항(초등생은 5개)을 주고 주관식으로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테스트 결과, 연평도 피격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 도발임을 알고 쓴 답변은 57%에 불과했다. 16%는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훈련을 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공격을 해서"라는 등 우리 쪽에 피격 사태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아예 답을 못 쓰거나 모르겠다는 학생은 10%였고, 17%는 '중국이 시켜서' '김정일이 죽어서 시선을 돌리려고'라는 등의 엉뚱한 답변을 써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는 64%만 정확하게 답을 썼고, 나머지 36%는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적어냈다.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자작극" "4대강을 덮으려는 시도"라는 답변도 있었고, 한 중2 학생은 답안지에 "영어선생님이 그러는데 북한이 한 짓이 아니며 (지방)선거 때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고 한다"고 썼다. 일부 좌파 진영의 주장을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朝鮮日報가 초 · 중 · 고교생 1,240명을 상대로 국가 · 안보관을 묻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룬 것이다.

朝鮮日報는 위 기사의 큰 제목으로「"선생님이 그러는데… 북한 짓 아니래요"」라고 달고 바로 밑의 작은 제목으로는「초중고생 57%만 "北이 연평도 도발"… 43%는 엉뚱한 답변」이라고 달았다. 따라서 제목만 보면 "선생님이 그러는데…북한 짓 아니래요"라는 학생의 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 말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제목이 본문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 오도 우려

▲ 2010 - 1088 신문윤리강령 위반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주 문〉

새전북신문 2010년 4월 6일자 6면 「전북, 자살 충동에 빠지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새전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동안 도내에서 7명이 목숨을 끊었다. 목을 매거나 투신하는 등 모두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들이다.

5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동서학동 한 아파트 10층 옥상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18)양이 투신했다. 4일 오후 2시24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는 28세 여성이 15층에서 뛰어내렸다.(중략)

2일에도 3명이 숨졌다. 이날 오후 10시7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47세 여성이 목을 맸다. 이보다 한 시간여 전인 오후 9시5분께 남원시 도통동 한 아파트 3층에서는 23세 여성이 똑같은 방법으로 숨졌다.

이날 오전 7시58분께 전주시 덕진공원 연못 배수로에서는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결과 이 여성의 직접 사인은 경추골절(목뼈 부러짐)이라고 밝혔으나, 약물중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내 한 연예인의 자살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어서 '베르테르 효과가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 조장 우려로 이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는 데는 동조했다.

도내 한 정신과 담당 의사는 "최근 들어 외래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유명 연예인 자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는 "2년 넘게 진찰한 환자인데 요즘 더 힘들다는 말을 한다. 분명 이게(연예인 자살)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살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보건소가 최근 통계청 자살인구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인구 10만명당 15.7명이었던 도내 자살자는 2008년 30.4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는 강원도(38.4명), 충남(35.4명), 충북(33.6명)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 · 3월 2개월 동안 음독자살과 자해로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도 53명에 달했다. 하루에 한명꼴로 자살로 실려 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영철 전주시정신보건센터장은 "안 좋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자살 충동이 일면 '이 순간만 넘기자'는 각오로 버텨야 한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전라북도에서 4월 2일~5일 사이에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전북의 자살률이 전국 4위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2개월 동안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음독 등 자해환자가 53명이나 된다는 통계수치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자살률 증가가 최근 국내 연예인의 자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베르테르 효과'가 여러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기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살이나 자해들이 연예계 스타들의 자살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위 기사는 이들의 자살이나 자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몇몇 정신과 의사들의 조언을 덧붙여 형식적으로는 자살 예방

조치를 취했으나 기사 제목에서 〈전북, 자살 충동에 빠지다〉라고 본문에 없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신중하지 못한 기사라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제목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12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라일보 발행인 강 만 생

〈주 문〉

한라일보 2010년 5월 3일자 6면「제주사회 인명경시 풍조 '만연'」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인면수심'의 살인 및 폭행치사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주사회가 흉흉해지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일 폭행치사 및 절도 혐의로 J(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월30일 밤 10시10분쯤 서귀포시 소재 가정집에서 화가인 H(54)씨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중략)

경찰 조사에서 J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H씨의 집을 찾아가 작품에 작가명을 기재해주면 팔 수 있다고 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폭행, H씨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일어나지 않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자신의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중반의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지난달 9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 치사)로 동거남(38)을 구속했다.(중략)

지난 3월에는 제주시 도남동에서 부채 문제로 인해 직장 상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처럼 최근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각종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일그러진 사회'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 사이에 제주 도내에서 발생한 4건의 살인 및 폭행치사사건을 묶어 보도하면서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각종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리드 부분에서는 "최근 '인면수심'의 살인 및 폭행치사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주사회가 흉흉해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신문이 범죄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사회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사례로 적시한 사건들만 놓고 아무런 논리적인 뒷받침도 없이 바로 제주사회에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또 기사에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제주사회가 흉흉해지고 있다는 기술을 뒷받침할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기사는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강력범죄사건들을 한데 묶어 보도하면서 그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오히려 독자에게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③항(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86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0년 8월 24일자 5면 「"체벌 전면금지는 교육 포기… 무기력한 교사 양산할 뿐"/서울 초등교장 64명 중 75% "체벌 아직 필요"」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장 64명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9명(45.3%)이 "종래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일선 학교 현장과 체벌 전면 금지를 내세운 '곽노현 구상'간 인식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이 같은 직접체벌과 함께 '간접체벌 허용' 주장까지 포함하면 무려 48명(75%)이나 되는 교장들이 '체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체벌 전면 금지를 앞세운 곽노현식 서울교육 구상은 출발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일보가 지난 23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최한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교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모인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64명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인식의 괴리가 확인됐다.

설문에 응한 교장들 중 체벌 완전금지에 찬성하는 숫자는 16명(25.0%)에 머물렀다. 또 교장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대체벌 말고도 필요에 따라 체벌을 대신할 다양한 형태의 대체벌 또는 징계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이른바 5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중인 체벌 전면금지 정책과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이 현장에서 확인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회장은 "체벌금지는 1998년 김영삼 정부 때 학생인권을 존중한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었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육 · 훈계로 지도하라는 지금의 방침이 그때 확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체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쪽으로 학교현장은 계속 발전해왔다"며 "불미스러운 '오장풍' 사건 같은 경우 폭력교사 퇴출로 풀어야하는데, 이를 체벌금지로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을 포기시킴으로써 무기력한 교사를 양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설명회에 참석한 한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 경험을 외면한 채 이상에 치우친 공허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물론 감정이 실린 과도한 폭력은 추방돼야 하지만 일부의 나쁜 사례를 침소봉대해 '사랑의 매'마저 포기하게 하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의 큰 제목은 직접 인용부호를 사용했고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작은 제목으로 〈서울 초등교장 64명 중 75% "체벌 아직 필요"〉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큰 제목의 내용은 당연히 서울 초등학교장들의 의견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큰 제목 내용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의 언급이다.

즉, 문화일보는 서울 초등학교장 6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사로 작성하기 전에 별도로 한국교총 안 회장에게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답변을 들어 기사에 반영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한국교총 회장의 의견을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다수 서울초등학교장들의 의견으로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59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0년 12월 10일자 1면 「난개발 합법화 · 사업비 분식회계 뒷받침/4대강 죽이는 '친수법'〈친수구역활용특별법〉」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당은 9일 한나라당이 국회 심의도 생략하고 기습 처리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을 "국민의 힘으로 막겠다"며 폐기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전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4대강 사업 예산 충돌의 핵심으로 친수법을 지목한 것이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법이다. 4대강 주변 난개발을 합법화할 수 있고, 정부의 4대강 사업 '분식회계'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비 절반 이상(7조 9700억 원)을 떠안은 배경과 목적은 친수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무리한 국책사업의 재정 부담을 수공에 전가하기 위해 수변 개발권이란 특혜를 부여하고, 이것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 지점에 친수법이 있는 것이다.

실제 수공 내부에서도 초기부터 "4대강 사업은 수공법 위반"이라는 법률 검토가 나오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수공 이사회에서는 8조원에 가까운 4대강 사업 투자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당시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수공을 끌어들이기 위해 친수법의 핵심인 4대강 수변 개발권과 금융비용 부담을 약속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8일 국회의 심의 · 입법권을 무력화하면서 친수법을 단독 강행처리한 것은 '4대강 분식회계'를 시인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수

공에 떠넘긴 4대강 예산은 결국 정부가 메워주는 '분식'된 예산이라는 의미다.

4대강 사업의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수법은 한나라당 친이계 백성운 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됐다. 정부입법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당정 협의-입법예고-규제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에 6개월~1년 걸리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과 달리 사실상 '4대강 죽이기'로 왜곡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다. 친수법은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수공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이 관광 · 레저 · 주거 · 유통 · 산업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002㎞의 국가하천변 양쪽 2㎞를 개발하는 것으로 총면적은 전체 국토의 12%인 1만 2008㎢에 달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도로 · 리조트 · 콘도 · 골프장 · 놀이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친수법이 신법 · 특별법임을 감안하면 기존 수변 환경과 상수도원 보호를 위해 각종 인허가를 규정한 29개 관련법들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환경파괴 '악법'으로 비판해온 이유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공기업이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공의 투자분 8조원을 모두 보전하려면, 실제 사업은 이윤율 10%를 기준으로 할 때 80조원 규모로 벌여야 한다. 4대강 사업(15조 4000억 원)의 5배 이상 규모다. 4대강의 전 수변이 '골프장화' '위락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처리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과 관련해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과 달리 사실상 '4대강 죽이기'로 왜곡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라고 꼽으면서 〈4대강의 전 수변

이 ‘골프장화’ ‘위락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기술했다.

이 같은 지적은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 기사에도 일부 소개됐듯이 “호텔, 식당 등 위락시설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부분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수법’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일 뿐 결론은 미지수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큰 제목에서 「4대강 죽이는 ‘친수법’」이라고 단정해 버렸다. 기사 본문에는 〈사실상 4대강 죽이기로 왜곡될 수 있는…〉이라고 가능성을 짚는 수준에 그쳤지만 제목은 한 발 더 나아가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다.

이는 편집자와 데스크가 주관적인 시각과 자의적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1년 1월 6일자 A6면 「박지원, 박희태에 “당신…국회의장 사퇴하시라”」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지

난달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 원내대표는 “몇 번이나 면담 신청을 해도 당신 지역구 예산 많이 챙겨서 지역구 내려가 계신다고 해서 안 올라왔다”며 박 의장을 빤히 쳐다봤다. 예산안 통과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인사나 악수는 아예 없었다.

박 원내대표의 ‘도발’에 박 의장은 침묵했고 한동안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아무 말씀 안 하시니 한마디 하겠다”(박 원내대표), “하세요”(박 의장).

박 원내대표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번 날치기로 의장께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퇴의 대상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삿대질하며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대표가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오늘 취임하는 날”이라고 축사를 했었다.

박 의장은 “국회는 여야합의로 운영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은 유감이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들고 있던 수첩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잘못됐다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박 원내대표는 알제리 · 크로아티아를 6일부터 방문하는 박 의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구제역으로 나라가 비상인데 여당 의원들과 외국 나가시냐”고 비꼰 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의장실로 들어서자 “사퇴하시라. 그리고 내일 해외에 나가지 마시라”며 의장실을 떠났다. 박 의장도 그제서야 정색하며 뒤돌아서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 “그만해. 그만하면 분 풀리지 않았나”라고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가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한 장면을 전하고 있다. 본문을 보면 박 원내대표가 “몇 번이나 면담 신청을 해도 당신 지역구 예산 많이 챙겨서 지역구 내려가 계신다고 해서 안 올라왔다”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와 별도로 나중에 “… 국가를 위해서나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나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박 원내대표가 '당신'이라고 한 호칭은, 예를 들어 '그때 아버지 당신께서는…'이라고 하듯이 별개 상황의 제3자에 대한 경칭인 듯한 뉴앙스가 있으나 확실하게 경칭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박 국회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말은 이 말과는 별도로 나중에 언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목은 마치 박 원내대표가 박 국회의장에게 2인칭 동격 또는 하댓말로써 '당신'이라고 지칭하면서 동시에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기사 본문 내용을 과장 · 왜곡한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5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1년 1월 31일자 4면 「구출작전 적절성 역풍 우려에…靑 "국정보다 石선장 쾌유"」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와대의 시계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쾌유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석 선장은 이번 작전의 최대 공로자"라면서 "그가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작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차단과 남북관계 개선, 후속 인사, 개헌논의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발등의 불이 석 선장의 건강 회복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공통된 인식이다.

석 선장의 건강 상태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성사된 아덴만 여망작전의 최종 성패를 가늠할 결정적 변수인 데다, 석 선장의 쾌유가 더딜 경우 과잉홍보 논란에 휩싸인 아덴만 작전의 적절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야권의 역공세로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석 선장의 상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석 선장의 무사귀국을 위해 기도하자"면서도 "정부의 과잉홍보로 석 선장은 위독하며 국민은 속았다.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것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를 통해 아덴만 구출작전이 과연 올바른 작전이었는지 여부와 과잉 결과 발표 문제를 비롯해 부상자와 억류된 선박 문제, 향후 대책 등을 따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석 선장 살리기' 행보가 촌각을 다투는 데는 이런 배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 속에 정부는 석 선장의 귀국을 돕기 위해 에어앰뷸런스를 동원했고, 29일 밤 석 선장의 귀국 현장에는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보와 관계 부처 차관들이 마중을 나왔으며 뒤이어 대통령 주치의가 치료팀에 합류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에는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 쾌유를 비는 글을 올렸고, 석 선장이 입원했던 오만 현지 병원 의료진과 병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치료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현재 이 특보 등으로부터 석 선장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촉각이 입원 중인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용태에 쏠리고 있다는 내용의 박스기사이다.

기사는 〈구제역 차단과 남북관계 개선, 후속 인사, 개헌논의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발등의 불이 석 선장의 건강 회복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편집기자는 〈이에 못지않은 발등의 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靑 "국정보다 石선장 쾌유"」라고 제목을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청와대가 국정현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석 선장의 쾌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표제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52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1년 2월 9일자 10면 「깎아주고, 얹어주고/지금 車 사면 돈번다/신차 출시 앞두고 세일 봇물」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월 들어 신차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차에 대한 세일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차량 할인혜택은 물론, 주유권 제공 등 통 큰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차량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대차는 아예 할인마트를 차렸다. 2~3월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DSLR, 공기청정기, 전기그릴 세트 등 생활 용품을 38~67% 할인 받을 수 있는 특가구매 이벤트를 펼친다. 여기에 쏘나타YF를 사면 1년간 주유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중략)

기아차도 매대 상품만 다를 뿐 할인마트를 차린 것은 마찬가지다. 구매 고객이 아이리버의 일부 제품을 살 경우 32~60% 깎아준다. 특정 스마트폰 · 태블릿PC 할부액도 지원한다.(중략)

GM대우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 라세티 프리미어에 쉐보레 키트를 장착해준다. 라세티 프리미어는 30만~50만 원이 지원된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10만~40만 원 할인되고,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중 하나는 덤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신차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자동차회사들이 기존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세일행사를 소개하는 기사이다.

그런데 큰 제목은 단순한 소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깎아주고, 얹어주고/지금 車 사면 돈번다」로 마치 각 자동차회사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공돈이라도 퍼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동차 세일행사는 가능한 한 많은 차를 팔아 더 큰 수익을 올리려는 자동차회사 판매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위 기사 제목은 과잉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과장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6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1년 2월 28일자 A4면 「반군 탱크로 진격…카다피는 북한서 훈련받은 용병 투입」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리비아 반정부 세력이 과도정부를 구성하며 카다피 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섰다. 반정부 세력이 수도 트리폴리 인근 지역인 자비야시까지 점령하면서 무아마르 카다피 최고지도자가 점차 궁지에 몰리고 있다.(중략)

궁지에 몰린 카다피 최고지도자는 트리폴리 등지에서 여전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시위대 진압을 위해 아프리카 용병까지 투입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카다피를 지원하기 위해 수백 명의 용병을 보냈다고 27일 보도했다.

전 · 현직 짐바브웨 군인들로 구성된 용병 중 일부는 특공연대 소속이며 제5여단 소속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5여단은 과거 북한에서 훈련받았던 군대로 1980년대 초 2만 명이 숨진 '마타벨레랜드 대학살' 당시 반군을 진압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위 기사에서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리비아의 카다피 최고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공연대 및 제5여단 소속 군인을 포함, 전 · 현직 군인 수백 명을 리비아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제5여단은 과거 북한에서 훈련받았던 군대로 1980년대 초 2만명이 숨진 '마타벨레랜드 대학살' 당시 반군을 진압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짐바브웨 제5여단은 1981년 8월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이 보낸 북한군 고문단에 의해 창설된 짐바브웨 대통령 친위부대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에 「북한서 훈련받은 용병」이라고 표현해 이들이 마치 〈최근〉 북한으로 가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오인케 했고 따라서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또는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7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주 문〉

헤럴드경제 2011년 3월 9일자 1면 「상하이스캔들 일파만파…K 前영사 단독인터뷰/"공관서 H영사가 무차별 폭행"」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다. 억울해 하고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교민사회의 소문만 사실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식경제부 소속 K과장과 전화통화가 어렵게 이뤄졌다.

H영사 부인과의 불륜설은 물론 그녀(덩모 씨)와의 관계도 지탄받을 건 없다고 주장했다. 서약서도 아이들을 거론하는 협박에 의해 쓴 것이라고 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반론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지식경제부 소속의 K과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다른 부처에 파견와 근무하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지난 8일 연가(年暇)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법무부 소속) H 영사와 그 여자(덩모 씨)가 사귄다는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기 20일 정도 전인 작년 10월 중순에야 알았다. 그 전엔 전혀 몰랐다. 내가 H 영사에게 (덩씨를) 소개시켜줬다고 보도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자동차) 접촉사고를 계기로 둘이 만났다고 들리는 얘기는 있었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나와 H 영사 간 폭행 사건이 그 여자(덩씨)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라고도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 H 영사의 부인과 내가 바람이 났다고 H 영사가 오해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난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때 허 영사 부인은 한국에 있었고 난 면식도 없었다.

- 기밀 유출과 관련됐나?

맹세코 기밀 유출하지 않았다. 내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정부 조사에서) 검증이 됐다. 그 여자(덩씨)와도 소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 자필 서약서가 공개됐는데.

서약서를 쓰기 전날 (덩씨로부터) 받은 협박 쪽지가 있다. 얘들에 대해 협박했다. '조심해라', (아이들) '둘다 가만 안두겠다'고 써있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도리가 없었다. 나중에 (정부) 수사가 진행되면서 협박은 더 심해졌다. 한국에 들어온 것도 (정부 조사 문제가 아닌 덩씨의) 협박이 너무 심했던 이유도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지식경제부 소속 K 전 영사를 헤럴드경제가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다.

기사에서 K 전 영사는 문제의 덩 여인 문제를 놓고 법무부 소속이던 H 전 영사와 주먹다툼을 했다는 소문과 관련, "폭행 사건이 그 여자(덩씨)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라고도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 H 영사의 부인과 내가 바람이 났다고 H 영사가 오해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편집자는 「"공관서 H영사가 무차별 폭행"」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무차별 폭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 때리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맞았지만 대항하지 않았다는 뜻인 '일방적으로 맞았다'와는 어감이나 어의에서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본문 내용을 과장 ·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목달기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제신문 발행인 이 정 섭

〈주 문〉

국제신문 2011년 2월 24일자 21면「지구온난화설은 과장됐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장기적인 전지구 규모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가 내놓은 지구온난화 위기가 과장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중략)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온난화가 전 지구적인 규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회의론자들의 연구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영국 과학자들은 북극권의 퇴적물을 분석해 기후변화의 장기적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의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한 부분이며 인간에 의한 온난화는 장기적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중략) 켐프 교수는 "연구 결과 인간이 만든 지구온난화 현상이 영구적인 엘니뇨 현상을 발생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결론은 최근의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자연적인 주기로 일

어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구온난화 위기론에 대해 이론을 제기한 일부 영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다룬 기사다.

지구온난화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연구 결과도 또 하나의 가설일 뿐 그 결론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제목에서 마치 지구온난화 위기설이 과장된 것으로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9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일보 발행인 최 경 수

〈주 문〉

서울일보 2011년 3월 7일자 18면「요통, 봉침 등 한방치료 '으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한번쯤 겪어봤다는 요통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경험한다는 흔한 질병이다. 요통의 원인은 단순한 인대 손상이나 근육통에서부터 퇴행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추간판 탈출증 등 척추의 이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봉침, 약침요법 전문 경희솔 한의원 김효진 원장은 "한방에서의 요통치료는

약침이 가장 좋고 그 중 '봉침'을 으뜸으로 친다"며 "약침요법은 내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외과 등의 영역에 다양하게 응용되는데 특히 요통치료에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중략)

△약침요법 중 봉약침이 으뜸

이러한 약침 중 요통의 한의학적 치료로는 봉약침요법을 으뜸으로 꼽는다. 경희솔 한의원 김효진 원장은 "봉약침은 꿀벌의 독낭에서 봉독을 추출해 침자리 혈에 놓는 시술법으로 벌침에 함유된 성분의 탁월한 염증 및 통증제거, 정혈작용, 면역강화 효능과 안전성은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의 핵심 내용은 "요통의 한방치료법 중 봉침의 효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나, 제목을 본문 내용과 달리 〈요통, 봉침 등 한방치료 '으뜸'〉이라고 잘못 다는 바람에 독자들이 "요통 치료에는 양방 등을 포함하더라도 한방치료법이 최고"라고 오인하게 만들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부호 없이 단정한 제목

▲ 2010 - 1110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4월 28일자 A2면「김정은도 비자금 조성 착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이 작년부터 '김정일 비자금'과 별도로 개인 비자금 조성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매년 2억~3억달러의 비자금을 마련해 호화 생활과 측근 관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억~3억달러는 쌀 40만~60만t을 수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 식량난(매년 100만t 부족)의 절반 이상을 해소할 수 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김정은의 비자금 조성 정황에 대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등 핵심 부서가 최근 각급 기관을 검열할 때 '후계자를 위한 별도의 충성자금을 헌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기존 김정일 비자금 기관과 별도로 김정은이 직접 관장하는 외화벌이 회사가 생겨나 은밀하게 자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중략)

김정일 비자금의 전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나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처럼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은행에 거액을 숨겨 놨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외신들은 "40억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부터 측근에게 줄 선물 마련 등을 위해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정일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기관별 충성자금 △금 · 송이버섯 등 특산물 수출 △호텔 · 외화 상점 운영 등을 통해 돈을 모았다. 북한이 무기 수출과 위조지폐 · 가짜담배 · 마약 밀매 등으로 매년 벌어들이는 1억~2억달러 중 상당액도 김정일 비자금으로 유입된다. 특히 대북 소식통은 "금강산관광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남북 경협 대금도 김정일 개인 수중으로 들어가는 게 많다"며 "관광 요금을 송금받았던 대성은행 · 조광무역 등이 모두 비자금 전담부서인 당 39호실 산하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이 올해 초 '금고지기'인 당 39호실장을 고교 친구인 전일춘(69)으로 교체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전일춘은 북한이 최근 외자(外資) 유치 등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하겠다며 설립한 국가개발은행의 이사장에도 임명됐다. "해외 투자금 일부도 김정일 비자금으로 전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정부 당국자)는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북한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이 작년부터 '김정일 비자금'과 별도로 개인 비자금 조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그 취재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취재원도 그 내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서 단지 "…김정은이…은밀하게 자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는 정도로 말하고 있다.

익명의 취재원을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그의 말만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 상 원칙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설사 이 같은 대북 뉴스의 특성상 그 예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익명의 취재원이 전한 내용을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인 제목을 다는 것은 일종의 과장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 사실의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문 근거로 제목 달아

▲ 2010 - 112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0년 5월 8일자 9면「동료 C양과 동거설 나돌더니 B양과는 주

차장 애정행각/女아나운서 킬러 男아나는 누구?」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나운서 A씨의 밤 생활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주차장에서 동료 아나운서 B양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게 현장을 들키고 말았다는군요. 방송국에서도 소문을 접하고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A씨가 같은 방송국의 C양과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A씨가 진정한 '밤의 제왕'이라고들 하는데요. '밤 생활'보다 방송 생활에 더 열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예가 화젯거리들을 모은 가십 기사들 가운데 하나로, 아나운서 A씨의 '여성편력'을 꼬집고 있다.

기사의 골자는 A씨가 주차장에서 동료 아나운서 B양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게 현장을 들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도 소문을 접하고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라는 설명으로 미루어 '애정행각'은 소문일 뿐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는 여기에다 A씨가 같은 방송국 C씨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A씨를 '밤의 제왕'이라고 한다는 입방아를 덧붙여 소개했다.

결국 기사만 놓고 본다면 아나운서 A씨의 '여성편력'은 소문 수준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큰 제목은 한걸음 더 나아가 「女아나운서 킬러 男아나는 누구?」라며 문제의 A씨를 '여자 아나운서 킬러'로 단정했다. 본문 어디에도 '여자 아나운서 킬러'라는 표현은 없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는 남자 아나운서'는 열손가락 안으로 꼽힌다. 따라서 문제의 아나운서 A씨는 익명이라 하더라도 특정인 몇몇 중 한 명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고, 당사자를 포함해 이들 아나운서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작성된 위 기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더불어 명예를 훼손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항(개인의 명예 · 신용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단을 근거로 한 제목

▲ 2010 - 1154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0년 7월 20일자 A31면 「링스헬기 잦은 추락 이유 있었다/부품 교체한 것처럼 속인 방산업체 대표 구속」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해군 군수사령부와 계약을 맺은 한 방산업체가 해군의 핵심 기종인 링스헬기와 대잠초계기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업체는 5년간 42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링스헬기는 지난 4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잠수함 작전

에 투입돼 잇따라 추락되거나 불시착한 기종이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19일 해군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헬기의 레이더 수리를 의뢰받고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 방산업체인 H사 대표 강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된 올해 5월까지 해군의 전자장비를 정비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42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부산의 한 방산업체가 해군 링스헬기와 대잠초계기의 레이더를 수리하면서 주요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4억원 가량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방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잇따라 발생한 링스헬기 추락 및 불시착 사건과 관련해 주목받았고 위 기사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해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발표 직후 "링스헬기 추락과 불시착은 조종사 과실 또는 고도계 이상이 원인이어서 이 업체의 불량정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링스헬기 잦은 추락 이유 있었다」라고 본문에는 없는 단정적인 주장을 제목으로 달아 링스헬기 추락 및 불시착 사건이 방산업체의 불량정비 때문인 것으로 오인케 했다.

이는 편집자의 잘못된 예단이 낳은 왜곡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와 군의 사기는 물론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63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종 승

〈주 문〉

한국일보 2010년 7월 21일자 10면 「실종 女약사 시신으로/퇴근길에 납치돼 성폭행 당한 듯/경찰, 용의자 2명 추적」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0대 여성 약사가 실종 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성북구 길음동의 한 공터에서 라세티 승용차가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당시 차적 조회 결과 차주가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약사 한모(48)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했으나 한씨는 전날 밤부터 행방불명 상태였다.

한씨는 16일 밤 늦게 경기 광명시에서 자신 소유의 약국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에 근처 대형마트인 목동 홈플러스에 들렀다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한씨가 마트에서 나간 것까지 확인했으며, 한씨의 차량이 성북구까지 이동한 동선을 파악했다. 당시 한씨는 현금 100만원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한씨의 신용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 납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20일 오후 2시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광명 인터체인지 아래 배수구 근처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한씨는 목이 졸린 상태였고 하의도 벗겨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로 보이는 이들이 과천의 주유소 등지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주유소 주변 CCTV를 조사해 남성 2명을 용의자로 압축

했다"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한씨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연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가 금품을 노린 이들에 의해 납치됐거나 단순 강도에게 변을 당했을 가능성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40대 여성 약사가 실종된 지 나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살인사건 발생 기사다.

피해자는 퇴근길에 2인조 괴한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목이 졸린 상태였고 하의는 벗겨져 있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이다.

편집자는 그러나 "하의는 벗겨져 있었다"는 본문 내용을「성폭행 당한 듯」이라고 과장해 작은 제목으로 달았다.

사건 발생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28세 동갑인 남성 2인조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성폭행 사건으로 꾸미고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고 검찰과 경찰에서 밝혔다.

따라서 위 기사 소제목은 편집자의 예단에 따라 선정적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제목이라 하겠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6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주 문〉

스포츠조선 2011년 1월 19일자 3면「'5개월 숨바꼭질' 여론도 악화… 구속 불가피/신정환 귀국 후 어떤 절차 밟게 되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개월간의 긴 도피를 끝내고 19일 한국 땅을 밟는 신정환. 입국 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에 연예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기자회견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신정환은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바로 서울 종로의 서울경찰청으로 연행될 예정이다. 신정환은 경찰청 앞에서 언론을 상대로 심경을 밝힌 후 바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상습도박과 지난 5개월간의 행적, 대중을 상대로 벌인 거짓말 등에 처음으로 입을 연다.(중략)

◆ 구속 여부

경찰의 구속 수사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비록 신정환이 경찰과 귀국 날짜를 조율하고 자진 귀국하는 형식이지만, 경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정환이 지난 5개월 동안 언론과 팬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홍콩 마카오 네팔 일본 등지를 비밀리에 출입국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 철저히 행방을 숨겨왔고, 한때 귀국을 거부하고 해외를 떠도는 생활을 지속하리란 소문까지 돌았던 점도 문제다. 이런 점을 참고해 경찰이 구속 수사를 요청한다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신정환은 지난 2005년 11월 도박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가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도박 혐의라는 점도 신정환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상습은 가중처벌 대상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으며 5개월 동안 외국에서 떠돌다 귀국하는 방송인 신정환이 입국 후에 어떤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될지를 미리 짚

어보는 해설기사이다.

기사는 신정환이 도박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서 방황했다는 정황 등을 들어 〈경찰이 구속수사를 요청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편집자는 「'5개월 숨바꼭질' 여론도 악화… 구속 불가피」라고 구속이 당연한 것처럼 큰 제목을 달았다.

이는 편집자의 섣부른 예단이 낳은 과장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제신문 발행인 이 정 섭

2.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주 문〉

국제신문 2011년 1월 29일자 6면 「강력계장이 강도 위장 모친 살해」 기사의 제목, 中都日報 1월 31일자 12면 「국과위 위원장에 윤종용 삼성電 상임고문」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제신문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신문)=『경찰대 출신 간부 경찰관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돼 경찰이 충격에 빠졌다.(중략)

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대전경찰청 강력계장 이모(40 · 경정) 씨를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

르면 이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25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 윤모(68) 씨 집에서 윤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헬멧을 쓴 채 강도로 위장해 어머니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中都日報)=『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에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청와대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총체적인 국가 과학기술 전략 · 정책 · 예산집행을 진두지휘할 국과위 위원장에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추대됐다. 청와대는 과학기술계에 위원장 추천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등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간 바 있으며, 최근 윤 상임고문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 과학기술 단체 대부분 국과위 위원장으로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전 공학한림원장)을 추대했으며,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과학기술계 의견을 존중키로 밝힌 바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윤 상임고문이 국과위 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국과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 중 국제신문 기사는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이 모친을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강력계장 이모(40 · 경정) 씨를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그러나 이 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 기사가 작성되는 시점에서는 그가 정말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또 그나마 혐의 자체가 '강도치사'이지 '살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사 제목은 〈강도 위장 모친 살해〉라고 단정하여 달았다.

中都日報 기사는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신설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내정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윤 상임고문은 본인이 이를 수락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위원장으로 확정된다.

그런데도 기사는 제목에서 위원장으로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사실 보도기사의 제목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68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주 문〉

헤럴드경제 2011년 3월 3일자 9면 「마약에 취한 앵벌이…그 뒤엔 의 · 약사 있었다/구걸 때 수치심 없애기 위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치사량 무시 마구잡이식 처발/경찰 의 · 약사 68명 적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하철 등지에서 마약에 취한 구걸 행위자(일명 '앵벌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구걸을 하며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환각목적으로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류를 복용했으며 이들 뒤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구잡이식으로 처방해준 의사와 약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 · 조제한 혐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방조 등)로 의사 김모(42)씨 등 의 · 약사 68명과 쪽방촌 거주자 배모(68 · 여)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이모(33 · 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 · 약사들은 이 씨가 전철에서 구걸행위를 하면서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환각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이에 따라 약을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배씨는 이 씨의 친모라고 사칭하며 이 씨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용을 방조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년 7개월에 걸쳐 수도권 일대 내과병원을 돌아다니며 졸피뎀 3만여 정을 처방받아 환각증세가 떨어질 때마다 종합감기물약과 함께 복용하는 등 하루에만 70~120정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구걸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중독 상태가 심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2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적발된 의사들이 내원한 이 씨에게 보험급여를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급여로 일자중복 및 과량 처방해 환각목적의 투약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구걸행위를 하면서 수치심을 없애려고 최면진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이 모(33)씨와 그에게 '졸피뎀'을 과다 처방 · 조제해준 의 · 약사 6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의 '졸피뎀'을 복용한 사람은 이 씨 1명뿐이다.

그런데도 취재기자는 기사 리드를 〈지하철 등지에서 마약에 취한 구걸 행위자(일명 '앵벌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구걸을 하며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환각목적으로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류를 복용했으며…〉라고 작성해 시중의 구걸행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약에 취한 것처럼 오인케 했다.

이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추측과 예단을 사실인 것처럼 '5단 톱 기사'로 과

장해 보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③항(미확인 사실 과대편집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객관적 논리 없는 제목

▲ 2010 - 1177 신문윤리강령 위반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주 문〉

每日新聞 2010년 9월 2일자 6면 「한나라 정두언 등 수도권 소장파, 이상득 겨냥 집요한 하극상 왜?/"MB 색깔 희석… 차기 총선 노림수"」 제하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두언 최고위원과 정태근 의원 등 한나라당 내 친이계 소장파들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SD)에 대한 공격이 집요하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 전 부의장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사찰 논란의 배후로 정조준한 데 이어 1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 ·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중략)

이들의 이 전 부의장 공격은 2008년 총선부터 시작된다.(중략)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통한 정 최고위원 등의 이 전 부의장 공격 제3라운드인 셈이다.

이들 소장파들의 이 전 부의장에 대한 공격을 패륜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전 부의장과 가까운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근

거나 증거 없이 새까만 후배가 20여 년간 한나라당을 지켜온 선배를 정면공격하는 잔인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인생살이에서 이런 것들을 '패륜적'이라고 한다"고 반격했다. 친박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대구 서구)도 이날 듣고 참을 수가 없어 마이크를 잡고 정 최고위원을 향해 "예의범절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략) 전형적인 권력투쟁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권력을 나눠가졌던 이들이 권력에서 소외되면서 싸움을 걸고 있다는 풀이다.

친이 직계들의 '도발'에 청와대도 '도를 넘었다'며 정면대응에 나설 태세다. 이 전 부의장은 불쾌해하면서도 자제하고 있다.(중략)

소장파들의 이 같은 파상공세의 배후는 사찰 논란에 대한 피해 의식은 물론이고 차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 소장파들은 지난 총선에서 '쉽게' 당선된 수도권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MB' 색깔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탈색 의도가 강하게 엿보인다. 6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민심을 보면 'MB직계'라는 브랜드로 총선에 출마할 경우 승산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 한 중진의원은 "이들 소장파들은 이미 친이 직계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다음 총선을 겨냥한 공허한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나라당의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배후로 의심 받고 있는 같은 당 소속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비판하는 일을 분석한 기사다.

기사는 이들의 비판을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권력투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차기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MB 색깔을 지우기 위한 노림수라는 일부의 풀이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와 함께 이 전 부의장과 가까운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근거나 증거 없이 새까만 후배가 20여 년간 한나라당을 지켜온 선배를 정면공격하는 잔인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인생살이에서 이런 것들을

'패륜적'이라고 한다"고 비난한 사실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이들의 행태가 왜 권력투쟁인지, 이들이 정말 'MB 색깔 지우기'를 위해 이 같은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부제목과 소제목에서는 이들의 행태를 〈집요한 하극상〉, 〈도 넘는 공격〉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과 제목들은 신문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 내용에 없는 제목

▲ 2010 -1184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0년 9월 8일자 4면「"장관딸만큼 독도도 챙겨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독도 관련 핵심사업이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확보는 고사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마저 반납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8일 경북도와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등에 따르면 독도 관련 최대

핵심현안사업인 독도방파제와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종합해양과학기지 등은 2009년부터 예산을 이미 확보해 일부는 집행하고 있지만 외교부의 반대로 예산을 반납하거나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야 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입장이었던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은 사업 일부를 수정하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독도 관련 핵심사업들은 지난 2008년 7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독도 명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조용한 외교'의 실패를 인정하고 강경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정부합동영토대책단회의에서 확정한 독도 주변해역 개발을 위한 28개 신규사업 가운데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내년도 정부 각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9월 중순 확정될 시기인데도 독도관련 예산은 외교부의 반대에 발목을 잡혀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외교부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외교부의 반대로 독도방파제와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종합해양과학기지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자칫 중지될 위기에 몰려 있다.

현장관리사무소는 2009년과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내년부터는 본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데도 설계비 1억원만 집행된 상태다.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2009년에 확보된 예산 10억원 중 9억원은 반납해야 하고 올해 예산 40억원은 내년으로 이월해야 한다.

독도방파제도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계를 마쳤으나 내년도 본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도 8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 등에 집행을 완료했으나 외교부 등과 의견조율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조차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일부 집행하다 중단하면 우리 정부가 영유권 주장에 자신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기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외교부의 방해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독도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단호하고 차분한 외교’로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이 △영유권 공고화에 주는 효과 △환경 및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이 강경과 온건으로 오락가락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독도 관할 지사에게 독도 생태주권과 영토개념의 실효적 지배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실무를 맡겨두고 중앙정부는 일본처럼 묵인하면 될 텐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독도 관련 핵심 사업이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확보는 물론, 이미 확보한 예산마저 반납할 위기라는 게 요지이다. 또 기사 형식은 사설이나 칼럼 같은 의견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한 사실기사이다.

편집자는 이 기사에 “장관딸만큼 독도도 챙겨라”는 제목을 달았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외교부장관 딸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채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빗대 제목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제목의 내용은 본문 중에 없다. 사실기사에서 이처럼 본문에 없는 내용을 촉구성 제목으로 반영한 것은 보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04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 문〉

중앙일보 2010년 9월 30일자 5면 「‘천안함 폭침’ 주도한 김영철 승진/당 군사위 위원에 선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3월의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영철(사진) 인민무력부 총정찰국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총정찰국은 지난해 대남 · 해외 공작업무를 하는 노동당 35호실 및 작전부,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을 합쳐 만든 조직으로 대남공작을 총괄한다.

황원동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지난 5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정찰총국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는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지만 과거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전례로 정찰총국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지난 8월 말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에도 정찰총국과 김영철이 포함됐다. 김정일은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김영철이 영접한 가운데 정찰총국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김영철의 당 중앙군사위 진입은 천안함 폭침의 공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중장) 계급으로 당중앙위군사위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영철이 당대표자회 개최 당시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 당 부장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사진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천안함 폭침을 김정은의 공으로 돌리는 분위기로 갈 경우 남측이 요구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지난 9월 북한이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등의 고위권력층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해설한 기사 중 하나이다.

이 기사는 김영철 인민무력부 총정찰국장에 대해 지난 5월에 있었던 황원동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외신기자간담회 설명을 인용, "정찰총국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는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지만 과거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전례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이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김영철이 영접하는 가운데 정찰총국을 방문했고 △상장(중장) 계급으로 당 중앙위군사위원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김영철이 중앙군사위원이 된 것은 천안함 폭침의 공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즉, 이 기사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개연성이 크다며 관련 정황을 제시했지만 그가 천안함 사건을 주도했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폭침' 주도한…」이라는 단정적인 제목은 기사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5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 문〉

한겨레 2011년 2월 18일자 12면 「죽음 부른 난방비 뒤늦게 인하 대책/서울시, 2014년까지 11% 내리기로…임대아파트는 이달부터」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겨울 한파 속에서도 비싼 지역난방 요금 때문에 서민들이 난방을 끄고 지내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서울시가 에스에이치공사의 지역난방 요금을 2014년까지 11% 내리기로 했다. (〈한겨레〉 2010년 12월 10일치 12면, 2011년 2월 16일치 14면)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17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에스에이치공사의 지역난방을 쓰는 노원 · 도봉 · 중랑 · 양천 · 강서 · 구로 지역 아파트 23만가구의 난방 요금을 이달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1%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4만 9830가구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11% 내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연 6만 5000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분양아파트 18만 6424가구의 경우 올해는 난방요금을 동결하고, 2012년 3% 인하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11% 내릴 계획이다.

지역난방은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에스에이치공사는 열 생산에서 폐열을 이용하는 비율이 17%에 그치고, 나머지 83%는 수도권 환경규제 때문에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쓰고 있다. 이에 견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폐열 비중이 55%에 이르고 액화천연가스보다 저렴한 중유 등의 연료를 사용한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서울시가 에스에이치공사의 지역난방 요금을 2014년까지 11% 내리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기사 큰 제목을 「죽음 부른 난방비 뒤늦게 인하 대책」이라고 달았다.

그러나 왜 '죽음 부른 난방비'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같은 제목달기는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

-직접 확인 안한 사실 기사화

▲ 2011 - 1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1년 1월 10일자 11면「경찰大 '21세기판 연좌제' 논란?/파업 노조원 재학생 딸 지도교수에 세 번 호출/트위터 통해 비난글 쇄도/학교측 "사실무근…억울하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대를 둘러싸고 때 아닌 연좌제 논란이 일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는 아버지 때문에 경찰대에 재학 중인 딸이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트위터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경찰대가 21세기판 연좌제를 재현하는 게 아니냐"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대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대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리스마스 날이었

지만 전주 제일여객 사업에서는 파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이날 파업현장에 찾아온 한 중년 여인은 딸과 아들을 대동하고 파업 대열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남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의 옷깃을 붙잡고 "경찰대에 다니는 딸이 아버지 때문에 세 번이나 불려갔다"면서 "아이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빨리 여기서 나와라"며 악을 썼다. 그녀의 남편은 동료들과 상의한 후 아내를 추슬러 아이들과 함께 파업현장을 빠져 나갔다.

이날 소란을 지켜보던 노조원 최모(52)씨는 "경찰대 다니는 딸이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어머니 입장에서 많이 흥분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사건의 진상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정모 씨의 딸 정양(22)이 현재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아버지의 파업 참여 때문에 정양이 교내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 지도교수에게 세 차례에 걸쳐 불려가 학생지도를 받은 것은 물론 동기생들 사이에서도 왕따 수준의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노조원 최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그날의 상황을 올렸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특성상 최 씨의 글이 올라가자마자 리트위트(RT)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대의 행태는 현대판 연좌제"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경찰대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학교가 특정 학생의 부모를 관리한 전례가 없고 현재도 하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이 이 사건을 파악한 것도 12월 말께 트위터에 학교 관련 글이 떴다는 학생의 말을 듣고 알게 됐다고 경찰대는 설명했다.

경찰대 학생지도실은 진상 조사를 위해 정 양과 정 양의 지도교수와 통화를 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경찰대 관계자는 "12월 17일부터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 귀가 조치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학생이 학교에 불려가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정 양의 아버지가 파업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명분이 없다 보니 가족들이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전주 지역 버스노조 파업에 참여한 아버지 때문에 지도교수에게 세 차례 불려가 지도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같은 사정이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면서 '21세기판 연좌제'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지만 경찰대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고 기사는 보도했다.

그런데 위 기사만으로는 취재기자가 일련의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기자는 크리스마스인 지난 달 25일 문제의 파업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트위터로 알린 노조원 최모 씨의 글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듯하다.

기사에 따르면 파업현장에 한 중년 여성이 딸, 아들과 함께 나타나 "경찰대에 다니는 딸이 파업하는 아버지 때문에 학교에 세 번이나 불려갔다"고 소리쳤고 이에 그녀의 남편은 동료들과 상의한 후 가족과 함께 파업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이 노조원 최 씨의 트위터 글 내용이다.

기사는 이어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노조원 정모 씨의 딸이 아버지의 파업 참여 때문에 지도교수에게 세 차례 불려갔고 동료학생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건의 진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취재기자는 이 같은 '사건의 진상'을 누구에게서 어떤 과정을 거쳐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사에는 취재기자가 당사자인 정양이나 정양의 부모, 지도교수와 접촉했다는 흔적이 없다.

기사 뒷부분에 기술된 것처럼 경찰대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정양과 정양의 지도교수와 통화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방학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등 정황 설명을 곁들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 어디에도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취재기자는 '사건의 진상'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리드에서부터 기정사실화했고, 편집기자도 「경찰대 '21세기판 연좌제'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도 「파업 노조원 재학생 딸 지도교수에 세

번 호출」이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및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0조「편집지침」전문 및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42 신문윤리강령 위반
忠淸日報 발행인 조 승 남

〈주 문〉

忠淸日報 2011년 1월 31일자 3면「충청 정 · 관가 수뢰설로 '시끌'/국회의원 地選 공천헌금 · 입법로비설 파다/사정당국 첩보수집 강화 속 지역여론 대조」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忠淸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주시장과 단양군수, 영동군수 등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체장직 상실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지역 정 · 관가에서 충북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거액 수뢰설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각종 법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고 해당 법인 · 단체로부터 표창패와 함께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 · 관가에 따르면 사정당국이 지난해부터 충북도내 A 국회의원의 거액 수뢰설을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을 매각한 한 기초의원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공천후원금으로 제공했다는 구체적

인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사정당국이 공천 헌금설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 번복되는 바람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설 명절과 정기인사 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소액 후원금을 불법 제공한 청목회 사건이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이번에는 다른 경제단체 관련 입법로비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신협 입법로비와 관련, 충북지역 B 국회의원의 실명이 지역 정 · 관가에 파다한 상황이며, C의원은 타 기관의 입법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국회의원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정인을 겨냥한 마타도어가 확산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의 정치인 수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전국 곳곳의 수사기관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들어 고질적인 토착비리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금명 간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사정은 특정시기를 불문하고 연중 이뤄지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되,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풀려지는 음해성 소문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충북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천 헌금을 받았거나 입법로비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는 설이 떠돌고 있으며 설 명절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세 사람의 수뢰설이 파다하다는 매우 예민한 사안을 보도하면서도 취재원을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서술부는 피동형으로 일관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사는 항간의 소문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또한 기사 중에 "이처럼 일부 국회의원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정인을 겨냥한 마타도어가 확산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하면서도 이 같은 소문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지역여론을 반영하고 토착비리를 고발하는 일이 지역신문의 한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수뢰 혐의라는 매우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소문을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서특필(4단 톱기사)한 것은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하겠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기사의 정정

-잘못된 보도 바로잡지 않아

▲ 2010 - 125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11월 26일자 1면「北, 대량살상용 방사포 · 열압력탄 쐈다」기사와 제목, 중앙일보 11월 26일자 1면「북, 열압력탄 공격… 연평도 초토화 노렸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에 발사한 포탄의 상당수는 대량 인마(人馬) 살상용 122㎜ 방사포탄(다연장로켓탄)이었으며 이 포탄들은 관통능력이 뛰어나고 큰 화염을 발생시키는 특수탄약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25일 "연평도 현장에서 20여발의 불발탄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해안포탄(76.2㎜)이 아니라 122㎜ 방사포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 포탄에 '열압력탄' 계열의 특수포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열압력탄은 고열(高熱)과 고압(高壓)을 발생시켜 살상력이 큰 무기로 군 당국은 북한이 1985년쯤부터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정찰기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포격을 한 당일 4군단 소속 122㎜ 방사포 1개 대대(18문)를 황해도 강령군 개머리 진지에 배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사전에 이번 도발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방사포와 열압력탄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이날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연평도 포격과 관련,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문에서 "조선 서해가 분쟁 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북)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군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 고수를 위해 해상 침범과 포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북한이 23일의 연평도 공격 당시 콘크리트를 관통하고 화재를 일으키는 특수포탄의 일종인 열압력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연평도 공격에 사용한 포탄을 수거하는 과정에

서 열압력탄 불발탄이 발견됐다"며 "열압력탄은 고열과 고압을 발생시켜 인명을 더 많이 살상하고 방호시설까지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고폭탄과 달리 이번에는 1차 폭발 후 2차 폭발이 일어나고 대규모 화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열압력탄 사용은 우리 측 인명과 시설 피해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연평도 맞은편 개머리 진지의 122㎜ 방사포(곡사포 · 다연장로켓포)를 이용해 열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머리 진지에는 당초 76.2㎜ 해안포(직사포) 위주로 배치돼 있었으나 연평도 공격 수일 전 122㎜ 방사포 1개 중대를 전개했다"며 "연평도 남쪽 배사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곡사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170여 발 가운데 20여 발은 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폭발물 처리반이 25일 연평도에 파견돼 20여 발의 불발탄과 파편 수거를 진행했다"며 "콘크리트 벽과 나무에 꽂혀 있는 불발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연평도 포격과 관련, "조선 서해가 분쟁 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며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열압력탄(ThermoBaric)=** 콘크리트로 된 보호시설이나 갱도 내부를 공격하기 위해 두 차례 폭발하도록 만든 특수포탄. 2차 폭발 순간 고열 · 고압과 함께 화염이 발생해 피해를 극대화한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 기사는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발사한 포탄에 대해 본문 리드 문장에서 "…이 포탄들은 관통능력이 뛰어나고 큰 화염을 발생시키는 특수탄약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군소식통을 인용, "열압

력탄 계열의 특수포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며 제목은 〈열압력탄 쐈다〉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또 중앙일보 기사는 본문 리드 문장에서 "…열압력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어 군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이 연평도 공격에 사용한 포탄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열압력탄 불발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목도 〈북, 열압력탄 공격〉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뒤인 28일 공식적으로 "열압력탄이라고 볼 만한 증거와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열압력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가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뒤로 국방부는 이 같은 발표 내용을 번복하지 않았고, 朝鮮日報와 중앙일보는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②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편집지침」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및 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63 신문윤리강령 위반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주 문〉

每日新聞 2010년 12월 7일자 6면「前 정권 비자금 금괴 현금화 3억 갈취」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예전 정권의 비자금을 현금화한 뒤 생긴 수수료를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군무원 출신 K(58)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K(70) 씨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 A씨에게 접근해 "박정희 정권 때 외국 독재자들이 우리 정부에 보관시켜 둔 금괴가 군부대 탄약고에 보관돼 있다. 정부에서 몰래 싼값에 매각하는데 실세를 통해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2억 3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2008년 초부터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위조 달러와 국채를 매매하는 브로커를 하던 이들은 전직 중앙정보부장 사위나 국방부 고위관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정희 정권 때 외국 독재자들이 우리 정부에 보관시켜 둔 금괴가 군부대 탄약고에 보관돼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몰래 싼값에 매각하니 실세를 통해 싸게 구입해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검찰에 잡혔다는 내용의 기사다.

실제로 금괴가 있었다거나, 또 그것이 박정희 정권이나 외국 독재자의 비자금이었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다.

그런데도 제목은 〈前 정권 비자금 금괴 현금화 3억 갈취〉라고 달아 독자로 하여금 마치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용 금괴가 실재했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후에도 신문은 잘못된 제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4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세계일보 발행인 유 종 관
4. 한국경제 발행인 신 상 민

〈주 문〉

혜럴드경제 2011년 1월 24일자 1면 UDT대원들 함상 기념사진 설명, 매일경제 1월 25일자 A2면 UDT대원들 함상 기념사진 설명, 세계일보 1월 25일자 4면 UDT대원들 함상 기념사진 설명, 한국경제 1월 25일자 A16면 UDT대원들 함상 기념사진 설명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적시 신문들은 다음과 같이 사진 설명을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 〈자랑스러운 UDT대원들〉『'에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무사히 구출해낸 청해부대 특수전요원(UDT/SEAL)들이 최영함 함상에서 중무장한 채 해적들의 만행에 철통경계를 다짐하고 있다.』

(매일경제)=『해군 특수전여단 요원(UDT/SEAL)과 청해부대 검문검색대원들이 지난 21일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최영함 갑판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일보)=『청해부대 특수전요원(UDT/SEAL)들이 지난 21일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최영함 갑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우리가 해냈다" 자랑스러운 특수전 요원들 해군은 24일 소말리아 해적 진압작전에 성공한 청해부대 특수전 요원(UDT/SEAL)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삼호주얼리호 피랍 선원 구출 직후 부대원들이 기념 촬영한 모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진은 해군이 지난 1월 24일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에 성공한 청해부대 특수전요원' 단체사진이라며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진은 구출작전 직후에 찍은 것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10일 찍은 사진이었다고 해군측은 뒤늦게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진을 게재했던 신문들은 각각 1월 25일자 또는 26일자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를 실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와 매일경제, 세계일보, 한국경제는 당초에 잘못된 설명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고도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70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1년 3월 17일자 1면 「학교 건물 87%가 '지진 무방비'인데/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 원 교육청 · 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국 교육청에 매년 1000억 원이 넘게 배정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16개 시 ·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08~2010년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10년 각 교육청에 책정된 1137억 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중 복구비로 쓰인 25억 원을 제외한 1112억 원이 시 · 도 교육청의 성과급으로 쓰였다. 2009년엔 1047억 원 중 신종플루 접종비(339억 원)를 제외한 708억 원이, 2008년에는 1170억 원 전액이 '필요한 재해대책비가 없었다'고 성과급으로 나갔다.

반면 2009년 말 현재 초 · 중 · 고교의 내진(耐震) 설계 대상 건물 1만 8329동 중 87%(1만5912동)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진 설계는 3층 이상의 면적이 1000㎡를 넘는 건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학교의 경우 규모 5.5~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진에 무방비인 학교 건물 중 54%인 8486동이 지진시 붕괴 위험이 있는 '대규모 피해 가능' 건물로 분류됐고, 이어 '중규모 피해 가능' 3064동(19.6%), '소규모 피해 가능' 2939동(18.8%), '경미한 피해 가능' 1075동(6.9%)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한 학교당 지진 대비 설비를 하는 데 드는 돈은 약 5억 원 수준"이라며 "남는 돈을 인센티브(성과급)로 쓰지 말고 내진 보강공사를 하면 매년 200개의 학교가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전국 16개 시 · 도 교육청에 해마다 1000억 원 넘게 배정됐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대부분이 '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시 · 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기사 큰 제목도 본문에 맞춰 「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 원 교육청 · 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고 달았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 · 도 교육청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인건비로 따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성과금으로 쓰였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朝鮮日報 홈페이지 해당기사 밑에 올린 댓글에서 "특별교부금 재해대책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로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 · 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시 · 도 교육청에서는 이 재원을 교육청 직원 성과급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초 · 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 기사가 오보임이 드러났는데도 朝鮮日報는 기사와 제목의 오류를 정정해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관계사진 게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재

▲ 2010 - 1100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全羅日報 2010년 4월 16일자 13면 「'몸 풀린' 추신수 3할 타율 눈앞」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4월 15일 3타수 2안타를 기록함으로써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관련 사진으로 추신수 선수의 배팅사진을 함께 싣고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15일 경기 사진이 아니다. 바로 앞 경기인 13일 경기 사진도 아니다. 두 경기는 모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홈구장인 프로그레시브 필드 구장에서 치러졌으며 이 두 경기 때 입은 유니폼과 사진의 유니폼은 다르다. 따라서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을 사용한 것인데도 全羅日報는 사진설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는커녕 아무런 사진설명도 달지 않았다.

또 해당 사진은 연합뉴스 등 통신사가 제공한 사진이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수한 사진일 텐데도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타 언론사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다.

이러한 편집은 보도의 정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 「편집지침」 ⑥항(관련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라일보 | 스포츠·TV | 2010년 4월 16일 금요일 | 13

'몸풀린' 추신수 3할 타율 눈앞

2경기 연속 멀티히트… 시즌타율 2할9푼6리 껑충

MLB '추추 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의 방망이가 완전히 살아났다. 2경기 연속 멀티히트(3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하며 폐조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추신수는 15일(이하 한국시간) 홈구장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벌어진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 3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전해 3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 볼넷 2개를 골라냈다.

3안타를 때려냈던 13일 텍사스전에서 2경기 내리 멀티히트를 달성했고 시즌타율을 2할8푼6리로 끌어올려 3할진입을 눈앞에 뒀다.

상대선발은 콜비 루이스. 1회 볼넷으로 출루한 추신수는 3회 2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2루 방면 내야안타로 출루했다.

두번 모두 득점권 위치로 진루했으나 득점과 이어지지 않았다.

5회에는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7회 무사 1루에서 중전안타를 터뜨렸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선 볼넷을 골라냈다.

이날 클리블랜드가 때린 전체 5개의 안타 가운데 2개를 추신수가 만들어냈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부지런한 출루에도 불구하고 루하노 벨발로 인해 득점 생산이 부진했고 결국 2-0으로 패했다.

추신수의 요즘 상승세는 단연 눈에 띈다. 시즌 첫 5경기에서 타율 1할1푼1리(18타수 2안타), 삼진 9개로 부진했던 추신수는 최근 3경기에서 타율 6할6푼7리(9타수 6안타) 2홈런 2타점 4득점을 기록했고 삼진은 단 한개도 없었다.

타석에서 집착함을 되찾고 나쁜 공에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은 결과다. /노컷뉴스

시군 대항 생활체육축구대회 내일부터 전주비전대서 열려

2010교육감배 유소년및 연합회장기 시군대항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열린다.

전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회장 유찬희)는 17일 전주비전대의 축구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이틀간의 일정을 갖는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전북축구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고 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4개 시군 50개 팀 1500여명(유소년 10개팀, 어성부 포함)이 출전, 그동안 갈고 닦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노린다.

개회식에는 김완주지사, 최규호교육감, 고석림 도의회의장, 이철근 전북현대대장, 정기팀 축고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50개팀 가운데 유소년 10개팀, 어성부 5개팀, 30대 클럽 11개팀, 40대 클럽 12개팀, 50대 클럽 9개팀, 60대 클럽 5개팀이 출전한다.

이들 팀은 비전대학교, 종합경기장, 아중체육공원, 송천초, 장두남초, 김제진흥구장 등에서 열린다.

/장병훈기자 · arga@

함지훈 MVP 싹쓸이… 전태풍 우수선수상

그야말로 함지훈(36 · 모비스 · 사진)의 시즌이었다. MVP만 MVP는 모두 함지훈의 몫이었다. 함지훈은 19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스포츠조선 제정 스포츠토토 한국농구대상' 시상식에서 MVP를 받았다.

올 시즌 정규리그, 플레이오프전과 MVP에 이은 MVP 3관왕이다. 함지훈은 상패와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정규리그 경기 14.8점, 6.9리바운드, 4.0어시스트, 통프전 경기 16점, 6.3리바운드, 5.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모비스를 3년 만에 통합우승으로 이끌었다. MVP를 받기에 손색없는 활약이었다.

함지훈은 "힘들 때마다 조언해주신 강동희님, 조치님께 감사드린다. 형들과 동료, 후배들에게도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귀화혼혈 드래프트를 통해 올 시즌 처음으로 한국 무대를 밟은 전태풍(KCC)은 우수선수상(상금 300만원)을 받아 아쉬움을 달랬다.

신인상(상금 300만원)은 막상한(전자랜드)과 허일영(모비온스)은 신인상을 함께 받았다.

감독상(상금 300만원)은 당연한 유재학 감독(모비스)의 몫이었다.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고도 4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던 유 감독은 '한식' 리는 별명답게 변화무쌍한 전술로 모비스를 3년 만에 통합우승으로 이끌었다.

베스트 5에는 MVP 함지훈을 비롯해 김주성(동부)과 문태영(LG), 전태풍(KCC), 양동근(모비스)가 선정됐고 김영환(KT)이 식스맨상, 브라이언 던스톤(모비스)이 외국인선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노컷뉴스

/편집=김원범기자 · kimb7942@

〈전라일보 2010년 4월 16일자 13면〉

▲ 2010 - 1199 신문윤리강령 위반
慶南日報 발행인 이 연 근

〈주 문〉

慶南日報 2010년 9월 14일자 13면 「박찬호 亞투수 최다승 타이」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慶南日報가 보도한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아시아 투수 최다승 타이기록은 9월 13일(한국시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慶南日報가 이 기사에 게재한 박찬호의 사진은 8월 18일에 열린 플로리다 말린스와의 경기 모습이다. 따라서 이 사진은 당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이다.

그런데도 慶南日報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또한 사진의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제10조「편집지침」⑥항(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박찬호 꼬투수 최다승 타이

신시내티戰 1이닝 무실점 행운의 구원승
메이저리그 통산 123승… 17년 만의 위업

'코리안 특급' 박찬호(사진·37·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행운의 구원승을 챙겨 메이저리그 아시아 투수 최다승과 타이를 이뤘다.

박찬호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계속된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0-1로 뒤진 8회말 구원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이어진 9회초 공격에서 피츠버그가 대거 3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고, 경기가 3-1로 끝나 박찬호는 행운의 구원승을 챙겼다.

뉴욕 양키스 시절이던 지난 7월19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56일만에 승리를 추가한 박찬호는 시즌 3승째(2패)를 챙겼고,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승수를 123승(97패)으로 늘렸다.

이로써 박찬호는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오(은퇴)가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아시아 투수 최다승(123승109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LA 다저스 시절인 1996년 4월7일,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4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해 메이저리그 첫 승을 따낸 박찬호는 빅리거 17년 생활 만에 아시아 최다승이라는 '금빛 훈장'을 달았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아시아인 투수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적을 냈다.

이날 달성한 아시아 투수 최다승 뿐만 아니라 앞선 5일에는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1이닝을 던져 노모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투수 통산 최다이닝(1976⅓이닝)을 넘어섰다.

또, 아시아 투수 탈삼진 부문에서는 1704개를 기록해 노모(1918개)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1위 노모와는 214개 차이다.

박찬호는 경기를 마친 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늘 함께 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박찬호는 1점차로 뒤진 8회 마운드에 올라 첫 타자 크리스 헤이세이를 공 3개로 중견수 뜬공으로 돌려 세웠다.

이어 나온 후안 프랜시스코에게 볼넷을 내준 박찬호는 다음 타자 브랜든 필립스를 3루 땅볼로 유도해 1루 주자를 2루에서 잡아냈고, 올렌도 카브레라를 3루수 뜬공으로 요리하고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다.

9회 자신의 타석 기회에서 대타로 교체된 박찬호는 이날 4명의 타자를 상대로 16개(스트라이크 8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 구속은 92마일(148km)을 찍었다. 또, 9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부터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친 박찬호는 평균자책점을 5.02로 낮춰 4점대 평균자책점 진입을 눈앞에 뒀다.

피츠버그는 9회 2사 만루에서 앤드류 맥커첸이 주자 일소 2루타를 터뜨려 역전에 성공했고, 9회말 마무리 조엘 핸라한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하고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뉴시스

〈경남일보 2010년 9월 16일자 13면〉

5. 사진 조작의 금지

-사진 일부 변형하고도 사실 안밝혀

▲ 2010 - 1223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南日報 발행인 박 경 엽

〈주 문〉

全南日報 2010년 10월 12일자 16면「"중원 장악하라" 이청용에 특명」제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全南日報의 상기 사진은 연합뉴스가 2010년 5월 16일 제공한 사진이다. 全南日報는 이 사진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全南日報는 또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진 상단 부분의 머리카락 윗부분 일부를 트리밍하여 사진을 일부 변형하였으면서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⑦항(사진 조작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6 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체육

"중원 장악하라" 이청용에 특명

▮조광래호, 오늘 오후 8시 한·일전

허리싸움이 승패 좌우… 가가와와 승부

박주영 원톱… 박지성 무릎 통증 결장

'허리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를 거머쥔다.'

1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통산 7번째 한일전에서 조광래 감독은 "누가 미드필드에서 주도권을 잡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부의 키는 미드필드 장악에 달렸다는 것. 때문에 이번 한일전에서는 이청용(22·볼턴)과 가가와 신지(21·도르트문트)의 맞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차세대 에이스 이청용과 가가와는 양국의 상징적인 키 플레이어로 불린다. 공격의 핵심이다.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진을 교란하고 정확한 패스로 동료들의 찬스를 창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수준급 골 결정력도 겸비했다.

최근 컨디션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도 닮은꼴이다.

이청용은 남아공월드컵을 경험한 후, 한층 아우를 찾으며 성숙해졌다. 대표팀에서는 물론 소속팀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공격의 대부분이 이청용을 거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살이던 2006년 J-리그 세레소 오사카에 입단한 가가와는 남아공월드컵 출전에는 실패했지만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진출해 시즌 10경기에서 6골을 터트려 일본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현재 가가와는 조광래호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선수다. 허리싸움에 승패가 걸린 승부에서 가가와의 존재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해결책은 가가와의 발을 묶는 것이다. '가가와의 발이 곧 일본의 허리'를 의미하는 만큼 가가와의 발을 감지 못한다면 한국은 90분 내내 고전할 것이 뻔하다.

이청용은 세계 최고의 무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도 압박에 관한 수준급으로 통하는 선수다. 이청용의 적극적인 압박과 미드필더간의 유기적인 움직임만 이뤄진다면 가가와도 절대 마음 수 없는 존재는 아니다.

한 발 더 뛰어 가가와의 발을 묶어야 하는 이청용과 피해서 수비를 흔들어야 하는 가가와의 맞대결은 그래서 중요하다.

원톱으로 박주영(25·AS모나코)이 서는 가운데, 공수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청용(22·볼턴 원더러스), 기성용(21·셀틱), 윤빛가람(19·엔체스터 유나이티드), 조영철(21·알비렉스 니가타)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빛가람은 '캡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결장으로 주전 한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청용이 기존 오른쪽 윙어 자리를 고수하는 가운데, 조영철이 왼쪽을 맡는다. 조영철은 염기훈(27·수원)과 왼쪽 윙어 자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수비 부문에서는 조용형(27·알 라이얀)의 이동이 눈에 띈다. 조용형은 그간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이정수(30·알 사드)와 호흡을 맞춰왔으나, 이번 한일전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직을 변경할 것이 유력하다.

◇한국-일본 친선경기 예상 선발 라인업

조용형의 빈 자리에는 신예 김영권(20·FC도쿄)이 포진해 이정수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나, 이천부터 수비진에서 활약해온 곽태휘(29·교토상가)의 출전도 고려해볼만 하다.

측면에는 차두리(30·셀틱), 이영표(33·알 힐랄)가, 골키퍼에는 정성룡(25·성남)이 한일전 선발로 나설 전망이다.

조 감독은 일본-아르헨티나전을 관전하고 온 뒤 포백을 고집하지 않고 스리백도 혼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경우 이란전에서 한 차례 선을 보였던 3-4-2-1 전형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박주영을 원톱으로 한 가운데 윤빛가람과 이청용이 2선에 배치되는 형태로 변화가 가능하다.

뉴시스

이청용

대한민국 (4-1-4-1)

〈전남일보 2010년 10월 12일자 16면〉

▲ 2011 - 1015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주 문〉

중도일보 2011년 1월 17일자 14면 「나상욱, 소니 오픈 2R 12위」제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중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나상욱의 스윙 장면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게재했는데, 이 사진은 뉴시스가 지난 해 5월 21일 自社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진기사다. 따라서 위 적시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이다.

그런데도 중도일보는 사진 설명이나 〈자료사진〉 등의 표현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트리밍과 일부 배경 삭제 등의 기술을 통해 사진의 배경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형하였고, 사진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함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제10조 「편집지침」 ⑥항(관계 사진 게재) · ⑦항(사진 조작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상욱, 소니오픈 2R 12위

앤서니김·위창수 컷통과… '맏형' 최경주는 고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두 번째 대회 '소니오픈'에 출전중인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사진)과 앤서니 김(25·나이키),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가 3라운드에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믿었던 '맏형' 최경주(41·SK텔레콤)와 미국무대 데뷔전을 가진 '루키' 강성훈과 김비오는 컷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나상욱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7068야드)에서 계속된 대회 2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중간 합계 6언더파 134타로 공동 12위에 오르는 선절을 펼쳤다.

첫 날 3언더파로 공동 13위에 올랐던 나상욱은 이날 예리한 퍼팅 감각을 앞세워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4개를 잡아내며 3타를 줄여 순위를 조금 끌어올렸다.

10언더파 130타로 공동 선두에 나선 마루야마 시케키(일본)와 스튜어트 애플비(호주)와는 4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3, 4라운드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최종일 경기에서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앤서니 김도 이날 6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중간 합계 5언더파 135타로 어니 엘스(남아공) 등 12명과 공동 20위 그룹을 형성해 선두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버디 7개에 더블보기 1개, 보기 3개를 골들이며 2타를 줄인 위창수는 중간 합계 4언더파 136타로 공동 32위에 올랐다.

하지만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최경주와 '루키' 강성훈, 김비오는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내지 못하는 바람에 컷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김비오는 중간 합계 2오버파 142타, 강성훈은 3오버파 143타를 치는 부진을 보였다.

특히 컨디션 난조를 보인 최경주는 이날만 4타를 잃어 중간 합계 4오버파 144타를 적어내며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폭우로 1라운드가 예정된 날짜에 열리지 못하고 순연되는 바람에 대회 조직위원회는 3,4라운드에 진출하는 선수를 공동 43위까지 줄였다. 이에 따라 3언더파 137타가 컷 기준이 됐다. 2언더파 138타를 친 27명은 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3라운드에 못 나가는 MDF 규정을 적용했다. (노컷뉴스)

〈중도일보 2010년 9월 17일자 14면〉

▲ 2011 - 108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2.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3.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4. 大邱日報 발행인 이 태 열
5. 중부매일 발행인 박 성 규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1년 2월 24일자 18면 「이승엽 '복수혈전' 日언론 달궜다」 제하 기사의 사진, 충청투데이 2월 24일자 14면 「이승엽 한방에 日언론 '들썩'」 제하 기사의 사진, 中都日報 3월 1일자 12면 「나탈리 포트만, 블랙스완으로 '일석삼조'/약혼 · 임신 · 수상까지 "와우"」 제하 기사의 사진, 大邱日報 3월 2일자 19면 「첫안타 추신수 "출발 좋은데"」 제하 기사의 사진, 중부매일 3월 17일자 16면 「골! 골!… 맨유 챔스 8강행/치차리토 2골 마르세유 2:1로 꺾어」 제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5개 신문의 적시 기사 사진들은 각각 교도=연합뉴스, AP=뉴시스, AP=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기사들을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상기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게다가 사진의 배경을 삭제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 인물만 부각시키는 편집작업을 한 채, 사진설명도 붙이지 않아 마치 스트레이트 뉴스 사진이 아닌 이미지 사진을 사용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제10조 「편집지침」 ⑦항(사진 조작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승엽 '복수혈전' 日언론 달궜다

요미우리 상대 대형 3점 쏘아…"120m짜리 대포였다" 홈런 묘사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 새롭게 둥지를 튼 이승엽(35·사진)이 '진짜'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상대로 대형 홈런을 때리자 일본 언론도 앞다퉈 큰 관심을 보였다.

이승엽은 22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요미우리와 연습경기에서 3회 대형 3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경기 후 "요미우리는 5년간 추억을 함께했던 좋은 팀이니 지금부터는 적"이라면서 자신을 내보낸 요미우리에 얽힌 묘한 감정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자 일본 스포츠전문지인 스포츠니폰, 산케이스포츠 등은 이승엽이 홈런을 치는 사진과 함께 경기 내용 등을 크게 소개했다.

특히 일본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스포츠의 프로야구 코너는 23일 이승엽의 기사를 초기 화면에 내 걸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스포츠니폰도 인터넷판에서 '이승엽 120m짜리 홈런! 요미우리로부터 이적 1호'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다뤘다.

스포츠니폰은 '이승엽이 한가운데 낮게 들어온 시속 141km짜리 직구를 풀스윙으로 때렸다. 오른쪽 관중석에 꽂힌 회심의 120m짜리 대포였다'라고 홈런을 묘사했다.

또 경기 전 이승엽이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을 찾아가 인사한 내용과 이승엽이 방망이의 무게를 줄여 920g짜리를 쓴다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윙만큼은 완벽했다.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내용과 과정에 집중하고싶다. 개막전에서도 홈런을 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승엽의 소감도 덧붙였다.

또 산케이스포츠, 니칸스포츠 등 다른 언론도 이승엽의 홈런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번 시즌 이승엽의 활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승엽은 19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를 시작으로 스프링캠프에서 연습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22일 세 경기 만에 첫 홈런포를 날리면서 이번 시즌 목표인 30홈런과 100타점을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뉴

〈경북도민일보 2011년 2월 24일자 18면〉

첫안타 추신수 "출발 좋은데"

신시내티와 시범경기서 안타·타점 1개씩 기록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주춤했던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범경기에 처음 출전해 안타와 타점을 1개씩 올렸다.

추신수는 1일(한국시간) 애리조나 주 굿이어의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나와 3타수 1안타를 때렸다.

왼쪽 팔꿈치 관절 바깥쪽 부분에 통증을 호소, 심전 출격을 미뤘던 추신수는 상태가 호전되면서 타격예민 전념하는 지명타자로 첫선을 보였다.

1회 유격수 든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1-0으로 앞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해결사다운 타격을 뽐냈다.

2사 1, 2루에서 좌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적시타를 날렸고 2루 주자 루이스 발부에나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5회에는 3루수 든공으로 잡혔고 6회 대타로 교체돼 벤치로 들어왔다.

클리블랜드는 장단 12안타를 몰아쳐 12-0으로 이겼다.

한편, 로스엔젤레스 에인절스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2세 최현(미국명 행크 콩가)은 오클랜드와 시범경기에서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지만 삼진 1개 포함,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뉴스

〈대구일보 2010년 3월 2일자 19면〉

사생활 보호

1. 공인의 사생활 보호

-직접 관련 없는 가족 신상 밝혀

▲ 2010 - 1161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0년 7월 21일자 5면 「강용석은 누구/사시합격 후 판사되려 했지만 교도소 수감된 아버지탓 좌절/고3때 장학퀴즈 나가 '장원'/참여연대서 '소액주주운동'」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엘리트다.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엘리트 변호사를 거쳐 39세에 국회의원에 올랐지만 설화(舌禍)로 인해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

시원한 외모와는 달리 강 의원의 성장기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가 살던 집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공동화장실을 쓰는 주택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교도소를 밥 먹듯 들락거렸다. 경기고 3학년 때 MBC '장학퀴즈'에 나가 장원을 했고, 그때 받은 장학금으로 서울대 법대에 등록했다. 대학 3학년이던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예편한 뒤 판사가 되고자 했으나 우수한 사법연수원 성적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목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아버지가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시련은 강 의원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그는 2001년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학생공동대표를 지내고 지적재산권과 정보기술(IT) 전문 변호사로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약자들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998년부터 5년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집행위원을 맡으면서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2001년에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가 삼성전자 상무보로 임명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000년에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소액주주 소송 전문로펌'을 만들어 대우전자 분식회계,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관련 소송을 통해 소액주주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 1998년 지리산 수해로 야영객 30여 명이 사망하자 스스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변론을 맡았고 결국 국가배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번 '성희롱 발언 의혹' 사건 외에 과거에도 부적절한 언급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2008년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 '한나라 칼럼' 코너에 '섹시한 박근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희롱 논란을 빚었던 것이다. 당시 그는 "나뿐 아니라 많은 유부남들이 박근혜의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성장과정과 경력 및 활동 등을 소개한 기사다.

기사는 강 의원의 어려웠던 성장기 가정환경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는 교도소를 밥 먹듯 들락거렸다" "판사가 되고자 했으나 우수한 사법연수원 성적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목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아버지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강 의원 아버지가 당시 어떤 처지에 있었든, 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썼다.

큰 제목도 아버지 쪽에 초점을 맞춰 「사시합격 후 판사되려 했지만 교도소 수감된 아버지 탓 좌절」이라고 달았다.

기록에는 강 의원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전과 사실 등 성장과정을 밝힌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더라도 강 의원이 벼랑 끝 어려운 지경에 놓인 상황에서 강 의원 아버지의 좋지 않은 과거사를 기사로 쓰려 한다면 당사자인 아버지 본인을 직접 접촉하거나, 적어도 강의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위 기사에는 그러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위 기사와 제목은 성희롱 발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강 의원 아버지의 불행했던 과거를 본인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항(개인의 명예 · 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8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주 문〉

스포츠조선 2010년 8월 28일자 23면「'국민동생' 왕석현 소송 공방… 부모 엇갈린 주장/"만나지도 못하게 해" VS "아빠가 왜 이러는지"」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동생' 왕석현의 소송건을 둘러싸고 온라인이 뜨겁다. 아버지 왕모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한 것과 관련, '한국판 맥컬리 컬킨'을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다. 영화 '나홀로 집에'의 주인공이었던 컬킨은 1990년대 최고의 할리우드 아역 스타로 주목받았지만 매니저 역할을 하던 부모의 갈등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다. 컬킨의 부모는 결별 뒤 아들의 재산과 양육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결국 1996년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당시 사춘기 소

년이었던 컬킨은 부모의 2년간의 법정 싸움을 보며 우울증에 빠져 연기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천진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왕석현의 이후 활동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아버지 왕모씨와 어머니 구모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특히 지금껏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왕모씨가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버지 왕씨 "석현이 매장시키는 것 같아 지금까지 미뤘다"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는 왕석현의 아버지와 어렵게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취재진의 갑작스런 전화에 당황한 목소리가 역력했던 왕씨는 "소송 기사가 나온 것을 봤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질문에 "남들은 내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동안 석현이 엄마하고 소속사에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계속 거부를 하더라. 석현이 엄마는 석현이 위주로 모든 것을 진행해 우리 가정은 이미 깨져버렸다"며 "난 돈보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한지 1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석현이를 매장시키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미뤘다.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난 6월 석현이 엄마하고 석현이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 구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인정했다. "솔직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지난 7월에는 석현이를 보기 위해 뮤지컬 공연장을 찾았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말했다.

왕씨는 "애가 뜨니까 계약을 무효로 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사도 감내를 할 것이다. 난 엉망이 되어 버린 가정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 것이다"고 다시 한번 힘줘 말했다.

◆어머니 구씨 "석현 아빠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일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다는 왕석현의 어머니 구모씨는 "남편이 소송을 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

다. 구씨는 “석현 아빠도 소속사와 계약 맺고 활동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을 빼놓았다며 소송을 걸다니,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0여 년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석현 아빠와는 최근 대화를 안 하는 상태였다”라며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석현 아빠가 나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괜히 상처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에 대해선 “돈 문제는 절대 아니다. 아역은 성인과는 수입의 차원이 다르다. 문제가 있다면 어른들끼리의 개인적인 것이지, 아이의 수입 때문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구씨는 “일이 커질수록 석현이가 걱정 된다”며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 인터넷 검색도 잘 안 한다. 지금은 뮤지컬을 끝내고 영화를 준비중인데, 곧 개학하면 학교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된다”며 아들을 염려했다. 그리고 “어른들끼리 이렇게 해서 석현이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남편과 얘기해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속사 “부모간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랄 뿐”

왕석현 소속사인 다즐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최근 왕석현 아버지로부터 계약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계약서를 확인시켰다”며 “전속 계약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 일은 소속사와는 무관하며,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강남 D초등학교 1학년인 석현인 학교생활을 좋아한다. 최근 영어 공부에도 흥미를 보이며, 친구들과 다시 만날 개학일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 석현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역스타 왕석현의 아버지가 왕석현의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와 어머니 구 모 씨,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를 접촉해 소송제기 경위와 가정상황 등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왕석현의 아버지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소송제기는 돈 때문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어머니 구 씨도 “문제가 있다면 어른들끼리의 개인적인 것이지, 아이의 수입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기사에서 왕석현의 부모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두 사람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가정생활은 유지하고 있고, 소속사 관계자가 “이번 일은 소속사와는 무관하며,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번 제소 건은 부부간 갈등이 배경이고 이유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도 이들 부부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위 기사는 이들 부부간 사적인 문제를 대서특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왕석현이 아역스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이 지향하는 공익적, 교육적 목적과는 상관없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왕석현 문제를 부모의 이혼에다 연기활동 중단이라는 불행을 겪은 영화 ‘나홀로 집에’ 주인공 맥컬리 컬킨과 연결시킨 것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확대해석이자 과잉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왕석현이 이번 일로 받을 충격과 상처를 감안해 스포츠조선은 취재와 보도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 및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예인 등 사생활 세세하게 소개

▲ 2010 - 1121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자 료〉

스포츠조선 2010년 4월 21일자 26~27면 「웨딩마치 D-11 장동건-고소영 신혼집은 지금?/'장-고 커플 신혼집' 현장 속으로…」 제하의 기사와 사진, 5월 4일자 「3천만원대 '공항패션'/1월보다 살 찐 고소영 완벽 코디…명품 퍼레이드 눈길」 제하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웨딩마치 D-11 장동건-고소영 신혼집은 지금?〉=『(전략) 장동건-고소영 예비부부의 신혼집은 한강대교와 국립현충원 사이에 자리 잡은 국내 최고급 빌라다.

멀리서도 한 눈에 탁 들어오는 10층짜리 빌라의 첫인상은 성(城)이다. 언덕 위에 홀로 우뚝 솟아 있는 이 빌라는 건물 자체가 회색 옹벽처럼 보였다.

빌라에 도착하자 성이란 느낌이 더욱 강하게 와 닿았다. 마치 단단한 성문이 내려진 것처럼 두꺼운 주차장 철문으로 봉쇄돼 있었다. 모든 출입이 주차장을 통해 이뤄지는 이 빌라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중략)

장동건은 지난해 8월 가수 최성수 부부의 소개로 이곳을 구입했다. 장동건은 로열층이라 할 수 있는 8층에 입주했다. 394.67㎡(120평) 넓이로 방 4개, 화장실 3개에 원룸 스타일의 넓은 거실이 있다. 3.3㎡당 분양가는 3000만원선으로 전체 분양가가 30억원이 넘는다. 장동건이 구입한 후 채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40억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흑석동 일대가

재개발 되면 더욱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전문가는 50억원대를 예상했다. 신혼집으로 구입했지만 재테크에도 확실히 성공한 셈이다.(하략)』

〈3천만원대 '공항패션'〉=『(전략) 3일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난 고소영은 임신 4개월째라서인지 얌전한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그러나 가격대는 1000만원에 육박했던 지난 1월을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절로 '억' 소리가 나오게 했다.

상세 품목을 살펴보면, 일단 고소영의 임신 4개월 몸매를 가려준 회색 재킷은 발망 제품(약 550만원)이다. 어깨선을 강조한 컷이 인상적이다. 지난번 선보였던 이자벨 마랑의 레오퍼드 패턴 퍼 코트(약 500만원)에 버금가는 고가품이다. 골반선을 살짝 넘는 길이로 배를 가린 감각이 돋보인다.(중략)

장동건 역시 고소영 못지않은 명품패션을 선보여 '부창부수'를 과시했다. 손에 루이비통 여권 케이스를 꼭 쥔 그는 랑방 재킷에 호랑이 프린팅이 들어간 이너, 편안한 세븐진 청바지와 스니커즈를 매치해 캐주얼한 패션을 완성했다. 독특한 호랑이 프린팅 티셔츠는 명품 멀티샵 무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바지는 세븐진 브랜드(40만원대).(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스타커플 장동건과 고소영이 결혼하기 전인 4월 21일자 위 기사에서 이들의 신혼 보금자리인 흑석동 '마크힐스 빌라'와 주변 환경에 대해 2개면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소제목으로 빌라의 위치와 가는 길, 가격 등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이들 커플의 집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점선으로 표시한 빌라 대형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스포츠조선 5월 4일자 기사는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난 이들 커플의 모습을 기사와 사진으로 전하면서 이들이 걸친 명품 의상과 가방, 신발, 선글라스 등의 브랜드와 가격을 일일이 소개했다.

두 사람 모두 대중들의 관심이 큰 공인인 만큼 일정 수준의 사생활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집 위치와 주변 환경, 신혼여행길 차림새까지 시시콜콜 노출시킨 것은 독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0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주 문〉

일간스포츠 2010년 10월 11일자 31면 「고소영, 1200만 원대 럭셔리 산후조리/수입 생수 · 천연 대리석 화장실 · 리무진 등 2주간 초특급 서비스」· 10월 12일자 「아빠 장동건 '007 가족사랑 경호작전'」 제하의 기사, 스포츠조선 10월 12일자 31면 「장동건-고소영 커플 산후조리원 입원 '007 작전'」·「고소영 산후조리원 가보니…/내부 대리석…2주에 1200만 원/가족도 면회 제한 '철저한 보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와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 **〈고소영, 1200만 원대 럭셔리 산후조리〉**=『톱스타 고소영이 초특급 산후 조리원으로 옮겨 본격적인 몸조리에 들어간다.

고소영의 최측근은 "고소영이 이번 주부터 강남 D조리원에서 아들과 함께 지낸다"면서 "서울 삼성병원은 산후조리시설이 따로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소영이 선택한 D산후조리원은 엄마들 사이에서 이미 최고급 조리원으로 입소문이 난 곳.

그녀가 묵게 될 VVIP룸은 2주에 1200만 원짜리 방으로 아기를 낳은 뒤 지쳐있는 산모의 피부에 생기를 돌려줄 에스테틱 클리닉과 개인 비서 서비스가 기본이다.

병원에서 조리원까지, 조리원에서 집까지 산모와 아기가 이동할 때 최고급 리무진 벤틀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곳만의 특화된 서비스.

보통 강남의 산후조리원이 2주에 300만 원대임을 고려하면 4배나 비싼 가격이다.(중략)

또 천연 대리석으로 된 화장실을 비롯해 산모를 위한 킹사이즈 침대 등 세심한 배려도 장-고 커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측근들의 귀띔이다.

특히 고소영은 신생아 2명당 1명꼴로 산후 도우미가 상주할 뿐 아니라 매일 소아과 의사가 회진, 아기 관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모와 신생아 관련 용품을 모두 유기농 제품만 사용, '까다로운 소영씨'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후문이다.(하략)』

〈아빠 장동건 '007 가족사랑 경호작전'〉=『아들을 품에 안은 장동건(38) · 고소영(38) 커플이 '007작전' 속에 11일 오후 서울 강남의 D산후조리원(11일자 본지 단독 보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지에 단독으로 포착된 장동건은 갓난 아들과 고소영을 살뜰히 챙기며 지극한 부정을 드러냈다.

장동건 가족이 산후조리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진청색 인피니티 차량으로 이동한 이들은 철통 보안 속에 주차장에 들어섰다. 모자를 눌러 쓴 장동건은 조수석에서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몸을 숙여 아들을 정성스레 받아든 그는 아직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산모 고소영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우며 남편의 역할에 충실했다. 차에서 내린 장-고 커플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걸음을 옮겼다.

이날 장동건 일행은 철두철미한 사전 계획 속에 움직였다. 산후조리원과 사전 교감이 된 듯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져 외부 접근을

통제했다. '2주에 1200만 원이나 하는 D산후조리원 VVIP룸에서 고소영이 몸조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본지의 보도 후 취재진이 몰려들자 장-고 커플은 철저한 '입성' 계획을 세운 것. 건물 관리인은 장-고 커플 출현 2시간 전부터 '이들이 새벽에 등장 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 일부 취재진을 따돌리기도 했다.(하략)』

(스포츠조선) 〈장동건-고소영 커플 산후조리원 입원 '007 작전'〉=『장동건-고소영 커플이 007작전을 펼치며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 4일 득남한 장동건-고소영 커플은 1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에 입원했다. 이들은 창문이 짙게 썬팅된 검은색 인피니티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운전대는 고소영의 매니저가 잡았다.

차량이 산후조리원 주차장으로 들어섬과 동시에 셔터가 내려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고, 조리원 관계자들도 몸으로 사진 촬영을 막아섰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장동건이 먼저 차량의 뒷좌석에서 내려 고소영과 아이가 내리는 것을 보살폈고, 이후 아기를 안은 고소영의 어깨를 감싸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하략)』

〈고소영 산후조리원 가보니…〉=『(전략) 3층부터 8층까지 자리 잡은 이 산후조리원은 입구부터 달랐다. 전구로 장식된 나무가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다. 내부도 조용한 분위기였다. 원목과 대리석으로 실내 인테리어가 꾸며졌으며 주황색 불빛으로 조명을 밝혀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3층 안내데스크에는 여자 종업원 한 명이 산모들의 컴플레인 해결과 상담 예약을 맡고 있었다. 안내데스크 옆에는 면회인이 앉을 수 있는 검은색 소파가 있었고 총 5개 조리실이 자리 잡고 있다. 같은 식으로 총 5층에 걸쳐 15개 조리실이 있다. 하나의 입원실 당 꽤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리원의 가격은 최저 2주에 400만 원선. 하지만 고소영이 선택한 병실은 대략 1200만 원대로 알려졌다. 고가의 가격이지만 각각의 방 안에 개인 화장실이 딸려있으며 내부도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다. 럭셔리 몸조리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셈이다. 최근엔 조PD, 정혜영 등이 이 조리원을 거치기도 했다.

이 산후조리원이 고소영의 간택을 받은 이유는 뭘까? 아주 특별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철저한 보안성에 있다. 현재 이 조리원은 외부인 혹은 지인은 물론, 가족들의 면회조차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와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득남을 한 톱스타 고소영이 서울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크게 보도했다.

일간스포츠는 10월 11일자에 「고소영, 1200만 원대 럭셔리 산후조리」라는 큰 제목 아래 산후조리원의 호화 시설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고, 10월 12일자에는 고소영과 남편 장동건이 갓난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도착하는 모습을 다룬 기사를 사진 3장과 함께 실었다.

일간스포츠보다 하루 늦은 10월 12일자에 이 소식을 다룬 스포츠조선은 「장동건-고소영 커플 산후조리원 입원 '007 작전'」이라는 제목의 스케치 기사와 더불어 산후조리원을 소개한 기사를 큼지막한 건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두 사람 모두 대중들의 관심이 큰 공인인 만큼 일정 수준의 사생활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의 화장실이 천연대리석으로 꾸며졌고 침대가 킹사이즈라는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노출시킨 것은 독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31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0년 11월 3일자 1면 「(본지 단독) 배다해 · 빽가 1년째 공개 데이트」 제목, 2면 「앨범 작업 함께 하며 연인으로/배다해 일본 촬영 빽가도 동행」 기사와 제목, 11월 6일자 1면 「(본지 단독) 열애 부인하던 배다해, 빽가와 동반 일본 출국」 제목, 27면 「배다해 · 빽가, 열애 질문엔 침묵/일본서 케이블TV 촬영… 출연자 · 스타일리스트로 동행」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월 3일자〉=『또 한 쌍의 가수 커플이 탄생했다.

여성 4인조 바닐라루시의 배다해(27)와 코요태의 빽가(백성현 · 29)가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지인의 모임에 우연히 동석하면서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들은 친분을 유지해오다가 1년 전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둘 사이에 핑크빛 무드가 조성된 건 빽가가 바닐라루시의 정규 1집 '바닐라쉐이크(Vanilla Shake)'의 작업에 참여하면서부터다. 현재 포토그래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빽가는 바닐라루시의 앨범 재킷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말 1집에 수록된 '프렌치 러브'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다.

이 커플은 그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 연인처럼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자의 지인들에게 연인 사이임을 서슴지 않고 공개하기도 했다. 배다해의 측근은 "합창단 연습을 할 때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렸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가수라고만 말했는데 알고 보니 빽가였다"고 전했다.

빽가의 지인 역시 "배다해와 앨범 작업을 하면서 더욱 각별한 사이로 발전

했다고 들었다. 두 사람 모두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자주 데이트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방송가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빽가는 여자친구인 배다해를 위해 바닐라루시의 스타일리스트 역할도 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달 배다해가 촬영한 패션지 화보에서 스타일리스트로 참여했다.

또 배다해, 바닐라루시의 멤버 혜라와 함께 5일부터 12일까지 일본에서 진행하는 올리브채널 '잇 시티-일본에서 놀자' 촬영에도 스타일리스트의 자격으로 동행한다. 패션계의 한 관계자는 "배다해 측에서 스타일리스트로 빽가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고 귀띔했다.(하략)』

〈11월 6일자〉=『'깜짝' 열애의 주인공 바닐라루시의 배다해(27)와 코요태의 빽가(29)가 일본으로 동반 출국했다.

두 사람은 5일부터 12일까지 일본에서 진행하는 올리브채널 '잇 시티-일본에서 놀자' 촬영을 위해 5일 오전 인천공항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배다해와 바닐라루시의 멤버 혜라는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빽가는 스타일리스트 자격으로 동행했다.

이날 두 사람의 모습을 포착한 한 방송국 관계자는 "배다해와 빽가가 5일 오전 7시 30분 인천공항에 함께 나타났다. 하지만 이내 곧 남들 눈을 의식했는지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둘 다 후드티를 입고 선글라스나 목도리를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열애에 관한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배다해와 빽가는 지난 2일 본지의 단독 보도로 열애 사실이 전해졌다. 배다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아놔 ㅠ 간만에 푹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참… 이제 어디 가서 친하다느니 존경한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겠군. 아 진짜 어색해서 일 어떻게 하라고'라고 글을 남겼다. 빽가 역시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 때문에 거의 매일 보는 사이는 맞다. 하지만 연인은 아니다"고 열애설을 부인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11월 3일자 초판(11월 2일자 오후 가판) 기사에 여성 4인조 바닐라루시의 배다해와 코요태의 빽가가 연인관계라고 단독 보도했고, 이에 두 사람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지만 이를 기사에 반영치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배달판까지 초판 내용 그대로 보도했다.

배다해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간만에 푹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참… 이제 어디 가서 친하다느니 존경한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겠군. 아, 진짜 어색해서 일 어떻게 하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고, 빽가도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 때문에 거의 매일 보는 사이이지만 연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 온 · 오프라인 매체들은 11월 2일 오후나 3일 오전에 「배다해 "빽가와 열애?" 발끈」, 「배다해, "자고나니 열애설, 참…"」 등 제목으로 두 사람이 열애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일간스포츠는 그러나 사흘 후인 11월 6일자 1면 제호 위쪽에 「(본지 단독) 열애 부인하던 배다해, 빽가와 동반 일본 출국」이라는 큰 제목과 함께 27면 연예 면에는 두 사람이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사진 2장과 함께 실었다.

11월 6일자 기사에는 두 사람이 열애설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반영했지만 1면 제목 「열애 부인하던 배다해, 빽가와 동반 일본 출국」만 놓고 보면 '일본에 함께 갈 정도로 가깝다'는 뉘앙스가 강하고, 27면 기사에서도 취재기자는 〈'깜짝' 열애설의 주인공〉 〈지난 2일 본지의 단독보도로 열애 사실이 전해졌다〉 등 표현으로 연인관계를 기정사실화했다.

두 사람의 일본행은 위 11월 3일자 기사에서도 소개됐듯이 올리브채널 프로 그램 '잇 시티-일본에서 놀자' 촬영을 위한 것으로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다.

배다해는 KBS '남자의 자격' 출연으로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빽가는 지난 1월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재기에 나선 상태이다.

이런 처지의 두 사람에게 열애설이 앞으로 연예활동에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 기사와 제목처럼 본인들의 부인에도 아랑곳없이 이를 시인하

라고 윽박지르듯이 몰아붙이는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58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주 문〉

스포츠조선 2010년 11월 18일자 31면 「욘사마 '50억 성북동 보금자리' 마련/日 대사관저 '앞집'…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이웃/내년 초 입주 공사 한창…'신혼집 장만설'은 일축」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욘사마' 배용준이 거주 중인 서울 삼성동 빌라를 뒤로 하고 성북동의 한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긴다. 배용준이 생애 최초로 구입한 이 주택은 부촌으로 유명한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가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을 풍겼다. 스포츠조선이 직접 찾아간 배용준의 새 집은 내년 초 입주할 주인을 맞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었다.

배용준의 성북동 새 집은 주택가 중에서도 대사관저가 모여 있는 외진 곳이었다. 배용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본 대사관저를 마주보고 있었고, 이라크 대사관저와도 인접했다.

하얀 외벽이 특징인 2층짜리 집은 한 눈에 보기에도 근처에 있는 주변 집보다 크기가 컸다. 외벽을 제외한 내부는 모두 허물어 '전면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배용준의 새 주택은 대지 760m^2(약 230평) 규모로, 시세는 약 5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소문난 부촌인 만큼 주변 이웃들도 화려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자택 및 현대그룹 영빈관이 근처에 위치해 있고, 차로 5분 거리에 삼성 일가의 주택도 있다.

성북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배용준이 구매한 주택의 전 주인 역시 유명인사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 문화시설의 전 대표였다"며 "이웃 중 유명한 사람을 묻는다면 셀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속사인 키이스트 관계자는 "결혼을 위해 집을 장만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말도 안된다"고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사실 성북동은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다. 재벌 1세대 및 중견 기업인들이 20~30년간 내리 살아온 전통 부촌으로, 이웃들 역시 연예인의 입주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편이다. 실제 큰 인기를 등에 업고 성북동으로 이사 왔던 연기자 A는 얼마 가지 않아 흥행에 연달아 참패하며 주거지를 옮겼고, 방송인 B 역시 이사 후 정을 붙이지 못한 상태에서 부상까지 입어 곧장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기 탤런트 배용준이 서울 성북동에 시가 50억 원 가량의 고급 주택을 장만했다고 크게 보도했다.

기사는 배용준의 새 집이 있는 동네가 재벌 1세대 및 중견 기업인이 20 · 30년간 내리 살아온 전통적 부촌이라고 상세히 소개하면서 새 집 사진과 함께 주변 주요건물 위치까지 자세히 표시한 약도도 함께 게재했다.

배용준이 대중들의 관심이 큰 공인인 만큼 일정 수준의 사생활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주거지 위치까지 낱낱이 노출시킨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66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1년 3월 2일자 27면 「정준호도 속도위반… 9월 아빠된다/이하정 아나운서 임신 2개월 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는 3월 25일 W호텔에서 전격 결혼하는 정준호와 이하정 아나운서가 속도위반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준호 측근은 1일 "이하정 아나운서가 임신 2개월째다. 임신 초기라서 이 아나운서가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나운서라는 직업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정준호 역시 최측근에게만 알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30일 MBC '6시 뉴스매거진'의 '이하정이 만난 사람'에 출연하게 된 것이 인연이 돼 이 아나운서와 만남을 갖기 시작한 정준호는 만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와 믿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하정 아나운서는 지난달 19일 정준호와 사랑의 오작교가 된 '6시 뉴스매거진'에서 잠정 하차를 결정, 일찌감치 태교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다.

MBC 측은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여 푹 쉬라고 했다"며 "복귀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정준호와 이하정 아나운서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시가 30억 원 상당의 UN빌리지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3월 2일자 초판(3월 1일 가판) 기사에 '3월 25일 톱스타 정준호와 결혼하는 이하정 MBC 아나운서가 임신 2개월 째'라고 단독 보도했다.

기사는 "이하정 아나운서가 임신 2개월째다. 임신 초기라서 이 아나운서가 매우 조심하고 있다"는 정준호 측근의 말을 소개하고 〈이하정 아나운서는 지난달 19일 정준호와 사랑의 오작교가 된 '6시 뉴스매거진'에서 잠정 하차를 결정, 일찌감치 태교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에 따라 기사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정준호도 속도위반…9월 아빠된다」, 「이하정 아나운서 임신 2개월 째」라고 달았다.

이에 정준호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고, MBC 아나운서국도 "결혼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병가를 낸 것일 뿐 임신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상당수 온 · 오프라인 매체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일간스포츠는 이를 기사에 반영하지 않은 채 3월 2일 배달판까지 초판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

혼전 임신 기사는 자칫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부인한다는 사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를 시인하라고 몰아붙이는 듯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 및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